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우수사례집

2019. 4.



주민이 주인되는
공공서비스
주인공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우수사례집

Contents

융합

01 젊은 도시 광산의 힘! 마을공동체 복원과 주민자치를 위해 쏟다 _ 광주시 광산구 05

02 "찾아가는 복지, 함께 만드는 자치" 동네방네 행복도시 금천의 이야기 _서울시 금천구 21

03 '사람중심, 마을중심' 반송동의 건강한 행복 전략 3H (Happy, Healthy, Heaundae) _부산시 해운대구 35

04 안동의 주민자치력, 주민이 주인 되고 스스로 행복한 터전을 만드는 힘! _ 경상북도 안동시 43

05 주민자치형 지역 서비스로 소외 없는 복지천국을 만들다! _ 경상남도 창녕군 53

자치

06 군민이 주인 되어 함께 만드는 '행복창조도시' 홍천! _ 강원도 홍천군 65

07 '역량강화→자치활성화→사업확대' 복지와 자치의 담양형 선순환 구조 _전라남도 담양군 73

08 '행복한 변화, 살고 싶은 당진' 그 비결은 주민 스스로의 힘! _충청남도 당진시 83

09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시민주권특별자치시에서 실현합니다 _세종시 93

10 주민자치의 불모지에서 선도 도시로! 성숙한 생활자치를 실천하다 _광주시 서구 105

복지

11 군"시민참여가 답이다" 10년 노력 끝에 완성한 시민행복 복지플랫폼_경기도 남양주시 117

12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동행'하면 '소통'도 '돌봄'도 쉽습니다!_ 대전시 대덕구 127

13 '이웃 살핌'이 생활이 되고 '함께 나'눔이 축제가 되는 주민 주도 복지도시_부산시 사상구 141

14 '다함께 열어가는 으뜸도시 완주'가 복지도 앞서갑니다 _전라북도 완주군 153

15 주민이 주인공! 우리의 삶을 바꾸는 "온(溫) 동네를 부탁해"_ 서울시 마포구 163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우수사례집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01

젊은 도시 광산의 힘! 마을공동체 복원과 주민자치를 위해 쏟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민이 주인되는
공공서비스
주인공

01 젊은 도시 광산의 힘! 마을공동체 복원과 주민자치를 위해 쏟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공과 민간이 함께 하는 복지공동체 위해 행정 최일선인 '동'에서 혁신을 시작하다

광산구는 도농복합지역으로 21개 행정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남·소촌·소촌농공·평동산업단지 등 5개 산업단지에 1,600여개 업체가 입주하여 광주·전남권의 신흥도시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외국인 인구(전체 3%)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광산구의 지역특성

광산구민의 특징을 나타내는 한 마디는 '젊은 도시'이다. 주민의 평균나이가 36.4세(전국2위), 유소년 인구비율(18.3%)도 전국 3위이다. 때문에 노인인구비율은 전체인구의 8%로 낮은 편이다. 하지만 일부 농촌지역(임곡, 삼도, 본량)은 고령화정도가 심각하여 보건 및 복지서비스 확산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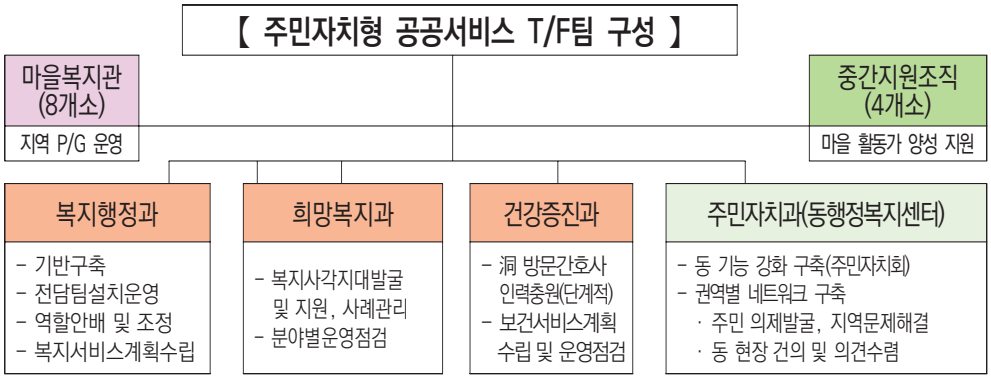
단편적으로, 우리나라의 공동체지수는 OECD 최하위 수준(2015년 36위)이다. 현실적으로 복지제도 및 재정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공공서비스가 수요자에게 분절적으로 전달돼 복지체감도도 매우 낮다.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구조의 변화, 가족해체 및 사회적 고립증가에 따른 적극적인 주민 욕구에의 대응도 요구된다.

이에 광산구는 주민 평균나이 전국 2위의 젊은 도시라는 특징을 복지행정 수행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공적자원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 연계 체계를 보완하면서 마을공동체의 복원을 실현해 왔다. 마을 안 공동체 회복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들의 참여가 절실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최일선 행정단위인 동 중심의 혁신을 이루어나갔다.

튼튼한 주민력으로 뿌리를 내리고, 자치형 공공서비스로 꽃을 피우면, 복지의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다

주민력의 뿌리를 튼튼하게!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의 기반을 닦다

광산구는 2015년 11월부터 구 단위에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TF팀을 구성하고, 각 동에서는 권역별 민관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관 거버넌스의 구축과 주민주도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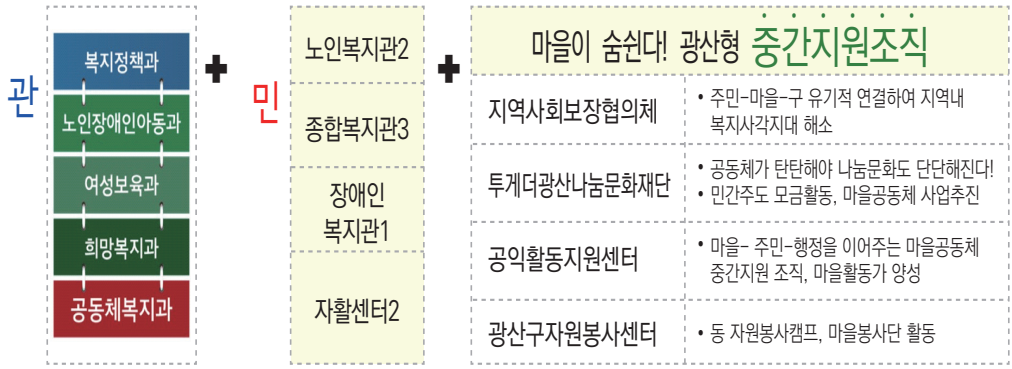


위해서였다. 이 과정에서 21개 동에 찾아가는 복지팀을 100% 설치하고 주관부서인 복지행정과, 희망복지과, 건강증진과, 주민자치과가 협력하여 맞춤형복지 실현, 민·관 협력체계 구축, 민간활동가 발굴 및 우수사례 확산을 고민하도록 하였다. 행정의 최일선인 동으로는 사업비 840만원과 전기자동차를 제공·지원하고 전담팀 역량강화 교육 또한 실시하였다.

-행정+복지+중간지원조직+마을: 행정이 바뀌면 마을이 숨을 쉰다

관의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안동과, 여성보육과, 희망복지과, 공동체복지과가 민의 노인복지관과 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자활센터와 협업을 시작하였다. 여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투게더광산나눔문화재단, 공익화동지원센터, 광산구자원봉사센터가 중간지원조직으로 행정기관과 민간인의 사이에서 연결하는 역할을 하였다. 말 그대로 '중간'이란 관(행정기관)과 민(민간인, 민원인)의 '사이'이다. 그간 관에서 지원했던 일들을 좀 더 현장에 맞게, 여러 기관들을 연계해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이후 연계와 연대는 행정과 복지가 구민들의 삶 곳곳으로 확산되는 기반이 되었다.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탄탄한 나눔문화가 확산되는 데도 기여했다.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마을활동가 양성도 원활히 이루어졌다.



-자원은 골고루, 복지는 촘촘히! 권역별 휴먼네트워크 구성의 성과

지역문제 해결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는 자원이 원활히 공유되어야 한다. 광산구는 21개동(5권역: 역사전통도시, 희망복지도시, 상생경제도시, 행복창조도시, 자연생태도시)과 협력기관을 연결하고 권역별 특징에 맞는 민관 네트워크를 구성하였다. 행정조직에서는 구의 방문간호사, 고용복지플러스상담센터, 광산구금융복지상담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중독관리센터, 우산건강생활지원센터 등이, 민간조직에서는 경찰서, 학교, 지역아동센터, 노인돌봄수행기관, 어린이집 등이 협력기반이 되었다. 행복나루·송광·하남·첨단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어등자활, 광산자활 6개 복지관도 네트워크로 묶였다. 이렇게 동별 자원이 중복되지 않고 고루 안배될 수 있게 되었다.

洞 권역별 민·관 네트워크				
역사전통도시	희망복지도시	상생경제도시	행복창조도시	자연생태도시
송정1동 송정2동 도산동 신흥동 어룡동	우 산동 월곡1동 월곡2동 운 남동 하 남동	첨단1동 비아동 첨단2동	수완동, 신가동 신창동	평 동 임곡동 동곡동 삼도동 본량동
【관협업기반】 구 방문간호사, 고용복지플러스상담센터, 광산구금융복지상담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중독관리센터, 우산건강생활지원센터 【민협업기반】 경찰서, 학교, 지역아동센터, 노인돌봄수행기관, 어린이집 등 【6개 복지관】 행복나루 · 송광 · 하남 · 첨단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어등자활, 광산자활				

⇔

민관협력 중간지원조직
•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 • 공익활동 지원센터 • 자원봉사센터

-주민의 힘을 키우는 삼박자! 마을리더양성+학습조직운영+공간혁신

각 동에서는 마을리더 양성과 학습조직 운영 그리고 공간혁신을 통해 주민력을 키우는 데 주력했다.

우선 마을리더 양성을 위해 마을등대지기 양성교육(연 2회, 공익활동지원센터)을 실시하였다. 교육은 중간지원조직을 활성화하여 민관의 연대망을 확고히 하고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탄탄히 하였다. 주민력, 자치력, 복지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었다. 마을리더들은 격월로 업무 협의를 하고 공모사업을 공유하며 마을장터도 운영하였다.



업무협의(격월)



공모사업공유



마을장터운영

다음으로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학습조직을 운영하였다. 찾아가는 민관할동가 실천교육이 총 16회 열렸고, 지역사회현장학습과 광산복지학당도 지속적으로 운영되었다.



업무협의(격월)



업무협의(격월)

공간혁신 과정은 주민주도로 마을에 활력을 집어넣는 사건이 되었다. 운남동에는 공유공간 '소담'이 송정 1동에는 주민카페 '마망'이 설치되었는데, 기획과 설계부터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되었다.

제5회 주민회의



주민센터 공유공간 마련(마을의제)
– 비혼모 가정의 사회진출
발판 마련

찬반투표



"송정1동주민센터가 공유공간을
제공할 것인가?"
찬성 63표, 반대 3표

카페 이름 짓기



'엄마'라는 뜻의
프랑스어 '마망' 선정

카페 오픈



동주민센터 유휴공간에 카페
'마망' 오픈

또한 광산구에서는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2014년부터 마을 대동회를 실시하였다. 동별로 100~250명의 주민대표가 참여하여 마을의제 884건을 처리하였다. 여기에 주민 2만 7,000여 명도 동참하였다. 6개 동에서는 동지사협 마을대동회 마을간사를 채용하여 주민공유와 주민총회의 실무를 보다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였다. 마을간사의 도움으로 주민들은 소통과 현안 해결에 집중할 수 있었다.

동 주민회의 추진위원회구성

마을의제 발굴, 주민회의 진행방식, 일정 등을 회의를 통해 결정

▶

마을의제 발굴

의제별 해결방안 및 쟁점사항을 검토, 토론하는 숙의과정을 거침

▶

더 좋은 자치공동체 주민회의 추진

연2회 (상·하반기)

마을의제 추진 및 처리지원

〈광 산 구〉
중앙, 시, 구 공모 연계 지원 및 예산 지원

〈공익활동지원센터〉
의제 추진에 필요한 교육과 컨설팅 제공

▶

마을의제 처리 피드백

다음 주민회의때 직전 마을의제 현황을 주민과 공유하는 환류 체계 마련



주민회의 문화공연



주민의제 선정 토론



우선순위 결정

-민·관 협력 기반 마련, '조례'가 빠질 수 없다

광산구는 민과 관의 협력 기반을 위해 조례를 만들고 고치는 일도 고민해 왔다. 2013년 1월 '광산구 나눔활동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작으로, 2017년에는 '광산구 금융복지상담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2018년 2월과 7월에는 '광산구 동복지허브화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광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개정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정비를 통해 현재 광산구의 민관협력 복지공동체가 구성·유지될 수 있었다.



광산구 민관협력 기반

함께 만들고 함께 나누고 함께 꽃피운, 주민 공공서비스의 활성화

-"우리 마을 복지계획은 우리 손으로" 주민 참여 의사결정과 문제해결이 실현되다

광산구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35명), 실무협의체(36명), 실무분과(128명),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831명)로 구성돼 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자체사업을 위해 1억 6,100만원이 지원되었다.

사 업 명	사업비(천원)	사 업 내 용	비 고
마을공통사업 안녕하세요?	63,000	21개동 안부살피기 공통사업	
마을대동회, 마을간사	20,000	주민회의를 통한 마을 문제 해결	
광산 복지학당	6,000	복지현안문제 토론 및 학습	
제4기 지역사회보장 계획수립	50,000	제4기 지역사회보장 계획수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10,000	동지사협 위원 소통, 화합한마당	
동지사협 학습 여행	2,000	우수지역 학습여행	
민관사회복지 화합한마당 동심동심	10,000	사회복지 종사자 배움여행	
7건	161,000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는 21개동에서 831명의 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마을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도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각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의 발굴과 체계적 관리를 지원한다. 사업을 위한 재원은 매월 동별 정기 CMS 모금(투게더광산나눔문화재단 연계)으로 마련되었다.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일반적인 절차는 의제가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정기회의에서 발굴되면, 마을계획으로 수립되고, 투게더나눔문화재단에서 사업의 공모와 지역자원연계를 담당한다.

인원	공무원	종교인	교사	의료인	복지기관 종사자	자영업자	부녀회장 통장	사회단체 회원	기타 (지역주민)
831	51	17	18	19	91	179	143	197	114

그간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진행한 마을 특화사업은 총 387건으로 3억 3,054만원이 소요되었으며, 2,676명의 나눔회원이 참여하였다.

읍 면 동	나눔회원	사 업 명	사 업 비	비 고
계	2,676	387건	330,542	
송정1동	68	복 듬뿍, 사랑 듬뿍사업, 사랑愛 희망 나눔 떡국	10,172	
송정2동	99	행복동네 송정2동 사랑의 반찬 나눔	9,280	
도 산 동	58	명절저소득 돌봄이웃 지원, 사랑의 반찬배달	8,956	
신 흥 동	68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북카페 '이숲' , 요구르트 배달	5,411	
어 룡 동	87	명절맞이 오색마을지원사업, 지역아동센터지원	5,058	
우 산 동	102	황금빛 내 공부방 지원, 꽃피는 우산마을 사업	16,437	
월곡1동	88	달아실 아이들의 신나는 판타스틱 페스티벌	15,879	
월곡2동	116	뚝딱뚝딱 만물수리사, 월곡2동 꿈꾸는 시네마	12,567	

읍면동	나눔회원	사업명	사업비	비고
운남동	335	학교밖세상체험, 꿈크는 아이, 우리마을 마음 소통	47,875	
하남동	82	홀몸어르신 새봄맞이 이불세탁, 명절지원	7,003	
첨단1동	88	돌봄이웃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금, 명절지원사업	9,291	
비아동	41	사랑의 운동화 지원, 비아 꿈나무아동 지원	22,522	
첨단2동	173	꼬꼬마 천사들과 함께해孝, '맛난 밥상 맛난 세상	15,652	
수완동	628	사랑의 온기 배달사업, 1:1복지매니저 지원	79,425	
신가동	214	신가동 청소년 봉사단 운영, 신가마을 여름 물놀이	18,261	
신창동	129	행복빵빵 사랑의 빵 배달, 아이사랑 해피 맘	17,730	
평동	113	명절 돌봄이웃지원, 독거노인 난방비지원	4,726	
임곡동	67	저소득 대학생 교통카드 지원, 임곡 백우 축제	6,145	
동곡동	18	보훈가족 지원, 경로당 지킴이 사업	6,588	
삼도동	53	삼도랑 반디랑, 삼도 마을애 북카페 운영	7,063	
본량동	49	사랑의 밑반찬지원, 화재피해 주민 지원	4,501	



주민과 행복한 밥상



광주 광산구 우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12일 이웃이 소외계층을 챙기는 자원봉사자의 모임인 아는 형님 발대식을 가졌다. 주민들의 기부모임인 투게더 광산은 광산구 21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특색 있는 사업을 펼치도록

우산동 '아는형님' 협약



수완동 업무협약 체결



하남동 한가족 보듬보듬 협약

-고독사 예방을 외한 광산구의 선택! 돌봄이웃 안부살핌 "안녕하세요?"

도시나 농촌 모두 1인가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18년 광산구의 1인가구는 약 4만 6,000가구에 달한다. 구민의 11.4%가 1인가구인 셈이다. 이에 광산구는 고

독사 위험군에 대한 실태파악을 우선으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자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21개동 동지사협에서 안부살피기 공동사업을 실시했다.

지속적 돌봄이 필요한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동지사협 위원과 통장, 유관기관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자들이 방문 살핌과 안부 전화를 실시했다. 욕구 조사와 필요 서비스 연계도 실시하는 중에 6,300만원의 구비가 지원되었다.

연도	집중살핌	간헐살핌	살핌후보	매칭위원	지원액	재 원
2017	107	287	210	610명	63,000천원	구비 100%
2018	95	190	177	458명	63,000천원	

-광산형 영구임대 사회돌봄: 마을의 자연력을 복원하는 복지관 중심의 플랫폼 조성

영구임대주택은 정책적으로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이라는 의미가 있으나, 주민들의 삶을 살펴보면 공간적으로 분리되고 사회적 단절도 심해 도심 속 슬럼화가 진행되는 곳이기도 한다. 광산구는 우산동에 2개 영구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상황을 파악하고 이웃지기를 통해 마을의 자연력과 복지력을 복원하고, 공공성을 확장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였다.

사업 추진주체는 하남·송광종합사회복지관으로 공동체복지과와 우산동주민센터가 행정적 지원을 하였다. 이웃지기 돌봄활동가는 복지, 주거, 주민조직, 외부전문가들로 구성하였는데 아동지역자활센터부터 서울복지재단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하였다.

주요 사업은 '마을공동식당&놀이터'와 사회돌봄 서비스, 일자리 제공, 마을 커뮤니티 공간 활용 등이었다. 복지관에서 독거장애인과 어르신들이 엄마 밥만큼 따뜻한 저녁을 드실 수 있도록 식사를 제공하고 복지관 내 경로식당을 중식 이후 마을 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였다. 또한 아파트 라인별로 이웃지기와 상상지기를 위촉해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관계를 형성하고, 야간(5~9시)에 사회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는 학습놀이지도, 건강지원, 요양보호 지원도 진행했다. 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복지관도 개방하였다. 경력단절 여성과 베

이비부머 은퇴 세대에게는 일자리 창출 지원(조리사, 돌봄활동가, 주택관리사 등)도 진행하였다.

-어려운 이웃을 먼저 살피는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 연계 특화사업

사회복지법인 투게더광산나눔문화재단은 지자체의 출연 방식이 아닌, 구민들이 십시일반 후원금을 모아 설립한 재단이다. 2011년 지사협 임의단체인 나눔문화공동체를 구성하고 2013년 7월 발기인 총회를 거쳐 그해 10월 투게더나눔문화재단 법인 설립 인가를 받았다. 이후 11월에 법인 창립대회를 열고 다양한 특화사업을 펼치고 있다. 지금까지 민간과 행정이 서로의 담장을 허물고 민·관복지연대의 기초 위에서 주민들 스스로 나눔과 협동에 동참해 운영하고 있다.

구 분	사업비('18년, 천원)	주요사업내용	비 고
계	366,737		
마 을 등 대	23,000	이웃돌봄, 마을대동회, 사각지대발굴	공모사업
볍 씨 한 톨	50,000	민간기관 및 복지공동체 공모사업	공모사업
돋을손지원	50,000	복지사각지대 긴급생계지원 등	배분사업
명절이웃돕기	20,000	명절 이웃 돌봄 지원	배분사업
나눔in콘서트	25,000	생활속 나눔 활성화 감동후불제 공연	
나 눔 연 대	140,000	돌봄이웃 지정사업 및 지정단체 지원	
회 원 섬 김	34,737	나눔친구 및 나눔회원 지원 사업	
교 육 비	21,000	민·관협력 교육 간담회 등 워크숍	
금융복지상담	3,000	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 악성채무 소각	위탁사업

투게더나눔문화재단의 특화사업을 소개하면, 우선 사람을 살리는 '금융' 삶을 지키는 '복지'를 표방하는 '광산구금융복지상담센터'를 들 수 있다. 재단이 주도하여 채무조정이 필요한 주민을 발굴하고, 각종 지원 사업을 펼친다. 불법채권추심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에게 채무상담과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정망으로 확실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18년 말까지 광산구금융복지상담센터는 총 2,000여 건의 상담을 진행하고 114건의 조정(합107억 1,400만원)을 이루어냈다.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주민참여
지자체	사회경제과	o 금융복지상담센터 원활한 운영을 위한 행정적지원 등	민간위탁 운영 및 협업	전화, 이메일 및 방문전화예약 후 센터 방문하여 상담
	동주민센터	o 채무취약계층 발굴시 적극 연계, 맞춤형사례관리		
	희망복지과	o 위기가구 긴급지원, 통합사례관리 제공		
민간기관	투게더광산 재단	o 금융복지상담센터 위탁운영과 '돋을손'지원 등 연계		
	대한법률구조공단	o 개인 회생 및 파산서류의 원활한 접수, 교육지원 등		
	광주지방변호사협회	o 법률자문 및 지원, 채무자대리인 지원 등		

두 번째 특화사업으로는 '십시일반 나눔은행, 사람이 신용이다. 광주주먹밥은행'을 들 수 있다. 은행 이름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이 함께 나눴던 '주먹밥'에서 인용하였다. 밥지기(주민)가 자신의 여윳돈을 주먹밥은행에 맡기고, 그 돈을 급전이 필요한 이웃에게 대출(30만원 한도로 무이자, 무담보, 무보증)해주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돈'보다는 '사람'이 먼저라는 공동체적 신념을 확산시키는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 광주주먹밥은행은 7,230만원(후원금 3,092만원, 예치금 4,138만원)의 모금액을 조성하여 총 182건 5,460만원의 생계비와 의료비를 대출해 주었다.

세 번째 특화사업으로는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마을등대 프로젝트'가 있다. 이 사업은 공공복지전달체 영역의 제도적·재정적 한계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복지사각지대의 주민을 주민 스스로 찾아내고 공동체 안에서 지원해 나가자는 취지의 주민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다. 2014년부터 3년간 보건복지부 민관협력활성화시범사업으로 운영되다 종료 후 자체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마을별 매월 1회 정기적인 '마을복지대동회'를 개최하고 마을 의제를 선정한 후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다양한 복지자원을 연계하고 있다.

준비단계	▶	취합단계	▶	회의단계	▶	추진단계	▶	사후관리
위원, 통장, 사회단체, 관리사무소 등 의견제시 및 청취		취합된 의견을 안건 및 마을복지 의제로 상정		마을복지의제 및 복지사각지대 문제 등 안건논의		의제 및 사업 안건 월 1회 이상 추진 (주민/행정/복지기관 등)		모니터링 및 평가, 만족도 조사 등



사업공모 설명회



마을등대 워크숍



마을등대 대동회



마을등대지기 살핌

"동을 혁신하니 공동체가 복원되고 복지와 자치가 융합됐다" 광산구의 선례가 확산되길...

광산구에는 광산구만의 주민자치형 공동체가 있다. 광산구의 주민자치형 공동체는 동의 혁신과 주민자치형 공동체의 복원 그리고 복지와 지치가 융합된다는 3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앞서 설명한 대로 광산구는 주민자치강화를 위해 주민의 관점에서 동의 기능을 혁신해 왔다. 민+관+마을(민간)을 포괄할 수 있도록 행정조직을 혁신하고, 복지전달체계도 개편하였다. 또한 2018년 21개 전동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시행함으로써, 권역별 네트워크를 구축해 동별 자원공유 및 지역문제해결에 주력할 수 있었다. 이러한 노력 끝에 광산구는 민과 관이 함께하는 지역사회주도 주민자치형 공동체복지를 실현하였다.

주민자치형 복지는, 복지를 국가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주민들이 스스로 이

웃을 돌보고 살피는 마을 공동체의 복원을 의미한다. 광산구는 마을회의를 통해 의제를 선정하고 그에 따른 예산도 기부와 나눔으로 마련하였다. 주민이 직접 민주주의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는 마을대동회를 실시하여 지역의 문제도 해결해 나가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광산구는 2018년 7월 민관 협업프로젝트 '살기 좋은 우산동 만들기' 추진단을 구성하였으며 ▲마을자치공동체 ▲마을경제(협동연대) ▲마을문화(배움학당) ▲마을혁신(주거복지) ▲마을건강(인프라)라는 5대 전략을 중심으로 지역 복지관 중심의 복지 플랫폼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동을 중심으로 보건복지와 자치기능을 확대·융합하는 '주민자치형 커뮤니티 케어 구축' 모델을 포함하는 광산구의 주민자치형 공동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길 기대해 본다.

〈광산형 주민자치형 커뮤니티 케어 모델〉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우수사례집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02

“찾아가는 복지, 함께 만드는 자치” 동네방네 행복도시 금천의 이야기

서울시 금천구









주민이 주인되는
공공서비스
주인공

02 “찾아가는 복지, 함께 만드는 자치” 동네방네 행복도시 금천의 이야기

서울시 금천구

참여 문화 확산과 주민 역량 강화로 “금천, 민주주의의 정원이 되다”

구민 25만 명이 살고 있는 금천구는 1995년 구로구에서 분구된, 서울시 면적의 2%를 차지하는 비교적 작은 자치단체이다. 금천구의 지역특성은 크게 4가지 단어로 소개할 수 있다. ‘공장’ 밀집 지역으로 ‘외국인’ 이 많은 ‘도시’지만, 아파트보다는 다가구와 다세대주택이 많아 지역 토박이들의 ‘정’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설명을 덧붙이면 금천구는 장년층(인구대비 42.6%, 서울시 1위)과 노인(약 3만 5,000명, 인구대비 13.7%)이 많고, 저소득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약 9,400명, 서울시 4위)가 많으며, 외국인(약 1만 9,000명, 인구대비 7.5%)도 많다. 인구 10만 명 당 자살자는 27.6명으로 서울시에서 상위권에 속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지역적 특색으로 사회적 안전망이 남달리 요구되는 지역이라 하겠다.





이에 금천구는 2012년 주민주도 사회안전망인 '통통희망나래단' 운영을 시작으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왔다. 2017년 말에는 금천구의 10개 동 전체가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여 주민 참여문화를 확산하고 복지서비스를 개선하는 분기점을 마련하였다. 더불어 다양한 금천형 사업들로 '찾아가는 복지, 함께 만드는 자치'를 실현시켜 나가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와 복지전달체계가 만나면? 주민 중심 마을 복지가 실현된다!

모든 동의 일은 동에서 알아서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 주민자치회 전 동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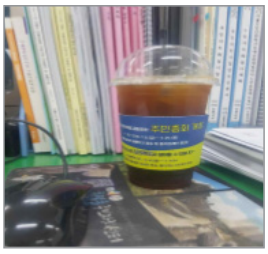
-일사천리! 합의와 공감을 이끌어내자 자치력이 급성장하다

지난 20년간 동 주민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이렇다 할 의사 결정 권한도 없이 동 행정에 의견 자문만 하던 수준에 머물러 있어 진정한 지방자치와는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서울시는 주민들이 직접 공공예산을 운영하고 주민총회도 열 수 있도록 '서울시 주민자치회'를 도입했다. 2017년 금천구는 성동구와 성북구, 도봉구와 함께 시범사업에 포함되었으며, 전체 10개 동 중 6개 동이 시의 지원 하에 주민자치회를 시행키로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 이후 바로 금천구는 10개 동 전체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주민들의 민주주의 의식 고취와 주도적인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였다. 실제 2017년 시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4개 동에 구비를 편성하여 주민자치회 전환을 지원하였다. 더불어 의사 결정권과 예산 운영권, 관련 행정 권한을 위임 받는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작업들도 펼쳐 나갔다.

우선 금천구는 주민자치회 전환을 위해 민간의 합의와 공감을 이끌어내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다.


〈마을버스 현수막 부착〉


〈구내 카페 컵홀더 제작〉



〈주민총회 포스터〉

2017년 5월 구의회에서 10개동 주민자치회 전면실시 및 조례 제정을 위한 사전 설명을 실시하고, 6월에는 금천구 협치회의에서 주민자치회 사업의 비전을 공유하는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7월에는 주민자치회 전환을 위해 주민자치운영협의회의 숙의 과정을 거치고 공무원 교육도 실시했다. 주민여론 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동별 주민설명회도 12회 개최하였다. 이러한 사전 과정을 거쳐 마침내 2017년 10월 동별 자치위원을 기존 25명 이하에서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개정하고, 현재 참정권이 없는 15세 이상 청소년에게도 주민총회 투표권을 주는 주민자치회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다. 1억 4,700만 원의 동사업비도 편성되었다.


동 주민설명회


마을계획단 설명회

이후 주민센터는 주민자치회 사무공간 조성과 인력 충원 등 구체적인 실무를 빠르게 진행했다.

우선 주민자치회 전환을 위해 다양한 물적·인적 지원이 필요했다. 현장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간조직인 주민자치사업단을 구성하고, 전 동에 시민과 행정 공무원의 중간 성격인 동자치지원관을 배치하였으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간사로 지정하도록 했다. 금천구 전체에 22명의 주민자치 관련 인력이 충원되었다.



중간지원조직 운영



주민자치회 사무공간 조성

-공개모집과 추첨을 통한 자치위원 선발, 아이디어는 백점 효과는 만점

주민자치회의 핵심인력이라 할 수 있는 자치위원은 홍보와 공개모집의 형태로 선발되었다. 자치위원 양성을 위한 주민자치학교가 22회 열렸고 구민 560여 명이 교육을 이수하였다. 자치위원 선출은 분야별로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공명정대하게 지원자 대상 공개추첨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지 않은 신규 인적자원이 280여 명 영입되었는데, 40대 이하 젊은 위원들도 119명이나 되었다. 전체 자치위원 중 신규 인력의 비율은 65%에 달했다. 2017년 12월 14일 10개 동에서 선발된 400명의 자치위원은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자치위원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발대식을 가졌다.



주민자치학교 운영



주민자치회 발대식

주민자치회는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 운영세칙과 분과를 구성하였고 3월부터 5월까지는 주민자치회 분과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시행착오를 거치며 마을사업 발굴과 주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이 진행됐는데 결과적으로 86개의 의제가 발굴되었다. 자치계획 수립은 5월에 진행되었다. 이후 주민자치회는 7월

에 주민총회를 열고 51개의 동 특성화사업과 32개의 시민참여 사업을 합해 83건의 마을사업을 결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15세 이상의 주민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설명회가 계속되었고, 약 1,700명의 구민이 온오프라인 사전투표를 통해 자치계획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온라인 사전투표


오프라인(학교) 사전투표

금천구 전 동의 주민자치회 실시는 주민의 손으로 자치계획을 결정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실천의 토대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학생을 포함한 많은 주민이 주민자치를 경험하고 민주주의 실현에 대한 높은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학생 주민의 마을의제 발표


정책부스 – 정책청취 및 의견교환


선택한 마을의제 선정 투표


자치회관 운영계획 등 승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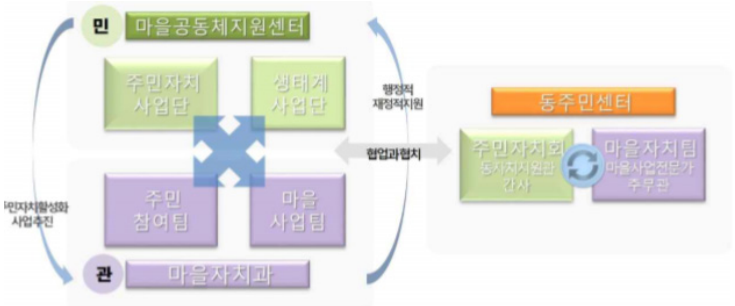
동네주민과 주민센터가 발로 뛰면 마을이 바뀐다!
복지와 자치를 함께 하는 동 특성화 사업

그동안 대다수 정책은 중앙 또는 광역 정부에서 결정하고 기초지자체는 이를 실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하향식 의사결정의 진행은 빠르지만 현장을 모르는 정책을 재생산하고 정책의 주인인 주민을 대상화한다는 근본적인 약점이 있었다.

이에 금천구는 2016년을 「마을 민주주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는 주민과 주민센터에 과감하게 예산과 권한을 부여하는 상향식 형태를 시도하였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동 단위 민간 네트워크가 동네 여건에 맞는 정책을 발굴해 직접 실행하는 '동 특성화 사업'이다.

동 특성화 사업이란 동네주민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거점으로 직접 동네정책을 기획-실행-평가하는 마을민주주의 사업이다. 금천구는 2016년 전국 최초로 가장 작은 단위인 동으로 정책결정권과 예산집행권한을 부여하고 동별 연간 구비 2,500만 원을 부여하여 동 특성화 사업을 지원하였다.

1차년도에 주민들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선택한 것은 주민이 직접 살고 있는 골목의 문제를 해결하는 공간사업이었으나 2차년도에는 복지의제 비중이 늘며 의제의 공공성이 한층 확장되었다. 주민과 주민센터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공공의 손길이 닿지 못한 곳곳이 변하였고, 각 동마다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도 생겨났다. 대표적으로 독산3동은 6시 이후 비어 있는 민원실을 마을극장으로 변신시



〈금천구의 마을공동체지원시스템〉

켰고, 시흥1동은 음악동아리 연주를 통해 노숙인이 사용하던 공원을 퇴근길에 주민이 어울리는 명소로 바꾸었다. 이러한 마을민주주의를 향한 금천의 노력은 2016년 제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지금도 금천구는 10개 동이 10색의 매력을 만드는 동네로 거듭나고 있다.

금천형 복지전달체계란? '주민 주도, 주민 중심' 쉬워도 너무 쉽다!

-복지도 마찬가지! 마을을 잇고 사람을 잇습니다

금천구는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마을을 잇고, 사람을 잇다'는 슬로건 아래 마을공동체를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금천형 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을 통해 주민과 함께하는 구석구석 살피는 마을복지 조성에 매진하고 있다.

금천형 복지전달체계인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시작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달체계 개편사업으로 복지리더들이 양성되어 통통희망나래단이 꾸려졌다. 서서히 돌봄을 위한 지역자원들이 발굴되었다. 사회복지 상담 창구인 통통복지콜센터가 운영되어 복지 사각지대가 발굴·해소되고 주민이 주민을 돌보는 시스템이 정착되었다.

-복지 행정 개편으로 중복수혜는 Down↓ 복지효율은 Up↑

복지 수요가 늘어나면서 복지전달체계의 안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자 금천구는 2015년 복지 행정을 강화하는 형태로 조직을 개편하였다. 구 단위에서는 복지정책과 내 '마을복지팀'을 신설하여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을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동 단위에서는 팀을 증설하며 주민자치와 찾아가는 복지에 역점을 두었다. 동 근무 인력도 178명에서 256명으로 80명 증원되었으며, 전 동에 2명씩 방문간호사를 배치하고, 4명의 출산가정 전담 방문간호사 제도도 운영하였다. 보건복지서비스를 위한 행정 기반이 마련되면서 복지 분야 전문성도 강화되어 갔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행과 더불어 복지플래너도 확충되어 사례관리가 전 동으로 확대되었다. 대상자와 서비스 연계가 되는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금천구는 맞춤형 복지지원에 요구되는 다양한 자원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역

내 공공, 민간 서비스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였다. 동 단위 서비스 수행인력들과 정기적으로 만나고 지역 내 복지기관 및 고용, 보건, 교육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해 나갔다.

- '주민주도, 민관협력, 찾아가는' 3박자 서비스로 1인가구와 독거노인에 맞춤 서비스 제공

한편 사회문제로 1인 가구와 고독사 문제가 대두되면서, 특히 4060 중장년층 1인 가구와 홀로 사는 어르신이 많은 금천구는 방문 안전망을 통합하고 이웃 관계망을 넓히는 사업들이 절실히 요구됐다. 금천구는 2016년 15번의 정책토론회를 거쳐 기존의 복지전달체계에 대한 개선사업을 전개하였다.

금천의 찾아가는 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세부사업 추진

주요 방향	주민주도 사회안전망 복지생태계 구축	민관협력 강화 복지전달체계 개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세부 사업	· 통통희망나래단 · 동 복지협의체 · 복지통장 · 나눔이웃 · 마을복지의제발굴 사업 · 주민중심 고독사 예방사업	· 4060중장년프로젝트 · 한지붕이웃돌봄망 · 헬로우-안심모바일 · 권역별 민관협력 · 통통복지콜센터	· 전담팀 구성, 인력 충원 등 조직개편 · 복지플래너· 방문간호사 · 찾아가는 골목상담 · 통합복지상담관

이로써 금천형 복지전달체계는 크게 주민 주도 사회안전망 복지생태계 구축, 민관협력 강화 복지전달체계 개선,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로 정비되었다. 사업에 참여하는 전 동의 복지팀장은 모두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춘 2년 이상의 복지 업무 경력자로 전문성이 강화되었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위한 구비 예산도 3,90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또한 2016년 신설된 동 복지협의체를 중심으로 주민과의 유기적인 상호협력 하에 매년 주민총회에서 발굴한 의제 및 주민참여예산, 각종 공모사업 등을 통해 동 단위 복지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는 형태로 진화하였으며,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이웃에게 관심 갖기 캠페인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주민총회



동 특성화사업(이웃주간)



동 특성화사업(어르신 생신잔치)

-수요자 중심 복지 전달체계의 원조, 통통희망나래단과 통통복지콜센터

과거 정부나 지자체에서 추진한 다양한 복지사업과 복지에 대한 지속적인 재정적 투자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복지체감도는 그다지 높지 않았다. 금천구는 보건·복지 실무자, 민간 복지기관 및 시설종사자들과의 토론과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복지체감도가 낮은 두 가지 이유를 도출해냈다. 첫째는 위기 사건이 발생한 후 복지 대책이 세워짐으로써 복지 사업의 적시성이 떨어진다는 점이고 둘째는 주민들이 복지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받기가 어렵다는 점이이었다. 이에 금천구는 2011년 1월부터 두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을 시작했다. 이는 필요한 복지 혜택을 적절한 시기에 받을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복지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통통희망나래단과 통통복지콜센터는 민관과 이웃이 소통하며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의 날개를 달아주자는 취지에서 기획된 금천형 복지전달체계의 오래된 모델이다.

2012년 시범운영을 거쳐 2012년 7월 활동을 개시한 통통희망나래단은 흩어진 지역자원을 모으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주민 주도형 사회안전망으로 총 57명으로 구성되어 요보호 대상자 상시돌봄 및 실태조사, 민간자원 발굴과 연계활동을 하고 있다. 개별 방문 뿐만 아니라 약 800호에 이르는 돌봄 가구 주택의 이웃 세대들에게 희망쪽지를 부착하여 외부출입 흔적이 확인되지 않은 세대는 집주인과 면담을 통해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후 복지플래너에게 인계하여 복지 서비스도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통통희망나래단은 서울시 '우리동네돌봄단'으로 벤치마킹되어, 서울시 타 자치구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2012년 5월에 개소한 통통복지콜센터는 복지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SMS와 유선으로 저소득층 지원, 여성과 가족, 장애인복지, 보건의료, 복지일반 등 5개 분야 588개 단위 사업에 대한 매뉴얼을 바탕으로 복지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실적으로 주민들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복지 사업이 어느 부서에서 이루어지는지 잘 알지 못하고, 복지 담당 공무원들도 부서칸막이 현상으로 인해 부서 별로 복잡 다양하게 수행되는 복지 사업에 대해 종합적인 정보를 갖고 있기 어렵다. 주민들과 복지 담당 공무원 모두 단편적인 상담으로 인한 불만족이 있을 수밖에 없다.

통통복지콜센터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복지직 직원 4명과 팀장, 총 5명이 복지종합상담 및 가구별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문자메시지와 유선통화로 임대주택, 독감 예방접종, 문화누리카드, 저소득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등 수요자 관심도가 높고 단기간 집중 홍보가 필요한 사업을 안내해 복지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다. 더불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어르신, 장애인들에게 실시간 문자정보 제공과 상담으로 취약계층 주거안정에도 기여하고 있다. 상시 돌봄이 필요한 홀몸어르신, 중증장애인, 자살고위험군 등 1인 취약가구에게 안부확인(희망콜)과 복지정보를 안내하고, 자살고위험군에게는 자살 예방을 위한 희망메시지를 발송하여 금천구 생명존중안전망 구축에도 기여하고 있다.

-생명 존중을 위한 주민 지원서비스, 어르신 돌봄과 자살예방

금천구는 자살자 비율이 평균을 상회하고 홀로 사는 어르신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노인 고독사 문제도 심각하다. 이에 금천구는 2018년까지 자살률을 인구 10만명 당 20명 미만으로 낮추고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 사업과 주민밀착 자살예방 전달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대표적인 고독사 예방사업으로는 월 1회 집주인과 세입자가 만나는 '한지붕 이웃돌봄망'과 주택 단위에 희망쪽지를 부착하는 '나래단 희망쪽지', 이웃살피기 워크숍과 온통 반상회로 고독사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주민중심 고독사 예방사업', 이웃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마을 속으로 접근하는 '찾아가는 골목-복지상담', 그리고 1인 가구에 월 3회 음성메시지 발송 후 수신여부를 확인해 복지플래너가 방문하는 '헬로우-안심모바일 서비스' 등이 있다.


주민중심 고독사 예방사업


찾아가는 골목-복지상담


한지붕 이웃돌봄망

〈고독사 예방사업〉

한지붕 이웃돌봄망	월 1회 집주인과 세입자 만남의 날
나래단 희망쪽지	주택단위 희망쪽지 부착 후 위기가구 연계
주민중심 고독사 예방사업	이웃살피기 워크숍, 온통 반상회 등
찾아가는 골목-복지상담	이웃에게 관심갖기 캠페인 등
헬로우-안심모바일	음성메시지 발송 후 수신여부 확인

홀몸 어르신에 대한 생활실태와 복지용구 파악, 안전확인, 복지서비스 연계 등 종합적인 대책 및 돌봄 활동을 위해 '찾아가는 어르신 돌봄서비스'도 추진되고 있다. 만 65세 이상 홀몸 어르신들을 방문하는 사업으로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기타돌봄서비스로 구분된다. 이 중 기타돌봄서비스는 공공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야쿠르트 배달 서비스, 통장방문도우미 등의 봉사로 진행된 지역공동체 돌봄서비스라 할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해 자살예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건소 내에 '마음나눔방' 상담실도 운영하고 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생명지킴이 양성,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방문간호사와 복지플래너에 의한 자살고위험군 조기발견 등 지역 사회의 다층적 발견망을 구축하고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를 통한 관리강화 사업이 전개된다. 금천경찰서, 구로소방서, 응급의료기관은 응급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자살시도자가 발생하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신속하게 연계하며, 자살자 유가족을 위한 심리지원 서비스, 유가족 자조모임 '자작나무'도 운영하고 있다.

- 사회와 단절된 4060을 세상 안으로! 민과 관이 함께하는 중장년 자조모임 프로젝트

4060 중장년 자조모임 프로젝트는 복지플래너들이 구석구석을 방문한 결과 65세 이상 홀몸어르신에 비해 40~60대 독거남성들이 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

고 사회와 단절된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 발견돼 독거 중장년층의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되었다. 2017년 독산3동(돌아온 진짜 사나이)과 독산4동(한마음회) 등 2개 동에서 운영하다 2018년 10개동으로 확대됐다. 처음에는 사회활동을 거부하며 홀로 거주하는 중장년층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문화 활동을 함께 하는 형태였으나, 회를 거듭하며 회원들이 재능기부를 통해 자존감을 회복하고 있으며, 구 단위 '동행 프로젝트'로 확대하여 타 동 자조모임 회원들과 함께 교육, 문화활동 등을 운영하고 있다.



탑골 두레박



한마음회



목공의 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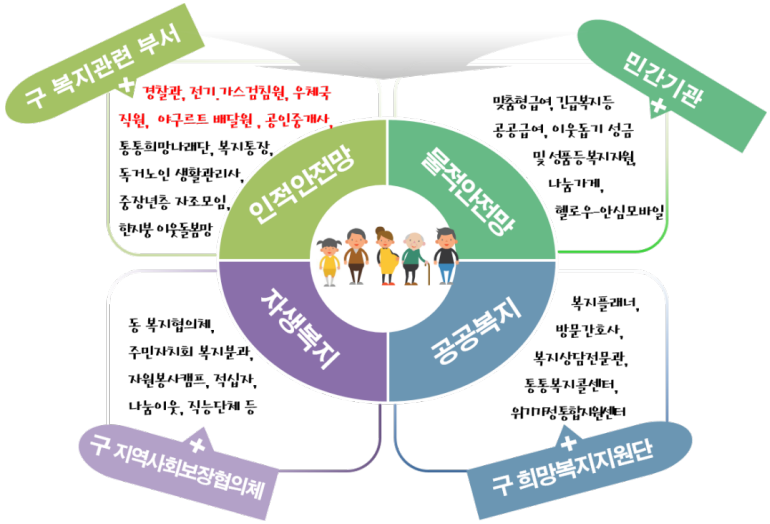
〈금천구 4060 중장년층 자조모임〉

동명	모임명(인원)
가산	스파이더 우먼(7)
독1	나혼자 산다(5)
독2	화사한 우리들의 모임(4)
독3	돌아온 진짜 사나이(9)
독4	한마음회(12)
시1	Best Friend(9)
시2	탑골 두레박(5)
시3	사랑이 꽃피는 나무(5)
시4	혼밥, 목공의 달인(13)
시5	꿈꾸는 은행잎(6)

더 촘촘한 복지플랫폼, 금천의 동네방네 사업으로 실현하겠습니다!

금천구의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는 서울시 동 단위 주민참여예산 및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플랫폼 혁신사업의 모델이 되고 있다. 그러나 금천구의 노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금천구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와 더불어 사각지대 발굴과 긴밀한 연계를 통해 주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복지플랫폼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전력, 가스공사, 우체국, 공인중개사협회, 야쿠르트 영업소 등 방문형 기관과 함께 복지 사각지대의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한다. 또한 '금천 동네방네 복지통' 사업으로 동별 거점 지역에 복지정보 게시판과 사각지대 신고함을 설치하고, 지역자원 나눔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동 복지협의체와 통통희망나래단, 복지통장 등 주민안전망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금천구의 복지안전망 협력체계도〉

더불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2018년 10월부터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통합 사례관리 서비스와 경찰의 범죄 예방시스템의 협업으로 위기가구에 특화된 지원체계를 구축해 제공하고 있다.

금천구는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사업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돌봄, 교육, 마을복지 등 공공서비스 관계망을 구축하고 지역 여건과 다양한 수요에 맞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실현함으로써 '동네방네 행복한 복지플랫폼'을 실현해 나갈 것이다.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03

‘사람중심, 마을중심’ 반송동의 건강한 행복 전략 3H(Happy, Healthy, Heaundae)

부산시 해운대구









주민이 주인되는
공공서비스
주인공

03 ‘사람중심, 마을중심’ 반송동의 건강한 행복 전략 3H (Happy, Healthy, Heaundae)

부산시 해운대구

동서 건강불평등을 해소한 복지와 자치의 하모니! 해운대구 전체로 울려퍼져라

18개 동으로 이루어진 해운대구는 동쪽의 계획도시와 서쪽의 집단이주지역(반송·반여동) 간 건강불평등이 심화돼 있다는 특징이 있다. 전체 인구 41만여 명 중 반송2동 인구는 약 2만 7,000명으로 비중이 높지 않으나, 부산시 수급자의 30% 이상(5,270명, 34.8%)이 거주하고 있어 대표적인 취약계층 밀집지역으로 꼽힌다. 해운대구의 반송1·2동의 표준화 사망비는 각각 146.8, 120.3(표준화 사망비 120 이상은 건강 취약지역)이며 65세 이상 노인은 해운대구민의 16.6%(9,990명)를 차지한다. 등록장애인수 역시 3,884명으로 높은 비중(22,1%)을 차지하고 있다.





해운대구는 동서 지역 간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동 단위 집중 관리 사업을 펼치고, 복지-보건-행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산형 ‘다복동사업’을 진행함과 동시에 마을주민의 건강을 살펴 줄 마을건강센터 운영도 진행하기로 했다. 물론 이러한 다양한 사업에는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했기 때문에, 주민공동체의 활성화가 함께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제기되었다.

해운대구는 '사람중심 미래도시 해운대'라는 구정 비전을 세우고, 반송2동에는 '반송을 함께 세우자!'라는 슬로건을 주민 스스로 채택했다. 그리고 각 동에 배치된 맞춤형복지팀을 중심으로 복지지원서비스가 집중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보건에 대한 주민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동건강팀을 설치하는 일부터 시작했다. 다음으로 도시형 동 단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를 반송2동에 시범적으로 추진하였다. 다양한 사업을 통해 반송2동의 보건·복지 환경은 크게 개선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이 주민을 돌보는 사업들로 공동체에 활기도 살아나고 있다. 해운대구는 반송2동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의 모범사례로 제시하며 전동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를 확대해 가고 있다.

'더 가깝게 더 따뜻하게' 반송동 건강마을 사업 프로젝트

건강 취약지에서 건강 공동체로 변신한 반송의 이야기

-가까운 곳에서 건강을 살피세요! 주민센터 안에서 동건강팀이 돕습니다

해운대구는 '사람중심 마을중심 해운대'라는 구정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반송2동의 주민센터 안에 동건강팀을 설치하였다. 간호직 팀장과 간호직 담당자 2명, 공무직 1명, 주민대표(마을코디) 1명으로 구성된 건강팀은 지역주민을 전체로 맞춤형 복지 사업을 펼치고 있다. 주민이 참여하고 계획, 평가하는 주민 주도적 마을사업의 하나로 동 건강지표에 근거해 건강의제를 선정하고 추진하는 일도 한다. 해운대구는 반송2동의 동건강팀을 반여2동, 반여3동 등으로 확대 설치하여 전동에 설치 완료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마을의 문제를 주민의 손으로 해결하면? 더 건강하고 행복한 반송

해운대구는 반송동을 중심으로 주민이 주민의 건강을 살피고 주민이 주민의 행복을 만드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였다. 마을사업 계획수립과 주민역량강화, 주민 워크숍과 사업성과보고회로 이어지는 1년의 주민역량 강화 활동에 단계별로 100~300명의 주민이 참석하였다.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는 연 1회 지역주민 100인의 토론회와 연 2회의 청소년 300인 토론회를 개최하여 마을에 대한 관심도를 높였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토의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도 주민이 참여하도록 하였다.

지역건강문제 해결과정에 지역 기관과 자생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했는데, 폐지수거어르신의 보건·복지·행정 마을지지망 구축을 위한 민관협약식과 공동사업을 위한 네트워크 회의, 공동사업 운영(나들이, 국수잔치 등)도 진행하였다.

-TF팀 구성, 설명회와 공청회로 대상자와 사업 중복의 고비를 넘다

반송동 주민자치위원회는 '꿈마을기획단', 주민참여 '건강반송 지역네트워크', 맞춤형복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연계 및 협력 활성화도 진행하였다. 하지만 같은 기간에 여러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대상자와 사업 내용이 다소 중복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해운대구는 주민자치회를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동별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하고 민주적 운영을 위한 규정을 준비하도록 도왔다. 이로써 주민자치회가 분과 계획 수립과 자치 계획 수립에 전념하여 사업 중복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였다.





건강네트워크 구성과 주민 참여, 2마리 토끼를 잡은 꿈마을기획단

2000년대 주민자치회가 구성되기 시작하면서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사업이 시작되었다. 이 과정에서 마을의 발전과 비전을 체계적으로 기획하고자 하는 요구가 분출되어, 주민의 공동체 의식과 결속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2006년에는 반송동 주민자치위원회는 '꿈마을기획단'을 구성하여, 주민자치회의 분과별 사업을 수행하고, 자생단체별로 실천과제를 배분하며, 마을 내 각종 기관과 연계하는 공동체 사업을 펼쳤다. 주민자치회가 있음에도 꿈마을기획단이라는 자체 기획단을 재결성한 이유는 마을 사업의 질을 높이고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였다.

다음해인 2007년 반송동의 꿈마을기획단은 보건복지부 중장기 프로젝트로 선정되었고, 건강반송 지역네크워트 구성 및 주민참여 추진단을 조직하였다. 이러한 단체는 마을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기관과 주민공동체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대표적으로 주민 100인 토론회, 청소년 마을토론회, 주민자치 워크숍 등을 진행했는데, 마을발전을 위한 의제의 선정과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 사업의 계획과 수행도 담당하였다. 또한 다문화 캠페인, 사진봉사단, 충효교육, 청소년 아피오스 농장체험, 마을교육 공동체 구축 등의 분과별 사업도 실천하였다. 이 과정에서 민주적 방법으로 의사 결정이 되고 치밀하고 섬세한 마을 계획이 세워져 소외된 이웃을 위한 주민공동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었다.

2016년에 반송동은 동 복지기능강화 사업의 시범동으로 선정되어, 맞춤형 복지팀이 신설되었다. 지나간 사업들의 성과로 지역단체, 자원봉사자, 자원공여자 등의 지역네트워크가 완성된 반송동의 사례는 2017년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반송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리의 목표는 맞춤형 복지와 주민 안전망 구축"

2016년 동 복지기능 강화 사업에 취약지역인 반송2동이 시범동으로 선정된 후 아동과 청소년 문화마당개선사업 발대식이 있었고 맞춤형 복지팀도 신설되었다. 이후 2017년에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유형이 권역화에서 기본형으로 변경되었다. 폐지수집 어르신 마을지지망 업무협약이 체결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되었다. 2018년 다복동사업 특별공모(뉴 그룹프랜드)에 선정되어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그룹프랜드 사업은 독거노인에게 이웃 친구를 만들어 서로 의지하고 삶의 활력을 증진하는 사업이었다. 이후에도 반송동은 우리마을 청년보안관 사업대상지로도 선정되기도 했고 재활용품 골목지킴이 협약도 체결하였다.

이 모든 과정에서 지역단체, 지역주민, 지역 기관 등이 참여하는 반송2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업을 기획하고 주민에게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담안골 현장복지 상담소, 다복동 똑똑 문안서비스, 담안골 복지 아카데미, 동행 가정방문 등으로 복지 안전망 구축에도 기여하였다. 맞춤형 복지와 복지사각지대 취약주민을 위한 안전망 구축 덕분에 주민 맞춤형 복지 서비스가 지역 주민에 의해서 제공되는 복지 선순환구조가 만들어졌다.

주민이 제안하고 마을이 선택한다! 주민주도형 건강마을사업

2007년 주민공동체 사업을 시작으로 2016년에는 건강마을만들기 시범 대상으로 선정되고 반송2동에 동 단위 맞춤 건강관리를 위한 마을건강센터가 설치되었다. 마을건강센터는 동 중심의 거점 장소로 활용되고, 주민이 건강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건강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지역 공공기관, 자생단체,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건강협의체(건강반송네트워크)는 지역코디네이터 발굴 및 주민 건강리더 발굴을 통해 지역 건강분위기를 조성하고 주민공동체 활동을 활발히 하였다. 주민들이 모여서 함께 건강을 살피는 주민건강동아리도 12개나 만들어졌다.

현재까지도 반송동은 주민간담회, 주민워크숍, 사업보고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바탕으로 한 건강사업계획 및 주민주도 건강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건축폐기물 환경감시단, 건강한 일터 만들기, 찾아가는 건강한 방문, 주민주도 건강캠페인, 하얀청춘 사랑방, 청소년 유해개선 캠페인, 하나로 원스톱 건강관리, 폐지수거어르신 마을안전망 구축 등이 있다. '생명사랑지킴이단'의 경우 도움을 받았던 주민이 소외된 이웃을 위해 활동하는 사업으로, 개인이자 집단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체 활동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주민주도 마을공동체 활동도 활발히 펼쳐지고 있다. 반송동에는 23개 팀이 활동하고 있는데 마을지킴이, 건강 전파 동아리 그리고 살기 좋은 반송 만들기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개별 활동으로는 노인 인지향상, 독거노인 방문, 걷기, 여성과 유아, 건강 환경 캠페인 등의 동아리들도 포함돼 있다.





'유비무환' TF팀 구성으로 주민자치회 전환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해운대구 반송동의 사업들은 주민과 행정이 협력하여 마을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좋은 롤모델이 되었다. 이후 다른 동에서도 반송동의 사례에 함께 하기 위해 지역사회 공론장을 만들고 있다. 반송동의 사례는 단순히 '건강과 복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마을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동민들에게 생활화되었으며, 마을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 협력체계가 활발히 운영될 수 있는 계기도 되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과 민관 협력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민 스스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덕분에 반송동은 동 특성에 맞춘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를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9년 해운대구는 보건복지와 주민자치의 기반이 되는 주민자치회 전환을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환경 조성 등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 2018년에는 주민자치 실무교육과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워크숍, 주민자치 키워드림 학교를 운영하였고 주민자치박람회와 우수마을 견학도 다녀왔다. 동 단위의 주민자치형 공공

주민자치에 대한 합의와 공감	▶	주민자치회 점차적 전동 확대	▶	주민자치회 민주적 운영
- 구의회 동의, 조례 제정 - 동별 주민 설명회, 공청회		- 주민자치회 홍보·모집 - 주민자치학교 운영		- 운영 규정 준비 - 분과 계획 수립 -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한 부서별 담당자 배치도 준비돼 있다. 2019년에는 주민자치회 전환 관련 구민 설명회와 조례 제정, 시범동 선정과 운영 등이 예고돼 있다.

동 단위 맞춤형복지팀, 동건강팀의 확대는 당연한 수순으로 보인다. 현재는 기본형 10개동과 권역형 8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점차적으로 기본형을 확대할 예정이다. 2018년 현재 18개동 중 16개동에 설치된 맞춤형복지팀도 2019년까지 전동으로 확대할 것이다. 마을건강센터별로 동건강팀도 확대 설치하고 간호인력도 2명씩 배치할 것이다. 건강관리팀도 우선은 건강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하지만 시간차를 두고 전동으로 확대·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반송동 선례를 경험한 이후 주민자치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건강협의체로 나뉘는 주민조직을 통합하고자 하는 구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주민역량이 강화되면서 중복되고 분산된 주민 조직을 일원화하려는 의지도 높아졌다. 이를 수용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해운대구는 앞으로도 반송동의 사례를 롤모델로 주민조직과 공동체 활동 등을 전파해갈 것이다.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04

안동의 주민자치력, 주민이 주인 되고 스스로 행복한 터전을 만드는 힘!

경상북도 안동시









주민이 주인되는
공공서비스
주인공

04 안동의 주민자치력, 주민이 주인 되고 스스로 행복한 터전을 만드는 힘!

경상북도 안동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의제 발굴과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자치회가 간다

경상북도 북부 중심에 위치한 안동시는 24개 읍면동으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농촌형 중소도시이다. 경상북도에서 면적이 가장 넓을 뿐만 아니라 서울 면적의 2.5배에 달한다. 16만 6,0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나, 1998년 18만 7,000여 명에서 점차 감소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도농복합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교육혜택이 상대적으로 낮은 읍·면 지역이 많은 상황에서 안동시는 일찍부터 다양한 주민욕구와 복합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조직 강화와 지역자생력, 지역복지력(복지, 보건, 고용, 주거, 교육 등) 그리고 민관협력 활성화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의제를 발굴하고 발굴된 의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선진적 해법 설계도 필요하였다. 안동시는 다양한 지역의 문제를 맞춤식으로 해결하는 4개(주민 스스로 해결, 주민





〈협약식 및 발대식〉

과 외부자원의 협업으로 해결, 주민과 행정의 협업으로 해결, 행정 중심 해결) 방법도 강구하였다.

안동시는 2013년부터 경상북도에서 유일하게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하였다. 동네 민주주의와 주민자치 꽃이 활짝 필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고, 주민이 함께 의논하고 계획한 일들이 시민의 삶에 반영되는 안동형 주민자치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지역 주민들 스스로가 주민자치 역량을 배양하고 지역의 다양한 주민편익과 보건·복지 사업들을 추진해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켜 왔다.

‘너와 나의 작은 관심이 세상을 바꾼다’ 안동형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가 앞서갑니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선도 도시 안동시를 소개합니다

-살기 좋은 안동에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가 있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은 주민자치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의 관점에서 읍면동의 기능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특히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주민참여 활성화 기반 마련은 물론 읍면동 행정혁신 등을 통해 풀뿌리 주민자치의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안동시는 2015년 11월부터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통합복지안전망 구축사업인 ‘안동행복드림사업’을 운영하고, 주민 중심의 마을 만들기 사업 등 다양한 복지정책으로 살기 좋은 안동 만들기에 힘써왔다. 또한 지역의 갈등과 문제를 주민들 스스로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게 읍·면·동 공공서비스를 주민 중심으로 개선하였다.

2018년부터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를 구축하고자 다음과 같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안동시의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

-24개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확대
-주민자치 교양프로그램 운영 및 자체발표회 활성화 지원 확대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학교 신설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적극적인 참여 확대 사업

안동시 전체 5억 300만 원의 예산(안동시 행정지원실 1억 8,000만 원, 안동시 여성가족과 1,300만 원, 안동시 도시재생전략과 2,000만 원,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2억 9,000만 원)을 확보하고 안동시 행정지원실, 여성가족과, 도시재생전략과에서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사업 재정은 각 부서별 사업비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민간자원(행복드림사업), 지역 내 민간기관 협력(자원봉사센터 출동! 드림봉사단사업, 종합사회복지관 농촌이동복지사업 등) 등 안동시민 창안대회, 안동시 도시재생지역 주민공모전, 주민참여 공모전(농어촌진흥재단 농촌교육·문화·복지지원사업, 경북형 농촌행복씨앗마을사업, 생활문화공동체 지원사업 등) 등 주민이 발굴한 지역 단위 의제에 적합한 주민공모전 참여로 사업수행비를 지원하였다. 또한 안동시 주민참여 예산제, 주민사업 제안 또는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기금 모금과 수익창출 사업을 통해 각 마을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재정을 확보하였다.




〈출동드림 민관협력사업〉

안동시는 2018년 8월, 민선7기 공약이행계획 보고회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안전도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약속하였다. 2018년 9월 1일 기준, 전 읍면동에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맞춤형 복지팀(기본형4, 권역형7)을 운영하며 지역 내 민간자원을 연계해 통합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4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체구성도 완료하였다.

-행정혁신과 제도개선도 빠질 수 없다!

이를 위한 행정혁신과 관련제도 개선도 이루어졌다. 대표적으로 안동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시행 2011.10.6., 안동시조례 제843호, 제정)하고, 안동시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조례(시행 2014.1.3., 안동시조례 제956호, 제정), 안동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2015.6.11., 안동시조례 제1022호, 제정), 안동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시행 2015.11.20., 안동시조례 제1064호, 전부개정), 안동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시행 2015.11.20., 안동시조례 제1077호, 일부개정), 안동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시행 2017.9.29., 안동시조례 제1250호, 일부개정), 안동시 사회적경제활동 지원 조례(시행 2017.11.17., 안동시조례 제1282호, 일부개정), 안동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 2018.1.10., 안동시조례 제1320호, 일부개정),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시행 2018.1.10., 안동시조례 제1322호, 일부개정), 안동시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시행 2018.3.2., 안동시조례 제1324호, 일부개정) 등도 시행하였다.

-'설득과 협력'으로 공감대는 높이고 난관은 뛰어넘고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확대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설득'과 '협력'이었다.

안동시는 2017년 6월부터는 매월 둘째 주 화요일 찾아가는 복지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주민 접근성을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안동지역 복지 민관기관(정신건강증진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건강가정지원센터, 경북지체장애인 협회 안동시지회, 종합사회복지관, 자원봉사센터, 태화동행정복지센터)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했다. 결과적으로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 도움 덕에 주민 밀착형 복지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복지제도에 대한 홍보, 현장 상담을 통한 맞춤 지원, 현장으로 찾아가는 적극 행정도 실현되었다. 읍면동 서비스 기능강화와 공공서비스 간의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태화동 도시재생뉴딜사업(우리동네살리기형 스마트하고 안전한 태화마을)의 경우도 설득과 협력이 필요한 사업이었다. 태화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예산액 88억원, 면적 5,300㎡의 사업규모로 지역 내 노후주택 개보수, 한옥주택을 공공주택으로 전환, 정주 환경개선, 생활기반 시설 확충 등을 위해 추진되었으나, 다양한 문

제가 드러났다. 사업 진행 전후로 토지소유자 서악사(대한불교조계종)와의 관계 문제, 지역 내 건축물의 노후화와 토지 소유권 관련 사항, 거주민 대다수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매우 저렴한 임대료임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난관이 이어졌다. 토지 소유자인 서악사 입장에서는 복잡한 재산 관계 정리, 주민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해결 방안의 논의가 필요했다. 결국 관계인 설득을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었다. 태화동 15통과 18통은 2017년 12월과 2018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토지 소유관계 협조 방안을 논의한 후 추후 시에서 토지를 매입을 하기로 하였다.

-주민자치학교에서 배우고, 자치회에서 꽃 피운다

안동시는 지방분권과 주민자치의 진정한 가치를 실현하고, 동네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자치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주민자치학교는 2018년 9월 출범식을 가졌다. 주민자치위원 600여 명을 포함해 700여 명이 참석한 출범식에서는 '너와 나의 작은 관심, 주민자치로 세상을 바꾼다'는 주제의 강연과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을 활성화하는 부분이 강조되었다.

매월 각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는 월례회의를 통해 주민자치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주민자치 모범사례 자치단체를 방문해 어떤 사업들은 하고 있는지도 알아보았다. 지역에 접목할 부분에 대해 고민하는 워크숍도 개최하였다.




〈100인 타운미팅〉

2018년 12월에는 안동시 주민자치협의회 주관으로 '왜 주민자치 이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200여 명이 참여한 안동시 주민자치학교 제2기 주민자치역량 강화 워크숍을 열었다. 주민자치의 중요성 인식 제고와 주민자치 역량 강화는 물론 모범적인 주민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전략 등을 함께 고민하고 모색하였다.





〈제2회 주민자치학교 워크숍〉

안동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와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해 24개 전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24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조기 정착과 함께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회 전환도 준비하고 있다. 2019년부터 주민자치위원회의 적극적인 주민자치위원 참여율을 높이고자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존에 읍·면·동장의 사업 선정으로 진행되던 '작지만 감동을 주는 읍·면·동 시책공모' 사업을 주민 참여 예산제도의 일환으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모범적인 주민자치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상설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방자치 박람회 참가 등을 통해 주민자치 역량을 키워 나갈 방침이다.

안동의 주민,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주인공이 되다

-주민이 슈퍼맨이다!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주민들과 대표기구

행정중심의 획일적인 공공서비스에서 기획하고 실행하는 경우 다수가 형식에 그치고 만다. 안동시는 각 지역별 또는 마을별(소규모 단위) 특성을 반영한 마을 의제 발굴과 발굴된 의제를 실행할 수 있도록 주민의 참여를 적극 지원하였다. 문제 해결 과정도 주민 스스로 해결, 주민과 외부자원의 협력, 주민과 행정의 협력, 행정의 영역으로 나누어 지역적 특성과 주민의 욕구가 반영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정된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예산절감 효과도 냈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예산사용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었다.



〈태화동 주민 씨앗학교〉

실제 2017년에는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다양한 사례(마을의제 발굴 및 실행)가 진행되었다. 8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 '우리동네 주민리더 씨앗학교'에서 의제 발굴 및 마을활동이 전개되었고, 10월 27일에는 '태화동 우리동네 주민리더 성장학교 및 협의체 활동'이 있었다. 2017년 10월 19일부터 2018년 1월 15일에는 주민역량강화프로그램 '주민리더 마중물학교'도 열렸다. 마을주민 관계향상 및 우리마을 알기 프로그램이 11회 진행되면서 지역의제 발굴 활동도 추가로 진행되었다.

주민대표기구가 운영되어 주민참여가 활성화된 사례로는 태화동이 대표적이다. 태화동에서는 2017년 12월 29일 행복주민협의체 총회가 열렸고 2018년 1월 8일에는 원동마을 주민협의체 총회도 열렸다. 주민리더 마중물학교는 주민협의체 주민대표 의사결정 기구가 구성된 사례이다. 이후 2018년 1월부터 태화동에서는 매월 마지막 주 주민협의체 회의가 열렸고, 8월에는 주민반상회가 부활하였다.



〈주민협의체 활동들: 정기모임과 반상회〉

-주민자치회의 환골탈태, 자원봉사·지역특성화 사업 발굴에서 수익사업까지

안동시의 주민자치회는 주민들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직접 발굴·논의하고 해결해 나가는 주민자치회로 거듭나고 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심의·자문기구에 불과했던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와 달리, 주민자치회는 시·군·구, 읍·면·동으로부터 행정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등 실질적인 역할과 기능을 부여받고 있다.

타 지자체의 경우 도시재생사업이 하드웨어 중심의 물리적 접근에 치우쳐 있고, 비물리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되었으나 안동시는 각 부서별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행정지원실 주민자치)하고, 지역주민의 케어수요 발굴과 맞춤형 보건·복지 연계를 지원(여성가족과 보건복지서비스)하며, 이를 위한 공간을 조성(도시재생전략과 주거환경개선 및 커뮤니티(케어)센터 등)하였다. 또한 이를 지속시키기 위한 사회적경제 분야(일자리경제과 지역 공동체, 일자리창출)를 접목시켜 돌봄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및 컨설팅을 진행하였다.



〈마중물학교 주민활동〉

실제 2011년 2월 1일부터 2017년 6월 31일까지 주민자치회 중심 활동을 살펴보면 지역 내 자원연계(후원) 또는 주민자치회의 헬스장 운영 등의 수익금으로 저소득 계층, 지역 내 경로당, 또는 후원이 필요한 곳에 현금 또는 물품 후원 중심의 활동을 진행하였다면, 2017년 7월 이후는 부서별 협업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특성을 반영한 주민의제를 발굴하고 해결하였다. 주민자치회와 태화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행복드림사업, 도시재생뉴딜사업,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사업 등은 협업과 상생으로 발굴된 마을 의제를 함께 해결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민역량이 강화되었는데, 이후에는 도시 재생뉴딜사업 신청 시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었다.

또한 강남동 주민자치회의 사례는 지역 자원을 주민 스스로 관광콘텐츠로 발굴하고 사업으로 기획하는 주민자치의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강남동은 직접 목화재배 사업을 통해 수확한 목화솜으로 천연 베개를 만들어 지역사회의 다자녀 가구 및 신생아에게 제공함으로써 지역 마을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섰다. 아울러 마을 공원인 '원이엄마 테마공원'이 주민들의 쉼터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잡초 제거, 쓰레기 수거, 거미줄 제거 등 환경정비 사업을 진행했다.

참여와 자치로 지방분권 시대의 리더로 거듭날 것

진정한 주민자치란 마을공동체가 핵심주체로서의 역량을 키우며 스스로 마을의 가치를 인식하고 공동체적 삶을 실천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안동시는 그간 지역 내 불편함과 문제점에 대해 혼자가 아닌 다수의 주민이 이야기 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고, 공론의 경험을 축적하여 지역을 변화시켜왔다.

주민이 능동적 주체로 참여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자치(위원)회 등 관변단체와 온 · 오프라인의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영향력 있는 커뮤니티를 형성하였다. 지역 인프라 편차로 인한 공공 및 민간 복지 서비스의 단절과 비연속성, 부족한 인적·물적 자원 등에 대한 민간 차원의 문제의식과 고민을 통해 지역의 시각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자원을 찾기도 하였다.

특히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해 마을의 가치를 '공공의 가치'로 인식하는 주체적인 마을공동체를 만들기를 이루었다. 이 과정에서 '결속력'을 가진 마을공동체가 스스로 성장·확장 되어가는 '조직력'과 '파급력'으로 공동체적 삶의 기반인 마을을 지키고 향유하는 '자생력'을 가질 수 있었다.





앞으로 안동시는 참여와 자치가 살아 있는 지방분권시대의 선도 도시로, 타 자치단체의 멘토로 활동하며 다양한 선도 사례를 전파할 계획이다. 주민자치와 보건복지를 연계하고, 나아가 도시재생 분야, 사회적경제(일자리창출) 분야까지 연계된 안동시의 모델을 구축하고, 24개 읍면동으로 확산시켜나가고자 한다. 기존 사업성과를 반영한 기본 모델을 구축하고 농촌형, 도시형으로 구분할 계획이다. 각 부서별로는 읍면동 찾아가는 주민자치 교육,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찾아가는 역량강화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부서별 협업을 통한 각 읍면동 또는 마을 단위(리, 통, 자연부락단위)의 지역의제 발굴과 실행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체계 및 시스템 구축을 실현할 것이다.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05

주민자치형 지역 서비스로 소외 없는 복지천국을 만들다!

경상남도 창녕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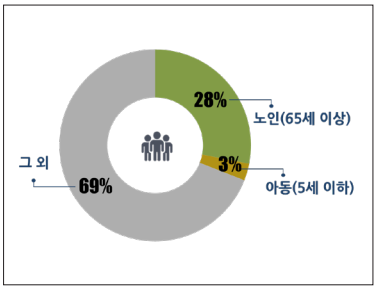
주민이 주인되는
공공서비스
주인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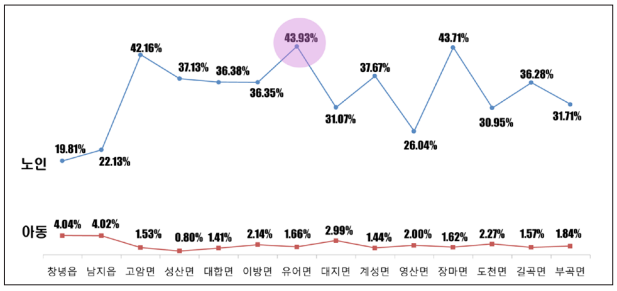
05 주민자치형 지역 서비스로 소외 없는 복지천국을 만들다!

경상남도 창녕군

초고령화 창녕의 복지 문제를 해결할 맞춤형 통합서비스가 필요해!

경상남도 중북부에 위치한 창녕군은 2읍 12면으로 이루어진 인구 6만(2018년 12월 6만 3,396명)의 전형적인 농촌 지역이다. 출생아수와 경제인구 감소로 노인인구비율은 27.7%에 달한다. 현대사회의 초고령화는 생활고와 고독사의 주요한 원인이다. 실직, 휴폐업, 질병, 소득상실 등으로 인한 가족해체와 사회적 고립 위험도 높다.





때문에 창녕군은 일찍부터 복지사각지대의 발생 문제와 복지욕구의 다양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들을 준비해 왔다. 기존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와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다. 그간 창녕군에서 펼친 복지와 보건, 자치를 원스톱으로 제공한 지역 중심, 주민 주도의 복지 정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하하동동 함께 웃는 창녕을 위해 복지와 자치가 함께 합니다!

만들고 배우고 가르치고! 창녕이 농촌형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만듭니다

-14개 읍면에 생긴 찾아가는 보건복지 전담팀의 새 이름 '동동플러스센터'

창녕군은 행정구역 14개 읍면에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을 100% 설치 완료하였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예산 3억 4,700만 원을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읍면의 복지기능을 강화한 '동동(洞同)플러스센터'를 추진하였다. 동동플러스센터는 찾아가는 원스톱 맞춤상담서비스를 진행하였는데, 2018년 전체 3,171건의 서비스가 전달되었다. 이는 전년 대비 52%가 증가한 수치이다.

창녕군은 방문형서비스의 협력 강화를 위해 주기적인 간담회와 교육, 협력카드를 활용하였다. 인적안전망과 자원체계를 확대해 22개 기관·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일례로 우체국, 대한미용사회, 한전산업개발과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보호 어깨동무 사업'이 실시되었다. 지역민의 실태 파악과 연결망 형성을 위한 이 사업에 우체국 집배원, 대한미용사회, 전기검침원 등 방문형서비스 종사자 214명이 활동하고 있다.

-방문이 필요한 환자를 위해 우리가 간다! 복지주치의 연계사업

복지주치의 연계사업은 보건소 건강증진 방문서비스 사업과 협력하여 찾아가

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례관리 대상 가구 중 치매와 정신질환 등의 이유로 방문 관리가 필요한 가구를 찾아가 상담하고 있다. 사례담당자 1명, 사례관리사 3명, 건강증진담당 1명, 간호사 1명으로 총 6명이 협심하여 일하고 있다. 2018년에는 보건복지통합서비스로 복지주치의 제도를 강화해 51건의 사례자를 발굴하였다.

복지주치의는 복지와 보건을 담당하는 하나의 팀이 방문함으로써 신속히 복지와 보건 문제를 해결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주민 참여를 확대해 지역 돌봄체계를 강화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복지가 어려운가요? 동동플러스 컨설팅단이 알려드립니다

찾아가는 원스톱 맞춤상담서비스의 강화를 위해 지역 내 복지리더 및 공무원 등 5개 분야 10명의 동동(洞同)플러스 컨설팅단을 구성하였다. 동동플러스 컨설팅단은 노하우를 전수하는 것은 물론 우수사례를 전파함으로써 기존 희망복지지원단의 운영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분야 / 계	희망복지 지원단 운영	민관협력	통합 사례관리	마을복지	주민자치
10명	3명	2명	3명	1명	1명

동동플러스 컨설팅단은 창녕군의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을 지역 안팎에 알리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관외 활동으로는 다른 자치단체가 창녕군을 방문한 경우가 22건이었고, 창녕군 동동플러스 컨설팅단이 다른 자치단체를 방문한 경

연번	과정명	운영실적	대상	내용
1	복지행정의 달인	매월 2, 4주 수요일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 공무원 등	지역복지 우수사례 연구분석
2	풀뿌리 현장 돋보기	3회 50명	공무원, 읍면협의체, 주민자치위원	지역복지 현장 견학
3	2018년 복지4知아카데미	4회 121명	민 · 관 사례관리 실무자	사례관리전문지식 및 실천기술, 네트워킹 강화
4	방문형서비스 당담자 협력과정	9회 193명	방문형서비스 관련 실무자	방문형서비스 연계협력방안 연구
5	지역복지현장 솔루션워크숍	2회 86명	주민자치위원, 읍면협의체의원, 방문보건당담, 민관사례관리실무자	자치와 복지의 마을복지, 사례관리 전략
6	복지주치의 협력과정	21건	정신보건, 통합사례관리 당담자	사례관리 연계 협력
7	동동플러스 사이버복지학당	3개 채널	공무원 및 민간복지리더 등 지역주민	복지인식 강화 및 정보 안내
8	쌩쌩희망복지상담소	13회 3,400명	지역주민	주민 참여 의식 확산
9	복지장터	13회 344명	지역주민	보건+복지 공동서비스를 통한 주민 참여 확대

우도 20건이 있었다. 총 1,800여 명의 관련자에게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에 대한 멘토링을 실시해 전국적 확산에 기여했다.

관내에서는 표에서 제시한 9개 과정을 정례화하여 멘토링을 실시하고 있다.

복지행정의 달인은 복지업무 담당자의 실무역량강화와 협업을 위한 과정으로 희망복지지원단, 읍면 복지업무담당자와 통합사례관리사들이 참여하며 복지정책의 이해와 사업별 매뉴얼 연구, 맞춤복지서비스 개발에 대한 논의의 장으로 활용된다.

풀뿌리 현장돋보기는 읍면장과 담당공무원,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자치위원이 참석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의 사례를 연구한다.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현장을 탐방한 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우리지역 접목 방안도 연구한다.

복지4知 과정은 전문가 초빙 아카데미로 초기단계, 욕구사정, 대상자 선정, 제공계획수립의 4개의 주제로 강연을 듣는다.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과정이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강화 · 확대하는 데도 한 몫을 하고 있다.

방문형서비스 담당자 협력과정은 요양보호사, 우체국집배원, 검침원, 독거노인생활관리사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간담회와 실무회의로 현실적 어려움과 대안을 공유한다.

지역복지현장 솔루션 워크숍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공모 선정 과정으로 민관 사례관리 실무자와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다양한 관련자들이 참여한다.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부터 복지와 자치에 대한 이해까지 폭넓게 다룬다.

이 밖에 보건복지 통합서비스인 복지주치의 연계사업,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군민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한 동동플러스 사이버 복지학당, 군민 개인에게 필요한 복지를 맞춤하는 쌩쌩 희망복지상담소, 주민밀착형 찾아가는 복지장터 등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의 롤모델로 멘토링에 활용되고 있다.

-“복지관이 우리마을에 왔다” 주민참여로 만든 찾아가는 복지관 ‘하하동동+어울림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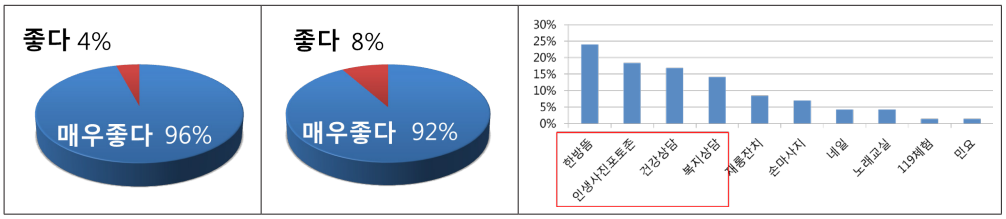
하하동동+어울림데이는 주민력을 키우고 복지공동체를 회복하는 대표적인 창녕군의 사업이다. 복지관에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이 읍과 면의 마을로 찾아가는 이동식 서비스이다. 관-관, 민-관, 민-민의 연계와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지역의 소외계층과 주민이 한마음으로 어울리며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기획되었다.

하하동동+어울림데이의 주요 서비스는 이미용, 손피부마사지, 네일아트, 수지침, 폐현수막활용체험, 복지상담, 건강관리체험코너 등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일사천리로 진행하기 위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원봉사센터 등 자원봉사기관, 기타 단체들이 힘을 보태고 있다.

덕분에 하하동동+어울림데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들은 대부분 창녕군의 주민들이다.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이수하던 주민들이 재능을 갈고 닦아 찾아가는 이동복지관에서 서비스 제공자로 변신하였다. 실제 이동복지관의 재능나눔 참여자는 2016년 532명에서 2018년 1,725명으로 껑충 뛰었다. 이동식 복지관 사업으로 창녕군의 주민들은 ‘프로그램 단순 이용자에서 복지 서비스 제공자’로 바뀌는 복지 롤모델을 제시해 주었다.

하하동동+어울림데이에 참여한 주민들은 복지, 보건, 자치에 대한 서비스를 한곳에서 받을 수 있어 좋았다는 평가를 많이 남겼는데, 원 플레이스 토탈 케어(One place-Total care)가 실현됨으로서 주민들의 복지체감도 또한 높아졌다. 주민 참

〈2018년 하하동동+어울림데이에 대한 군민 만족도 설문 결과 〉



이용자 만족도 재능참여자 만족도 프로그램별 만족도

여기반의 이동복지관 '하하동동+어울림데이'는 민관이 협력하여 군민이 만족하는 복지와 보건, 문화가 함께하는 주민 참여 기반의 보편적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한 주요 사례로 꼽히고 있다.

주민자치와 복지행정이 만나면? 상생의 해법의 나온다

-복지와 자치가 함께하면 내 삶에 플러스가 된다

창녕군은 일찍부터 주민복지지원실의 희망복지지원담당과 행정과의 행정담당이 연계를 구축하면 주민자치를 기반으로 한 복지행정이 실현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져왔다. 2017년에는 구체적으로 주민자치회를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며 주민설득과 동참을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주민 참여로 만든 자치 기반, 2018년 문 연 주민자치센터에 1,600군민 수강

2017년 말부터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2018년 1월부터는 각 읍면에 주민

자치센터를 확대 설치하였다. 전액 군비를 들여 주민자치센터 운영 예산을 확보하였는데 2017년에 1억 2,300만 원에서 2018년에는 2억 9,50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2018년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총 53개 강좌가 열려 1,600명의 군민이 수업을 들었다. 2019년에는 3억 2,400만 원의 예산이 준비돼 있다.

이밖에도 창녕군에는 자치기반을 구축하고, 주민 참여를 통한 자치 분권을 실현시키자는 목표로 다양한 교육 활동을 진행하였다. 2018년 3월에는 자치분권 아카데미를 열고 주민자치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벤치마킹도 실시했다. 7월에는 전북 완주시 고산면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 주민자치회 운영 우수현장을 견학하였다. 주민자치 박람회 및 경연대회에 참가해 주민자치 사례를 발표하고 수상도 경험했다.

-지역돌봄체계 강화 및 인적안전망 확대의 중심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다

창녕군의 14개 읍과 면은 군민이 지역돌봄체계에 대해 인식하고 안전망 확대에 참여하도록 독려하였다. 이 과정에서 읍·면과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가 함께 하자는 협약을 릴레이로 체결해 나갔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지원하는 희망울타리 네트워크도 운영하였는데 업무협약을 통한 인적안전망이 2016년 2,608명에서 2018년 5,026명으로 증가하였다.



읍면협의체위원장간담회 및 역량강화 교육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약 체결



전기검침원 업무협약

-읍면지역사회보장체, 복지리더 양성을 위한 교육과 벤치마킹에 열일 중!

읍면지역사회보장체 주도로 열린 설명회와 교육에는 1,583명이 참석하기도 하였다. 총 60회에 걸쳐 지역 복지리더의 중요성과 민관협력의 필요성 그리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가이드와 지원 방안 등을 설명하였다. 읍면동 단위의 보건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교육인 만큼 교육도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였고, 교육 내용

은 주민의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역량 강화에 집중되었다.

또한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간복지리더의 중심이 되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의 인식확산'이라는 주제로 교육을 받고, 지역 복지 우수 지역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과 워크숍도 개최하였다. 희망울타리 복지리더 교육과 간담회, 통합사례관리 민관협력 회의체 교육도 계속됐다.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주도 하에 14개 읍면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비전 설정과 연간계획 수립을 완수하였다. 사업 진행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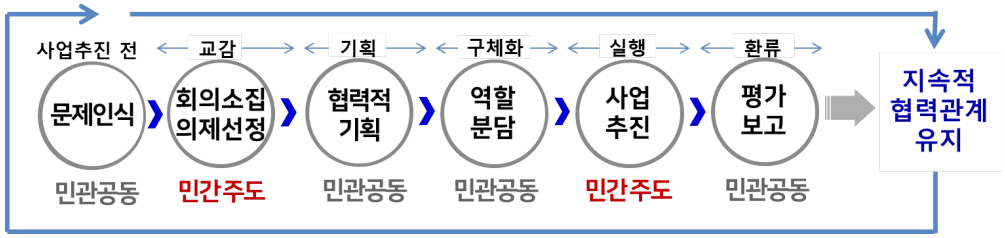
구분	계	발굴	위기지원	돌봄	문화	주거
사업개수	58	11	12	15	11	9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각지대 없는 복지강군(强郡) 창녕을 기대한다!

2019 창녕군의 새로운 도전! 주민자치회로 날개를 달자

2019년 창녕군은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조례 재·개정과 주민역량 교육, 주민자치회 구성, 주민참여 예산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2018년 11월 주민참여예산위원 20명을 위촉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개정하기도 하였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 창녕군의 주민주도 사업은 더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주민주도 사업은 문제인식에서 회의소집과 의제설정, 협력적 기획, 역할분담, 사업추진, 평가보고로 이루어지는데 회의소집과 의제선정 그리고 사업추진에서 민간 주도가 두드러진다. 지속적 협력관계 유지에도 주민자치회의 노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강군을 위한 힘찬 날갯짓에 주민들의 복지체감도는 올라간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동동그리미와 무연고·독거노인 돌봄사업으로 복지체감도 업&업!

2019년에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체계를 더욱 촘촘하고 탄탄하게 만들기 위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동동그리미를 운영할 예정이다. 모두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마을을 함께 그려가는 사람들을 뜻하는 '동동그리미'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복지위기가구에 대한 초기 위험감지와 복지욕구 파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로써 군민의 복지 체감도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5.7.4 GO ! 나들이 사업'도 실시 예정이다. 이 사업은 특수시책으로 무연고 노인이나 가족·사회로부터 소외된 독거노인에게 오일장 나들이 체험을 제공함으로써 정서적 지지와 연대감 형성을 위해서 기획되었다. 신체·정신적 안정을 도모하는 역할도 기대된다.

또한 IoT기기 설치를 통해 고독사 등 위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독거노인 안심지킴이 사업도 추진 예정이다. 무연고 노인 및 거동불편 독거노인이 사는 방이나 거실에 움직임을 실시간 감지하는 기기인 만큼 고독사와 위급상황에 대한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재능기부 프로그램으로 아이는 행복, 부모는 안심

2017년도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또바기돌봄센터 1호점이 2018년 2월 남지종합복지관에 문을 열었다. 초등학생 저학년을 대상으로 방과 후 무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숙제지도, 보충교과학습, 독서교육, 일상예절교육, 위생교육, 안전귀가지도 등 전담 돌봄교사가 주도하는 프로그램과 지역의 전문인력의 재능기부로 이루어진 특기적성 창의활동 프로그램으로 부모들의 만족도도 높다.

최근 창녕군은 사회복지타운에 또바기돌봄센터 2호점도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로써 창녕군사회복지타운은 우리아이함께키움터와 드림스타트,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다양한 돌봄시설이 모여 있게 되어 영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이 논스톱으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마지막까지 행복한 삶을 위한 치매환자와 고위험 노인을 위한 서비스

100세 시대를 맞아 치매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창녕군은 창녕읍과 남지읍에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해 지역주민들에 본격적인 치매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치매안심센터는 조기검진을 위해 치매선별검사를 연중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며, 인지저하 2차 검사비용 및 진단 환자 치매약제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이 밖에도 치매환자 및 치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체조, 노래교실, 공예교실 등 다양한 인지재활 및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노년기 뇌 건강 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창녕군 12개 마을사업들〉

창녕군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다양한 복지시책과 마을사업을 추진하며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복지천국 창녕'을 실현하려 한다. 아이부터 노인까지 누구하나 소외됨 없는 창녕군을 만들고 여성·장애인 등 또 다른 사회적 약자 계층을 위한 복지시책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주민 주도의 보건복지문제 해결 교육을 강화하고 군민이 만족하는 '농촌형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추진하며 복지와 보건, 자치와의 업무 협력을 통해 마을복지 공동체의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다.

2019년에는 더 나은 복지강군(强郡) 창녕을 기대한다!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06

군민이 주인 되어 함께 만드는 '행복창조도시' 홍천!

강원도 홍천군









주민이 주인되는
공공서비스
주인공

06 군민이 주인 되어 함께 만드는 '행복창조도시' 홍천!

강원도 홍천군

2018년 1개 지방자치위원회 ➜ 2020년 10개 지방자치회' 한번 해 봅시다!

홍천군은 전체 면적이 1,819.02㎢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넓은 면적이다. 수도권과 1시간대 접근성, 수려한 자연자원을 바탕으로 수도권 배후의 전원생활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특히 150km의 홍천강을 중심으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넓고 큰 강과 산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지역적 특색을 바탕으로 홍천군은 전국 최초로 전원도시 귀농, 귀촌 특구로 지정되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전원도시로서 홍천군은 건강플러스를 지향하고 새로운 지역문화를 형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18년 말 홍천군의 인구는 약 7만 명으로, 1개 읍(홍천읍)과 9개 면(화촌면, 두촌면, 내촌면, 서석면, 동면, 남면, 서면, 북방면, 내면)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인구 분포를 살펴보면 1개 읍에 약 3만 4,000명(51%)이 거주하고 있어 인구 밀집이 심하고, 지역 편차도 큰 편이다. 특히 전체 인구 중 14세 미만 인구의 70.8%가 화

천읍에 거주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66%는 면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 특성을 복지와 행정에 반영하는 데는 상당한 한계가 따른다.

주민자치 실적을 살펴보면 2018년 현재 10개 읍면 중 1개 면(동면)에만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가 존재하고 있다. 행정과 복지의 한계를 극복·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가 없다보니 군민들의 민원도 다양하게 발생하였다.

〈홍천군의 지방자치회 추진 목표〉

(1단계) 사전준비('18년)	**(2단계)** 시범실시('18~'19)
(3단계) 주민자치회 구성('19)	**(4단계)** 주민자치회 운영 안정화('20)

이에 홍천군은 군민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주민자치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민선7기 출범 후 홍천군수와 가진 읍면 첫 만남 행사에서 '풀뿌리 민주주의 기반 조성'을 주민과의 약속사항으로 선정하였다. 이를 위한 사업으로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고 미설치 9개 읍면에 주민자치회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018년 사전준비, 2019년 시범실시와 주민자치회 구성, 2020년 주민자치회 운영 안정화를 목표로 주민자치회 구성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홍천군은 전 읍면에 주민자치회를 구성한 후 주민자치회를 통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중요사업을 결정하고 예산도 협의하고자 한다. 이로써 주민자치회와 군정이 동반자적 역할을 실현할 것이다.

밝은 미래, 희망찬 홍천! 주민의 손으로 만들어 간다

'준비-구성-안정화' 3단계로 주민자치회 활성화 완료!

-홍천군 지방자치회의 마중물, 2018 주민자치회 구성 계획 수립

홍천군의 주민자치회 구성 추진 계획수립이 완료된 것은 지난 2018년 9월 29일이다.

추진 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단계 사전준비 단계에 조례의 제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2019년 1월 현재 홍천군은 관련 조례의 입법예고를 마쳤다.

2단계 사업예산편성 시범실시 단계에서는 주민자치회 기능 중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읍면 이장 협의회를 통한 사업예산편성 시범실시도 진행한다. 시범실시에서 장단점을 분석한 후 환류 작업도 거치기로 하였다. 단, 주민자치회 사업은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과 주민생활에 밀접한 사업으로 한정한다. 이 역시 장단점을 분석한 후 추진방향과 대안도 마련할 것이다.





3단계(~2019년) 주민자치회 구성은 10개 읍면 주민자치회 구성 및 위원 위촉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019년 2월 10개 읍면 주민자치회 구성 및 위촉의 완료를 위해 기 운영 중인 동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주민자치회 대상 기본교육 및 역량강화 교육이 2019년 1회 추경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예산 편성 등도 예정되어 있다. 교육은 주민자치회 대표자, 위원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확대실시에 따른 위원의 역할,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우수사례 공유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2019년 3월에는 주민자치회 대표자 워크숍이, 4월에는 주민자치위원 전체 교육이 예정돼 있다. 권역별 주민자치위원 자치력 함양교육도 기획 중이다.

4단계(2020년~) 주민자치회 운영 안정화 단계에서는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마을별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읍면별 마을계획(자치계획) 수립으로 주민자치회 운영을 안정화하고, 주민자치 활동 및 공동체 형성에 기여한 우수 주민자치회도 선정할 예정이다. '홍천군 주민자치 대상'을 신설하고 3개 자치회를 선정해 사업비를 교부하는 부상도 계획하고 있다.

-주민자치의 밑바탕, 조례 제정으로 큰 그림을 그리다

홍천군은 주민자치회 구성 계획 수립 이후 '홍천군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

제정을 추진하였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례 주요 내용〉

- 읍면별 15명 이상 25명 이내로 읍면 주민자치회 별 자율 결정
-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행정안전부)을 준용하되, 농촌 특성을 감안하여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 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이수 조건 명시
- 주민총회를 통한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대비 자율성과 평가 실시
- 자체 성과평가 결과에 대하여 워크숍 개최 또는 온라인 공유·비교평가 등을 병행 실시하여 주민자치회 스스로 자율통제 강화

2018년 12월 4일 홍천군은 '국민참여 입법센터'에 '홍천군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를 게시하였다. '홍천군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를 게시한 것이다.

조례의 입법 취지는 주민자치 위원의 대표성 확보 및 책임성 제고 등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읍·면별 주민자치회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자치회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 중심의 권한 강화를 통한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실현하고, 주민의 민주적 참여의식 고취 및 실질적 주민자치의 기반조성을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다음의 5개 항이다.

〈조례 주요 내용〉

가. 주민자치회 등 용어에 대한 정의 (안 제2조)

나.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규정 (안 제4조~제5조)

다.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안 제6조~제16조)
  - 위원의 자격 및 권한, 위원의 선정 등

라. 주민자치회 위원의 의무 및 임기에 관한 규정 (안 제17조~제21조)

마.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안 제22조)

-교육과 토론으로 알리고, 나누고, 함께하다

조례 제정까지 홍천군은 다양한 사전 사업들을 펼쳤다.
일례로 2017년 9월 26일 홍천군은 홍천군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운영하였다.

홍천군은 지난 2009년 조례를 제정하고,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홍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9건의 주민건의사업을 2017년 예산에 반영한 바 있다. 2017년에도 8월 31일까지 읍면사무소와 군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건의사업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해 예산안에 반영했다.





홍천읍사무소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주민참여 예산학교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올바른 참여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참여예산제도, 자치와 참여로 가는 시민정치'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2018년 주민자치 관련 예산으로 총 2억 1,135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이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5,625만 원, 사랑방(북카페) 운영 및 시설관리비 1억 5,510만 원으로 구성된다.

한편 홍천군은 2018년 10월에는 홍천군농업기술센터 제1교육장에서 '2018년 창조마을 만들기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주민 스스로 지역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공동체 의식함양과 자율참여를 유도해, 주민의 역량강화 차원에서 기획된 사업이었다. 행복창조도시 조성을 위한 마을만들기 사업추진 일환으로 300만~500만 원의 재료비를 지원해 마을별 특색에 맞는 자율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49개 대상마을에서 대상, 최우수, 우수상 각1개 마을을 선정하여 1억 원, 8,000만 원, 7,000만 원의 부상을 수여하였는데 부상

은 향후 창조적 마을 만들기 기반마련을 위한 용도로 사용될 예정이다.

2019년에 홍천군은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활성화를 위해 워크숍과 교육 등 주민자치 위원 대상 사업비로 4,000만 원이 편성돼 있다. 2월에는 주민자치회 구성을 위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고 홈페이지, 언론, 주민 간담회에서 주민자치회 운영 취지와 수행 업무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간담회는 읍면장 및 군 총무담당, 읍면 직능단체 및 이장 대상으로 준비되고, 군민대상 홍보교육도 실시 예정이다. 3월에는 읍면 주민자치위원장과 임원 50명을 대상으로 한 주민자치회 대표자 워크숍이 예정돼 있다. 워크숍에서는 지역대표자로서 역할 교육과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 등이 포함돼 있다. 4월에는 읍면 주민자치위원 150명을 대상으로 한 주민자치회 전체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전체 교육에는 주민자치 관련 기본교육과 주민자치위원의 역할 및 활동방향 교육 등이 포함돼 있다. 권역별 주민자치위원 자치력 함양교육은 권역별 주요 현안 및 주민자치 활성화교육, 우수사례 공유 등의 내용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홍천군은 이 밖에도 지역공동체 회복과 주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 참여형 특화발전을 도모해 마을공동체가 더욱 활성화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다양한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

‘군민이 주인 되고 함께 하는 책임 행정’으로 홍천의 미래가 바뀐다

2018년 4월 홍천군에는 색다른 마을교육공동체가 출범하였다. ‘새끼줄’이라는 이름으로 홍천군 동면 속초리에 속한 이 공동체는 속초초등학교와 동화중학교 선생님들과 학부모, 마을자치기관, 주민자치위원회, 마을 주민, 지역 유관기관 등 마을전체가 함께 합심해 만들어졌다. 원주민과 귀농·귀촌인, 어른과 아이 등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융합할 수 있는 마을 문화를 꿈꾸며 문화공동체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주민이 자발적으로 지혜와 힘을 모아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의 활성화를 이루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주민자치의 실천일 것이다. 홍천군은 이러한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활성화의 흐름에 따라 홍천군은 대대적인 교육과 벤치마킹을 통해 공무원과 군민이 변하고 수준 높은 군민의 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발전을 만들고자 한다. 더불어 군민의 의견과 제안이 각종 정책과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홍천군은 넓은 면적과 긴 강 주변의 풍부한 관광명소, 수려한 자연자원, 천혜의 입지 등을 바탕으로 도시의 편리함과 농촌의 전원생활을 결합한 각광받는 도농복합형 생태환경도시이다. 앞으로 정주여건 개선과 귀농 귀촌 지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통해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여 '꿈에 그린 전원도시 홍천'을 실현하고 '밝은 미래 희망찬 홍천'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홍천군의 공무원과 군민은 합심해 나갈 것이다.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07

‘역량강화 → 자치활성화 → 사업확대’ 복지와 자치의 담양형 선순환 구조

전라남도 담양군









주민이 주인되는
공공서비스
주인공

07 ‘역량강화→자치활성화→사업확대’ 복지와 자치의 담양형 선순환 구조

전라남도 담양군

인구감소와 고령화를 맞춤형 자치로 극복하고 지역 활성화 꿈꾼다

담양군은 농업이 전체산업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이다. 도시근교에는 원예농업이 발달되어 있고 꾸준히 관광산업도 증가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와 인접한 청정지역으로 전원생활권으로 관심을 받으며 최근 외지인의 유입도 증가하고 있다.

다만 여느 농촌지역이 그러하듯 담양군도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인구 증가, 산업의 변화로 인한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담양군의 인구는 1965년 약 13만 명으로 지금의 2.5배에 달했다. 이후 1979년 9만 명, 2008년에는 5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2018년 12월 현재 담양군의 인구는 약 4만 8,000명으로 그 중 65세 이상이 1만 3,704명을 차지한다. 담양군의 고령화 인구는 28.4%로 상당히 높다. 1980년대 7.3%에 그쳤던 고령화 인구는 1990년대에는 11.1%, 2000년에는 18.3%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고령화 속도도 매우 가팔랐다.



읍·면 주민자치회 우수사례 발표 대회



주민자치 300인 토론대회

지난 반 세기 간 담양군의 변화는 단순히 인구의 감소, 노인인구의 증가만이 아니다. 과거 지역 공동체가 활성화 돼 있던 때에는 마을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일이 많았으나 마을 공동체가 해체되고 행정서비스가 강화되면서 마을 문제의 해결 주체가 주민에서 관으로 이관됐다. 물론 행정 서비스의 강화도 마을 문제 해결의 주체를 변화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담양군의 인구 변화와 행정서비스의 강화는 마을 공동체를 약화시켰고, 기존에 마을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던 기능이 상실되고 말았다.

담양군은 지방자치화가 활성화되면서 주민이 중심이 되는 마을공동체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최근에는 주민들 사이에서도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조성을 위해서는 제도개선과 기본조건 마련, 민관협력 사업들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덕분에 담양군의 관과 민은 마을단위의 주민참여를 통해, 주민이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마을의 주인이 되어 마을 문제를 해결에 나갈 수 있도록 뜻을 모으고 있다. 진정한 의미의 자치 실현을 위해 복지와 자치에서 주민 주도형 사업이 펼쳐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단계별 주민자치 활성화 계획〉

단계	주요 내용	사업 내용
1단계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방향 설정 및 기반구축	마을 활성화 공동 정책개발 마을자치회 창립 및 운영관련 매뉴얼 개발 마을자치 관련 홍보 및 교육자료 제작 마을자치회 시범운영 사업
2단계	마을리더 등 마을공동체 구성원 역량강화	담양식 농촌형 주민자치대학 운영 마을주민자치 전문가 육성 찾아가는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
3단계	민관 협업을 통한 주민자치기반 구축	마을공동체 민관 협치 시스템 구축과 운영 주민주도형 마을자치회 모델발굴 및 육성시스템 구축 읍·면 주민자치회 활성화
4단계	마을공동체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및 네트워크 강화	담양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민관협업 조직간 공유공간 네트워크 활성화 담양군 마을자치 플랫폼 조성
5단계	지속가능한 자립형 마을공동체 육성	마을자치회 창안대회 개최 자립형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등

“담양의 성장 동력은 주민에게 있습니다!” 담양의 새로운 미래, 주민자치 시대

담양의 지방자치 포문을 열다!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 시행

담양군은 2017년 12월 담양군의회에서 ‘담양군 주민 자치 활성화 조례’를 수정 가결시킴으로서 명실상부한 주민자치 시대를 열게 되었다. 주민 자치 활성화 조례로 마을의 다양성과 특색을 살린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근간이 마련되었다.

담양군이장연합회와 주민자치연합회 및 주민 1,476명이 발의한 ‘담양군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는 읍·면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한 읍·면주민총회와 주민자치연합회의 제도화, 마을자치회 도입, 갈등조정위원회 신설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주민자치 학교 운영도 포함된다.

물론 처음부터 조례제정이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다. 이장연합회 및 주민자치연합회에서 마을별 특색을 반영한 마을자치회 구성 및 읍·면 주민자치회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복리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청구했지만 조례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일부 주민 및 사회단체, 군의회에서 반대가 있었다. 이를 위해 담양군은 주민공감대 형성과 주민의견 반영에 나섰고, 주민 및 사회단체 대상으로 주민설명회와 제정조례에 대한 간담회도 개최했다. 많은 만남은 의견수렴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는 조례에 반영되었다. 군의회 주관 전문가 간담회 개최 결과와 주민자치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도 종합적으로 반영되었다.



주민의견수렴



담양군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

이러한 과정 끝에 조례 제정이 이루어진 결과로, 담양군은 행정의 기본단위인 마을과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읍·면 주민자치회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게 됐다. 농촌형 주민자치의 혁신적인 모델 지역으로서 주민이 주체가 되는 자치를 펼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고, 마을 자치회를 통해 실질적인 참여예산 제도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담양군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는 담양군 최초 주민발의 조례로 추진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 조문에 대한 추가 의견을 제시하는 등 주민주도형 자치 조례라는 특징을 갖는다. 담양군 이장단 및 주민자치 연합회와 전문가 및 법제처, 대통령 소속 지방발전위원회, 담양군과 군의회의 검토를 거쳐 완성된 조례로 소통과 합의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자! 마을자치회 운영과 주민총회 개최

행정의 지나친 개입은 개인이 공공문제에 무관심하고 스스로의 자유와 권리에만 집착하는 이기주의적 모습을 만들어낸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자치행정과 주민자치 전담팀을 운영하는 담양군은 삶이 즐겁고 행복한 농촌형 마을 공동체 조성과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것을 직시하고 농촌형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을 펼쳐왔다.

마을자치회는 주민 간 협력과 연계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정보의 교류와 상호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자치 환경 및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운영에 꼭 필요한 기구이다. 하지만 주민들의 마을자치회 참여 저조와 이장, 읍·면 주민자치회의 추진의지 부족 등으로 자치회 설립은 쉽지 않았다. 담양군은 마을자치회 시범운영을 통해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및 우수 마을자치회를 모델화하여 마을자치회의 확대를 도모하였다.

이를 위해 회의진행 및 서류작성 등을 지원하여 마을자치회의 기반을 조성하기로 하고 주민자치대학 등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주민공감대 형성 및 자치인력도 육성하였다. 또한 주민세 환원사업과 디딤돌사업 등과의 연계를 통해 마을자치회에서 논의된 사업을 실현시킬 수 있는 사업연계도 지원하였다. 이후로는 환경, 복지, 소득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 마을자치회를 발굴하여 마을자치회 홍보에도 나섰다.



마을자치회 운영(청촌마을)



마을자치회 운영(무월마을)

이러한 노력으로 30개소에서 '담양식 마을자치회'를 시범 운영하게 되었다. 각 마을자치회는 마을 특화사업을 펼쳤는데, 청촌마을자치회는 마을규약 작성, 경관 개선, 마을축제 운영 등을 하였고, 무월마을자치회는 농촌체험과 연계한 소득형 마을자치회를 운영하였다. 42개 가구에 불과한 소담한 산골마을인 용오름마을자치회도 지역 어르신 돌봄을 운영하는 등 복지형 마을자치회를 운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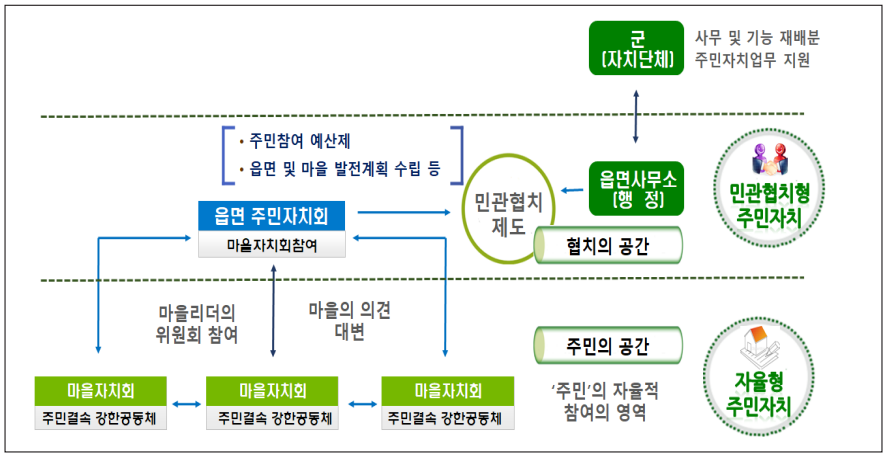
더불어 2개 주민자치회에서는 주민총회를 열고 23개 과제를 발굴하였다. 창평면 주민자치회는 학교 앞 신호체계구축, 보행자 보호, 문화센터 설치 등 14개 과제를, 고서면 주민자치회는 아름다운 고서면 만들기, 생각나눔강좌 운영, 빈집을 활용한 고향의 집 조성 등 9개 과제를 발굴하여 시행하였다.

상향식 주민자치 시스템이 뭐예요? 마을의 의제가 군의 행정에 반영됩니다!

과거 주민자치회는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보니, 대부분의 읍·면 주민자치회가 행정기관 주도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었다. 자치 주체인 주민에게는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지 않아 활동에도 제약이 많았다. 주민자치위원의 지역대표성, 자치역량, 적극적 활동의지 부족으로 주민자치의 구심점 역할 수행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담양군은 교육을 통해 주민자치회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세 활용 주민자치사업 추진, 참여 예산제도 확대 등을 통해 주민자치회에 권한을 부여하였다. 또한 상향식 주민자치회 운영을 통해 주민이 주민자치의 주체가 되어 각종 정책 결정 등 군정 운영에 참여토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마을자치회에서 읍·면주민자치회를 거쳐 읍·면사무소와 군의 행정으로 연결되는 주민자치 거버넌스 시스템을 완성한 것이었다.

상향식 주민자치 시스템은 크게 3가지 사업으로 이루어졌다. 첫째는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교육 및 주민자치대학 운영 등을 통해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 사업이다. 둘째는 주민세 활용 주민자치특화사업 추진, 주민참여예산제 사업 우선순위 선정 권한 부여, 주민총회 개최 등을 통해 읍·면주민자치회에 권한을 부여하는 권한강화 사업이다. 셋째는 읍·면주민자치회 및 연합회를 상시 운영하여 마을 현안사업이 마을자치회, 읍·면주민자치회, 주민자치연합회 운영위원회, 읍·면사무소, 군으로 연결되는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한 운영강화 사업이다.



상향식 주민자치 시스템 기본모형



주민자치 연합회 운영

이러한 과정에서 4개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세를 활용 주민자치사업을 추진하며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다. 담양읍 주민자치회는 폐지 손수레 지원을 통한 광고사업을, 봉산면 주민자치회는 원예농가에 폐지수거함 설치 및 운영사업을, 고서면 주민자치회는 토론대회 및 소식지 발행을 진행했다. 창평면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를 개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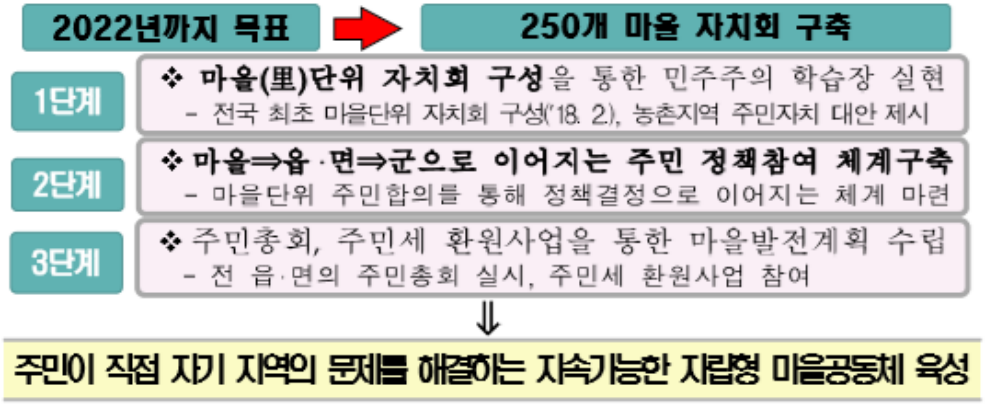
앞서 설명한 대로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예산사업 순위선정에 대한 권한도 부여받았다. 읍·면주민자치회 별로 우선순위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후 39건 사업을 발굴하여 12억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자치역량 강화→마을자치회 활성화→주민자치사업 확대' 선순환 구조로 자립형 마을공동체 육성할 것

마을자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 학습장과 행복한 민주공동체로서의 기능을 한다. 주민편의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면 주민자치가 실현되고. 마을 주민 스스로 행복한 마을공동체를 구현할 수 있다. 마을의 경쟁력 향상은 지역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담양군은 이러한 기조로 주민자치 중간조직인 담양군 풀뿌리 공동체지원센터를 운영해왔다. 센터장 1명을 포함해 3명이 활동하는 센터는 디딤돌 사업을 통한 80여개 마을공동체를 육성하고 교육을 통해 100여 명의 마을리더도 육성하였다. 또한 담양군 310개 마을자원지도를 작성하고 16개소의 마을자치회 시범사업에 대한 마을 교육도 지원하였다.

2018년까지 마을만들기 통합 지원센터로 활동한 담양군풀뿌리공동체지원센터는 2019년부터는 주민자치, 마을만들기, 사회적경제, 도시재생통합 중간지원조직으로 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더불어 앞으로도 담양군은 풀뿌리 공동체지원센터 등을 활용해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교육을 강화하고 자치역량을 키워나갈 것이다. 주민자치대학을 운영해 자치인력을 육성하고 주민자치위원의 역량을 높여 자립형 마을자치회 운영을 실현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또한 마을계획 수립단을 운영해 마을계획 수립에도 착수하고 시범사업 추진과 우리마을 주무관 제도로 활성화해 주민자치회가 마을을 활성화하는 중추적인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2018년 30개소에 그친 마을자치회를 2019년에는 80개소로, 2022년에는 250개소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마을자치회가 증가하면 주민세 활용 주민자치사업 및 주민참여 예산제도도 확대되어 “주민이 직접 자기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속가능한 자립형 마을공동체”도 성공적으로 육성될 것이라 기대한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우수사례집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08

‘행복한 변화, 살고 싶은 당진’ 그 비결은 주민 스스로의 힘!

충청남도 당진시









주민이 주인되는
공공서비스
주인공

08 '행복한 변화, 살고 싶은 당진' 그 비결은 주민 스스로의 힘!

충청남도 당진시

주민 갈등 해결과 행정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자치'가 필요합니다

충청남도 내포지방에 위치한 당진시는 과거 넓은 평야를 기반으로 쌀 농업의 중심지였으나, 2000년 서해대교 개통과 현대제철 등 철강산업이 들어서면서 산업도시로 변모하였다. 704㎢로 서울시(605㎢)보다 넓은 면적에 16만 7,000여 명이 거주하는 천안, 아산, 서산에 이어 도내 네 번째 도시이기도 하다.

당진시는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여 2012년, 도농복합시 제도 실시 이후 세 번째로 비수도권 지역에서 도농복합시로 승격하였다. 합계출산률(1.65명) 면에서 전국 시 단위 1위이고, 고용률(70%)도 전국 시 단위 2위를 나타내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는 도시이기도 하다.

그러나 도시의 성장과 맞물려 지역사회는 점차 다원화되고 있다. 점차 주민 간 갈등도 빈번해져 기존 관주도 행정으로는 주민 갈등과 욕구 해결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당진시는 주민의 자치력 강화와 주민자치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당진시 중심권 전경〉



〈당진의 현대제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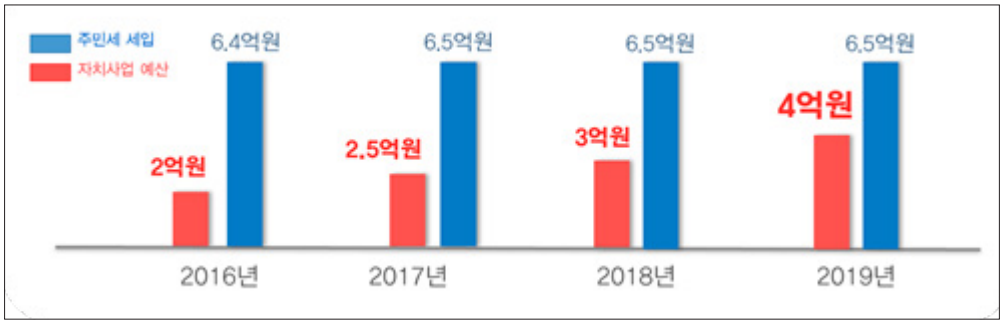
누구나 차별 없이 목소리를 내고, 모두가 모두를 위해 나설 수 있는 당진시입니다

실질적 참여예산의 실현! 주민이 낸 세금, 마을사업으로 돌려드립니다

당진시는 주민이 찾아낸 마을사업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주민세 재원을 활용하도록 하였다. 주민자치위원회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마을사업을 능동적으로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다.

기존에 실행하던 참여예산은 그 한계로 인해 주민이 제안한 마을사업 대부분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장되는 경우가 많았다. 당연히 실행력도 떨어졌다. 이에 당진시는 주민조직이 사업예산을 직접 지원받아 능동적으로 마을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였다. 물론 조례 제정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당진시 주민자치협의회 조례'가 시의회와의 오해와 갈등으로 폐기된 적도 있었다. 하지만 다양한 공감대 형성 과정을 거쳐 주민세를 마을사업 실행예산과 연동하기 위한 조례 개정의 제도정비 과정이 마무리 되었다.

조례 개정은 2016년 보조금 지원근거를 삽입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이로써 당진시는 2019년 기준 개인균등분 주민세 대비 61.5%인 4억 원의 예산을 마을사업에 편성하였고, 2020년까지 주민세(6.5억 원) 전액을 주민자치사업에 연동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주민세와 주민자치사업 예산이 100% 연계되도록 주민형 마을계획과 주민총회를 모든 읍면동에 확대 적용하고자 한다.



개인균등분 주민세와 주민자치사업 실행예산 증가 추이

요약하면 당진시는 주민세를 낸 주민들이 주민총회에 참여해 필요한 마을 사업을 선정하고 여기에 주민세가 지원되는 주민참여의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주민 주도 마을사업의 공론장, 읍면동 주민총회로 시작합니다

물론 주민주도 마을사업의 시작은 순조롭지 않았다. 초창기에는 기존 의사결정을 주도했던 기득권층의 반발이 있었고, 생소한 시책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무관심은 큰 걸림돌이 되었다. 마을사업의 실행과정에서 민주적 절차와 공감대 형성이 미비하다는 지적도 일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자치위와 지역주민이 마을사업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주민총회를 거쳐 공론화를 모색하였다. 주민자치위를 중심으로 마을사업 실행은 이뤄지고 있으나 사업결정 및 실행과정에서 주민참여가 저조하다는 것을 알리고 보완책 마련을 위해 주민들이 나서줄 것을 독려하였다.





첫 읍면동 주민총회 개최 현장

이러한 과정을 거쳐 주민자치위가 '읍면동 주민총회' 개최의 핵심기능을 담당하고, 각계각층 주민과 함께 마을사업 발굴에 나서자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노력의 결실로 2018년 지역 14개 읍면동 중 희망 5개 읍면동에서 주

민총회를 성공리에 개최하였고, 마을사업도 18건이나 결정되었다. 참여한 주민 수만 1,153명(계획단 237, 총회 914)이나 되었다.

마을사업 참여	자치위원	일반시민	고등학생	다문화
237명	24명	133명	57명	23명

주민총회 참여	송악읍	신평면	당진1동	당진2동	당진3동
902명	284명	183명	165명	87명	183명

총회결정 사업	예산지원	시민공모	도민공모	행정건의
18건	7건	4건	3건	4건

각계각층의 주민이 지역에 관심을 갖고 마을계획의 수립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론장이 마련되자, 기존에 제한된 참여계층이 의사결정을 주도하던 문화가 모든 주민이 참여하는 형태로 혁신적으로 변화하였다.



평등한 참여기회, 사전교육 및 공개추첨으로 실현합니다

공론장 마련을 통해 주민자치위의 기능은 점차 주민참여 중심으로 변하고 있었다. 그런데 일부 위원회는 기존 사회단체와 마찰을 빚으며 해체와 결성을 반복하기도 했다. 자치위원 참여가 기존 기득권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당진시는 기존 기득권을 타파하기 위해 폐쇄적인 위원 모집과 선정 과정을 누구나 평등하게 참여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우선 관련 조례에 사전교육을 자치위원 필수자격으로 명시하고, 교육이수자는 누구나 위원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의 선정은 공개추첨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이 과정에서 절차적 기준 부재, 공개추첨에 대한 위원

역량 감소를 우려하는 주민의 불만이 제기 되기도 하였으나 공개추첨에 관한 세부적 운영지침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애로 사항을 극복하였다.

결과적으로 자치위원 선정방식 변경 이후 400여 명 모집에 528명이 참여를 신청하였고, 430명이 사전교육을 이수하였다. 초과자가 발생한 4개 읍면동은 공개추첨으로 자치위원을 선출하였다.



주민자치위원 사전교육 및 공개추첨 현장

학생부터 어른까지 쉽고 재미있게, 주민자치 교육극 '콩나물'이 찾아갑니다

주민자치위의 활성화를 진행하며 시민과 공무원에 모두 자치력 함양을 위한 효율적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였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역량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획일화된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교육 참여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교육이수 실적에만 초점을 맞춰 진행하면 교육 참여가 저조하고 강제적으로 참여자가 동원되어 주민과 공무원의 반발도 일어날 터였다. 이에 당진시는 실생활의 주민자치 사례를 연극으로 구성하여 재미와 함께 참여 필요성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지역극단과 함께 다양한 주민자치 사례를 교육극으로 구성하여 주민자치 교육극 '콩나물'이 탄생했다.

'콩나물'은 2017년부터 주민자치위원, 공무원, 학생 등을 대상으로 총 28회 공연되었으며 5,300여 명이 관람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중앙 및 도,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등에 초청되어 소개되기도 하였다.




주민자치 교육극 '콩나물' 공연 현장

갈등해결부터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까지, 마을사업이 앞서갑니다

당진시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6개 분야(지역갈등 해소, 주민갈등 사전 예방, 청소년 연계 자치사업 전개, 마을만들기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소통과 화합의 장 마련) 58개 주민주도형 마을사업을 발굴·시행하였다.

일례로 신평면 거산리에는 축사에서 나오는 분뇨로 인해 악취가 잠잠할 날이 없어 주민 간 갈등의 골이 깊었다. 9개 단지에서 7,000여 명이 사는 도심과 인근 양돈·양계 농가가 악취로 인해 10년 넘게 대립하고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평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먼저 나섰다. 축산 농가와 주민 사이를 오가며 대화의 물꼬를 트고 4번의 만남도 주선했다. 그리고 2018년 말 아파트 주민과 농가, 주민자치위원회가 상생을 약속하며 갈등이 봉합됐다.

당진3동은 행정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주민자치위원회가 열일을 한다. 주민자치위원회가 마을 회관을 돌며 사랑방 토론회를 열고 나온 이야기들을 행정에 전달한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연습한 실력으로 공연도 펼쳤다. 공동체에 대한 강의도 진행했다.

① 주민이 주도하는 소통으로 지역갈등 해소 - 20년 동안 지속된 공동주택↔아파트입주민 악취 갈등 - 주민자치위 참여, 주민-축산농가 실무협의회 구성 - 1차, 2차 회의를 통해 분야별 역할이행 상생협약 체결 - 분기별 1회 정기소통채널 개설로 지속적 사후관리	 신평면 축산농가-주민 상생협약
② 마을토론회 활성화로 주민갈등 사전 예방 - 자치위원회가 마을단위로 찾아가 사랑방토론회 개최 - 주민대상 공동체 교육 및 지역갈등(문제) 발굴 소통 - 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의 재능기부로 문화사각 해소 - 발굴된 민원(갈등)은 위원회 토론을 거쳐 공론화 진행	 당진3동 사랑방 토론회
③ 청소년과 연계한 자치사업 전개(당진2동 외 3개 지역) - 청소년 주민자치 동아리'나라찬'구성 운영 - 청소년 참여 100인 토론회 개최 ➔ 제안사업 공모신청 - 청소년 꿈 코칭 프로그램 운영 (직업체험 탐방) - 부모님과 함께하는 지역문화탐방단 운영	 청소년 100인 토론회
④ 마을만들기(주민공동체) 사업 추진(송산면 외 3개 지역) - 마을소식지(월1회) 및 주민참여 마을지도 제작 배부 - 교차로, 등굣길 등 경관개선을 위한 벽화그리기 사업 - 방치된 폐화분 활용 우리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 - 취약계층 도시락 배달사업(독거어르신, 취약 청소년)	 송산 교차로 경관개선
⑤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송악읍 외 3개 지역) - 상록수 농특산물 꾸러미 사업 (총 7차 진행 중) - 문화가 함께하는'우리마을 직거래 장터'개설 - 전통시장 작은 영화관 및 시장국수 먹는 날 운영 - 지역연고 대학생(학교) 참여 농촌일손 덜어주기 추진	 송악 상록수 꾸러미 사업
⑥ 지역주민의 소통과 화합의 장 마련(순성면 외 8개 지역) - 지역주민 향토음식 경연대회(11월) - 마을어르신 화합 한마당(팔순잔치, 10월) - 당진천 이팝나무길 걷기대회(5월) - 주민과 함께하는 가을 추억만들기 행사(9월)	 순성 향토음식 경연대회

도농복합도시 특성 살린 주민자치회 모델, 당진시가 만들고 실현하겠습니다

당진시는 2018년 5개 읍면동에서 주민총회를 마쳤다. 2019년에는 전체 14개 읍면동 모든 지역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019년 상반기에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이 담긴 조례를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주민자치회의 출범을 준비하려고 한다.



〈삼선수목원에서 개최한 H-Steel 아틀리에〉

더불어 당진시는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을 활용해,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어디서나 적용 가능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모델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주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주민들이 주민총회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도심지역	마을계획단에서 사업 발굴	주민총회 개최	마을사업 시행
도심지역	마을계획단에서 사업 발굴	• 마을사업별 실행 동의 (주민 1% 이상 참여 목표)	• 마을사업별 실행 동의 (주민 1% 이상 참여 목표)

〈도시형과 농촌형의 참여모델을 적용하여 합리적 접근방법 모색〉

당진시는 주민 스스로 살기 좋고 행복한 마을을 가꾸어 나가는 '당진형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주민의 힘을 키우고 있다. 앞으로도 주민주도형 마을계획과 주민총회로 모든 읍면동의 주민자치회가 주민 참여의 중추로 기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우수사례집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09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시민주권특별자치시에서 실현합니다

세종시









주민이 주인되는
공공서비스
주인공

09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시민주권특별자치시에서 실현합니다

세종시

젊은 도시 세종, 자치분권의 선도·모범 모델로 성숙해 간다

세종시는 행정기관 중심의 도시로 중간행정기관이 없는 단층제 광역자치단체로 신속한 정책집행이 가능하다. 게다가 신규 주민 이주에 따른 평균연령 36.7세(전국 평균 41.3세),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이다. 또한 행정과 문화, 복지, 체육시설 등 공공편익을 제공하는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신도심에 10개, 읍면 단위에 1개가 설립(2026년까지 신도심 22개, 읍·면 10개 건립예정)되어 시민 커뮤니티가 활성화된 공동체 중심 도시이기도 하다. 읍면 지역과 도시지역의 도농 병존으로 21.2만 명이 동에, 9.3만 명이 읍과 면에 거주하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자치 여건을 가진 세종시는 인구급증과 행정수요 확대 등을 고려할 때 맞춤형 자치모델 구축이 필요한 곳이라 하겠다.

대한민국은 과거 중앙집권적 국정운영으로는 직면해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에 공감하며 국가 중심의 민주주의에서 시민 중심의 풀뿌리 민주주의로 이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 또한 현 정부에서는 자치분권의 중요성을 인식해 국정과제에 연방제에 버금가는 고도의 자치분권을 강조하고 있다. 국정과제 74번에서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참여의 실질화를, 77번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모델의 완성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세종시는 모든 시정에 시민의 뜻(시민주권)이 일상적으로 반영되며, 마을일을 시민이 직접 계획하고 실행하는 자치체계를 구축하고자 '시민주권 특별자치

시 세종'을 민선시정 3기의 비전으로 설정하였으며, 시장과 시(市)의 권한을 시민과 나누고 공유하며, 읍면동 기능과 권한을 키워 마을공동체의 연대와 협력으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확대되도록 지역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오늘도 세종시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발휘되는 도시기반을 만들기 위해 5대 분야 12개 과제의 '세종시 자치 모델 실천과제'를 실현해 가고 있다. 성공적인 과제 완수를 통해 시민이 지방정부의 실질적 주권자로서 자발적인 시정 참여와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자치분권의 선도·모범 모델'로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

시민이 지역의 주인이 되기 위해, 마을 마다 세종이 앞서간다

마을 조직의 주인공은 시민! 우리 마을을 직접 만들어요

세종형 자치모델 중 '마을 조직'의 핵심 목표는 이웃이 함께 모여 마을 일꾼을 뽑고 마을의 일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세종시는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도입, 읍면동 주민자치회 설치 및 리 단위 마을회의 신설, 참여연령을 16세로 확대 등 3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는 공모직위로 우선 선발하고 개방형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세종시는 시민추천을 통한 읍장 임명을 마쳤는데 2018년 7월에 조치원

읍장 내부공모(3명 응모)를 거쳐 주민대표 20명으로 구성된 '조치원읍장 추천 주민심의회'(면접, 심사)를 통해 최고득점자 1명을 읍장으로 추천하였다. 시에서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시민추천자를 읍장으로 임명(2018년 8월)함으로써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table>
<tr><td colspan="2">① 부강면 주민 자치회의 노인사업</td><td>② 조치원읍장 시민추천제 임명</td></tr>
<tr><td></td><td></td><td></td></tr>
<tr><td>〈독거노인 제과제빵 전달 사업〉</td><td>〈나이아가라(노인대학) 운영〉</td><td>〈조치원읍 추천 주민심의회 심사모습〉</td></tr>
</table>

읍면동 주민자치회 설치는 주민자치의 실질적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는 주민자치회를 확대 도입하고 '리개발위원회'를 '마을회의'로 개편하고 활성화 한다는 내용이다. 리개발위원회는 1960년대 내무부 지침으로 시작되어 70년대 새마을운동의 일선 조직체계로 기여하다가 현재까지 제도적 변화 없이 지속되어 왔다. 리개발위원회의 개편을 위해 2019년 상반기 중에 마을회의 설치 내용을 포함하여 주민자치회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실시지역을 선정하고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시는 주민자치회 시범지역(부강면)의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치기도 했는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부강면 주민자치회에서는 노인복지회관을 직접 운영하면서 나이야가라(노인대학), 독거노인 제과제빵 전달 사업 등을 펼쳐 지역 어르신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타 지자체(남양주, 오산 등 다수)의 벤치마킹 사례도 늘고 있다.

마을조직 참여 연령에 대해서는 청소년이 주민총회,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등 마을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령을 만 16세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마을계획을 수립하는 읍면동 마을계획단에 참여 기회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8년 하반기에 시민참여기본조례에 반영하고 2019년 상반기 중에 읍면동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마을 입법의 포인트는 맞춤! 우리 마을에 맞는 제도가 필요해요

세종시의 '마을 입법'의 핵심 목표는 시민 참여 보장 및 마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자치의 실현이다. 이를 위해 세종시는 시민참여기본조례 제정, 읍면동 조례·규칙 제안권 부여 등 2개의 과제를 선정하였다.

시민참여기본조례 제정은 참여연령 16세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해 읍면동에 조례·규칙 제안권 부여, 시민의견 조사 등 시정에 대한 시민 참여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의 제정을 이야기 한다. 2018년 조례를 제정해 2019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읍면동 조례·규칙 제안권 부여는 주민생활 관련 조례와 규칙의 내용을 읍면동 별로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제안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으로 주민자치회 등에서 제안할 경우 적정성을 검토한 후 조례와 규칙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 역시 2018년 조례를 제정해 2019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세종시는 2018년 6월부터 8월까지 시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민주권 준비위원회에서 '시민이 주인 되는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12개 공약과제를 설정하고 체계화하였다. 6개 분과위원회가 총 22회 열렸으며 운영위원회도 5회 개최되었다. 세부 이행 과제 수립을 위한 '타운홀 미팅'과 온라인 의견수렴도 2018년 7월부터 8월까지 있었으며 홈페이지 공개모집을 통한 시민대표단 80여명이 참여하여 8개 팀으로 분류하고 퍼실리데이터(조력자)를 배치해 팀별 토론발표 및 아이디어도 도출하였다. 이후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가 열려 주민자치 실천과제에 대한 설명과 공감대 형성 과정을 거쳤다.

이와 함께 자치분권 TF팀이 신설되었으며 타운홀미팅,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 세종형 자치모델 과제를 심층 논의하였다. 부분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보완하는 중에 전담부서 개편 및 확충, 조례 제·개정, 예산 확보 등의 기반체계 구축을 통한 실행력도 높아졌다.

시민주권특별자치시 타운홀 미팅 모습



〈주제 선정〉 〈분임 토의〉 〈토론 정리〉 〈결과 나눔〉

한편, 2017년 2월부터 운영된,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와 국가균형발전위 공동 산하에 있는 세종·제주 특별위원회에서는 각계전문가와 시민단체, 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특별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자치분권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하고 발굴하는 작업도 진행됐다.

마을 재정의 기반인 세금! 우리 마을 위해 의미 있게 써야죠

세종시의 '마을 재정'의 핵심 목표는 안정적인 주민자치의 재원 마련과 마을 특성에 맞는 활용이다. 이를 위해 자치분권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읍면동에 주민세율 조정권을 부여하는 과제를 제시하였다.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는 159억 원 규모의 주민자치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자치분권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주민세를 주요 재원으로 활용하여 읍면동 자치사업 등에 사용한다는 내용으로 2018년 50개 사업에 대해 주민세 환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조례 제정과 예산편성을 2018년 하반기에 진행한다는 계획이었다.

실제 세종시는 전국 최초로 주민세를 마을자치재원으로 전액 환원하는 성과를 만들었는데, 2018년 예산부터 주민세(개인 균등분) 수납액 전액을 해당 읍면동에 배분(17개 읍면동 11억 3,500만 원)했다. 환원된 주민세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읍면동별 예산협의회를 통해 지역 현안사업을 발굴·시행하는데 사용되었으며, 유아쉼터 조성(보람동), 교통불편 해소(전동면) 등 마을특성에 맞는 60개 맞춤형 사업을 시행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주민세 환원사업 사례



〈유아쉼터 조성 및 운영(보람동)〉



〈구석구석 행복버스 운행(전동면)〉

또한 세종시는 전국 최초로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도입하였다. 2019년부터는 재원규모를 확대하고 전담 재원인 자치분권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시민 중심의 마을재정 기반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음으로 읍면동 주민세율 조정권 부여는 읍면동에 환원되는 주민세(개인 균등분) 세율을 주민 스스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2019년 이후 세종시법 개정 후 주민세율 조정권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마을 계획이 주민의 고민을 해결하도록, 직접 찾아 바꿔나가요

세종시의 마을 계획은 주민이 지역현안을 직접 발굴해 마을 계획에 반영한 후 해결과 지원한다는 목표로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시민주도 마을 계획 수립, 마을 공동체 지원, 시민주권대학 운영의 3가지 과제를 실천하였다.

시민주도 마을 계획 수립을 위해 읍면동별 마을 계획단을 통해 마을의 현안 사업을 발굴하고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시민주도 마을 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마을계획단의 구성은 2019년에, 마을계획 사업예산 반영은 2020년에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마을 공동체 지원은 주민자치교육, 공동체 사업 컨설팅과 지원 등을 위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마을·육아·일자리 공동체 등 공모사업과 예산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예산편성은 2018년, 지원센터 개소와 공동체 사업공모와 선정은 2019년에 계획되어 있다.

청춘조치원 프로젝트(주민자치 활동 사례)



〈신흥리 주민들이 만든 외딴말 박물관〉



〈도시재생대학을 통한 주민역량강화〉



〈주민공동체 자치활동〉



〈협동조합 등 주체별 역량강화〉

실제 세종시는 주민이 스스로 진단하고 해결하는 세종형 도시재생 실천(청춘조치원 프로젝트) 사업을 실행하였다. 세종시의 원도심인 조치원읍을 대상으로,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전문가 참여와 행정이 지원하는 민관 협치체계를 구축·운영하고 도시재생대학을 통한 의식개혁을 진행했다. 이 사업은 주민 스스로 사업을 발굴, 계획수립, 시행하는 주민자치형 도시재생모델로 정착하였다. 2014년부터 2025년까지 4대전략(도시재생, 도시디자인, 경제기반, 문화복지) 64개 과제를 발굴한다는 목표로 2018년 6월 현재 24개 과제가 완료되었다. 도시재생실천사업을 통해 세종시는 구도심뿐 아니라 신도시와 세종시 전역에 주민자치 분위기를 확산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민간거버넌스 선도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시민주권대학 운영은 시민들의 자치분권 역량을 향상시키고 시민 주도 공동체 형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2018년 10월부터 시범 실시하여 2019년부터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마을 경제의 중심은 공동체! 지역과 주민을 돕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다

세종시 마을 경제의 목표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공동체 사업의 활성화이다.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 사회투자지금 신설을 주요 과제로 선별하였다.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속적 증가와 중앙정부의 지원 확대에 맞는 광역단위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지원체계가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하였다.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중간조직의 운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을 상담하고 교육과 판로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센터로서 2019년부터 설립·운영될 계획이다.

더불어 사회적경제 조직에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30억 규모의 사회투자기금 신설도 계획도 있다. 낮은 신용도로 인해 기존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원하기 위해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기금을 신설하고자 한다. 2018년 기금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투자기금 출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주거형 카셰어링 사업 사례



〈주거형 카셰어링 협약〉



〈자동차 줄이기 캠페인〉


〈자활센터와 세차관리 협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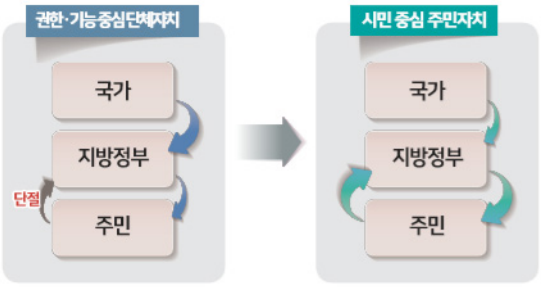
일례로 세종시는 저소득 일자리제공을 위한 주거형 카셰어링을 도입했다. 세종시 신도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주도로 공유차량 50대를 10개 이상의 아파트단지에 배치하여 2018년 9월부터 시범 운영하였다. 주민 이용 편의, 차량 공유 활성화, 자가용 줄이기 캠페인 등을 위해 아파트 주거공간에 카셰어링 서비스를 직접 유치한 것이다. 또한 세종남부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단인 '반짝반짝 세차 사업

단'은 공유차량 세차 서비스에 참여하며 착한 일자리도 제공받고 있다.

세종시는 신도시 아파트 주거공간에 카셰어링 서비스가 확대되면 많은 공무원과 주민들이 수도권 출장(오송역 이동), 충청권 방문 시에 편리하게 이용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시민주도·시민참여·시민중심이 일상이 되는 그곳, 세종

그동안의 자치분권이 중앙-지방정부 간의 관계에 중점을 둔 반면,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은 마을 단위 주민자치 중심의 분권 모델을 지향하였다. 마찬가지로 타 지자체는 개별 권한을 분절적·단편적으로 분권화하였으나, 세종시는 관련 권한과 재원을 패키지화하고 일괄 지원하여 세종형 자치모델의 조속한 정착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시민주권특별자치시'를 선포, 시정 핵심비전으로 설정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도입하는 등 자치분권 프레임을 선점하였다. 이로써 세종시에서는 시민주도·시민참여·시민중심이 일상화 되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구현되고 있다.



앞으로도 세종시는 획기적인 마을자치와 참여의 실질화를 추구하는 '세종시 자치모델'이 자치분권의 선도 모델로 확산되기 위해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실행하고, 자치분권 성과를 홍보하며, 타 지자체에 확산하는 멘토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하향식 관 주도의 자치가 아닌 '시민이 주도하고, 행정은 지원하는' 민관협력(거버넌스) 체계도 정착될 것이다.

세종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시민주권특별자치시의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완비하고, 주민과 읍면동에 목표와 추진방향을 제시 및 공유하면서 핵심정책으로 브랜드화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을 시민의 시각에서 메시지화하고, 시장부터 간부 전 직원이 메시지의 일관성을 유지할 것이다. 주민자치 혁신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대내외 성과 확산을 유도하고 멘토 역할을 강화해 2019년까지 정책성과에 집중적으로 노출할 것이다.



또한 세종시는 5대 분야 12개 과제는 시범지역(사업) 중심으로 지역주민 스스로 실행하도록 유도하며 성과를 창출하고 관련 제도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갈 것이다. 중앙정부와의 협업도 지속해 추진성과와 보완 필요사항 등을 공유·논의하는 현장간담회, 각종 학술대회, 토론회 등의 제도도 정착시킬 것이다.

그간 세종시의 시민들은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입법과정에 직접 참여(타운홀 미팅)하여, 전문가, 공무원 등과 정책 공감대도 형성할 수 있었다. 마을마다 자치가 있고, 마을 마다 세종이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세종의 시민들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우수사례집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10

주민자치의 불모지에서 선도 도시로! 성숙한 생활자치를 실천하다

광주시 서구









주민이 주인되는
공공서비스
주인공

10 주민자치의 불모지에서 선도 도시로! 성숙한 생활자치를 실천하다

광주시 서구

참여와 소통에 대한 목마름, 해갈의 때를 함께 하다

2016년 '광주서구 참여소울' 특강에서 구민들에게 "우리는 왜 광주 서구에 살고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던져 보았다. 구민들은 이웃과 관계가 좋으며 주민 간 정이 많고, 광주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여건이 우수하고, 주요 행정기관, 편의시설 등이 위치하고 있어 생활환경이 편리하다는 의견을 주었다. 고향인 사람들이 많으며 타지에서 온 사람들도 오랫동안 정착해 살고 있고 직장이 있으며 생계의 기반이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반대로 서구의 밝은 미래에 제약이 되는 점으로 '주민참여 및 주민의견 수렴 기회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실제 과거 서구는 주민자치 실정은 미비했다.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실적이 저조했고 이로 인해 주민자치위원도 심의 없이 재위촉 되는 경우가 많았다. 주민자치위원의 역할도 월례회의 참석으로 한정되고 주민자치분과위원회의 구성도 되지 못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체 추진 사업도 없었다. 전국 단위 주민자치박람회 공모 실적도 전무하였다.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주민들의 생활자치, 공동체 돌봄을 중심으로 읍면동 행정혁신, 마을혁신을 이뤄가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지는 중에 서구도 구축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가기로 했다. 마침 2018년 행안부에서는 전국 30개 기초자치단체를 선정해 시범사업을 펼쳤는데, 광주시는 자치분야와 복지분야 시범구로 서구를 선정해 추진하였다.

서구는 그간 주민자치센터 운영 분석, 주민자치활성화 로드맵 수립,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교육(아카데미, 마을리더 전문교육), 주민자치위원회 조직정비 및 운영 개선(공개모집 확대, 주민자치위원 재위촉기준 마련 등), 2015년 행안부형 주민자치회 전환(2개소) 등 변화를 모색하는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더불어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및 방문간호사를 배치하여 보건복지서비스의 종합복지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였고,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추가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건강상담, 건강욕구 사정·설계, 건강관리서비스도 제공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이전의 관 주도의 주민자치는 주민 주도의 성숙한 생활자치로 변화하고 서구는 주민자치의 불모지에서 주민자치 선도도시로 도약하였다.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 3년 연속 최다 선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선도도시 지정 및 우수사례 선정의 성과도 거두었다.

자치·복지 양 분야 시범구, 서구가 만든 자치와 복지 플랫폼에는 특별한 것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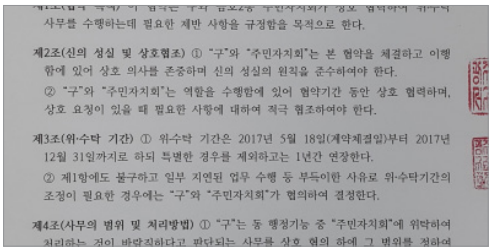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 조율하고 연계하고 개정하며 해법을 찾다

-구청에서 하는 일 따로, 주민이 하는 일 따로? 서비스의 경계를 허문 주민자치회 위 · 수탁 사업

서구의 3개 주민자치위회는 2017년 5월 18일 주민자치센터운영, 주민자율청소, 공원관리(화장실 관리), 불법광고물 정비 등 4개 사무에 관해 위·수탁협약을 체결했다. 처음 주민자치회의 위·수탁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였으나, 주민자치위원회와 차별성이 없어 마을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주민자치회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구청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주민이 해야 한다는 위·수탁 사업에 대한 생소함과 개인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이를 꺼려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3개 주민자치회는

각 부서와의 업무 연찬을 통해 수행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하여 토의하고, 위·수탁 사업 협의 간담회를 통해 사무 조율 및 수행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결과적으로 주민자치회 위·수탁사업은 민과 관의 상호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마을일을 주민이 스스로 해결한다는 분위기 전환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주민의 자치 능력을 키워 지역 실정에 맞는 수탁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주민의 소득 창출 기회도 마련되어 상생의 결과를 만들었다는 평가도 받았다.



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의 성실 및 상호협조) ① "구"와 "주민자치회"는 본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함에 있어 상호 의사를 존중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와 "주민자치회"는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협약기간 동안 상호 협력하며, 상호 요청이 있을 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위·수탁 기간) ① 위수탁 기간은 2017년 5월 18일(계약체결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간 연장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연된 업무 수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위·수탁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와 "주민자치회"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사무의 범위 및 처리방법) ① "구"는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주민자치회 위수탁협약



위수탁업무 추진

-두렵고 어렵고? 주민총회 어렵지 않아요! 의무화와 발굴 의제 구정 반영 시스템 구축

그간 서구에서는 축제형 주민총회 개최로 마을의제 발굴이 미흡하고, 마을사업과 연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주민총회가 단순 행사로 끝난다는 평가였다. 게다가 주민총회에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일부 주민자치위원회만 참여(6개 주민자치위원회 미시행)한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어다. 주민총회가 잘 성사되지 않는 원인으로는 주민총회 개최에 대한 두려움과 예산 미확보, 강제성이 없다는 점이 꼽혔다.

이에 서구는 전동에서 주민총회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주민총회에서 발굴된 의제를 구정에 반영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총회에 의의를 부여하였다. 조례 및 규칙에서 주민총회의 개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도록 개정하고 동 및 주민자치위원에서 총회 추진 워크숍을 개최해 주민의 공감대도 형성해 나갔다. 대표적으로 2018년 11월 6일에는 "서구민에게 길을 묻다"는 제목의 작은 주민총회가 열리기도 했다. 그간 서구는 공모사업을 통해 총회 개최를 지원했는데 2019년에는 전동 주민총회를 위해 약 1,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두고 있다.

-주먹구구식 재위촉은 그만! 조례와 규칙 개정을 통해 인적쇄신 지원하다

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될수록 기존 기득권을 고수하려는 주민자치위원회의 반발과 동 직원의 업무 증가에 따른 부담감이 상승하였다.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10년이 넘도록 바뀌지 않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바꿔야 한다며 인적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이에 서구는 인적쇄신을 위한 조례와 규칙 개정을 목표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해 나갔다. 또한 전 동직원 및 주민자치위원회 의견 수렴과 주민자치협의회 토론을 통해 조례와 규칙의 개정 내용을 정리해 나갔다.

구체적으로 우선, 임기만료 자치위원의 재위촉 심의기준을 강화하였다. '회의·교육·활동·봉사 등 참여 및 인품 등 평가'를 명확히(제20조)하여 활동 부진자를 민주적이고 공개적으로 퇴출하고 자발적 활동가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신규 위촉 위원의 80% 이상을 공모로 위촉하도록 하여 자치위원의 공개모집도 확대(제17조2항)하였다. 실제 조례의 개정으로 주민자치위원을 심의기준표에 따른 심의를 통해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재위촉[정량평가(80)+정성평가(20):회의출석률, 자치활동 참여율, 위원회활동, 기타인품 등]하고, 공개모집도 확대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적쇄신 작업은 프로그램 강사 선정에도 비슷하게 적용됐다. 그간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의 경우 주민 의견반영 없이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로 재위촉이 진행되었다. 때문에 강사 한사람이 수년 동안 강사직을 독식하는 폐단도 심심치 않게 벌어졌다. 이에 기존 규칙에 명시된 위원회 심의를 폐지하고, 주민(50%)과 회원(50%)의 설문조사를 통해 80% 찬성 시 재위촉이 가능하도록 개정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역할 부재와 프로그램을 알지 못하는 주민 50%의 설문조사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주민자치위원회와 동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회원 4분의 3 이상이 찬성하고 선정위원회 심의 75점 이상인 경우 재위촉'하는 절충안을 최종안(규칙 제12조, 제13조)으로 결의하였다. 프로그램의 신규 개설 절차도 같은 형태로 개선되었다.



위수탁협약 간담회



주민자치협의회 설명회 개최

직접 민주주의 경험해 보니 어때요? 참여하는 주민총회와 마을비전 수립

-주민총회는 처음이지? 참여하고 결정하는 민주주의의 첫걸음입니다

2017년에는 3개 주민자치회 및 9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2018년에는 2개 주민자치회 및 11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하였다. 주민총회는 마을비전을 선포하고, 마을의 현안을 논의하며, 주민이 바라는 마을에 대한 설문조사, 마을캐릭터 발굴, 주민자치프로그램 신규강좌 설문조사 등을 다루는 공유와 소통의 장으로 활용되었다.

더불어 '더 많은 참여, 함께 여는 마을 민주주의'를 주제로 아파트와 마을의 총회도 열렸다.

연번	일자	아파트명	아파트별 의제
1	2017.6.29	도시공사2단지	아파트 커뮤니티공간 구성 방안
2	2017.8.25	시영1차	아파트 주민간 서로 인사하기
3	2017.10.13	시영5차	진입로 주정차 금지 방안
4	2017.10.28	한국1차	정화조를 마을 소통공간으로
5	2017.11.4	시영3차	담장 허물어 나무심기
6	2017.11.23	쌍용예가	백석산 민간공원 개발시 산책로 대안



아파트 마을총회



학교별 마을총회

학교별 마을총회에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총회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의제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결정된 의제는 최종 마을총회로 이관돼 마을 전체 의제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금호1동은 통합로에 30km 제한속도를 지키는 '레인커버 나눔운동'이 추진되었고, 금호2동에서는 어른과 학생들이 함께하는 '반딧불 안전지킴이 자율 방법활동'이 진행되었다. 금호2동에서는 삭막한 아파트 방음벽에 벽화와 아트 가드닝을 설치하고, 상무2동에서는 쌍쌍장터, 가을운동회, 쌍쌍콩쿨대회 등 주민이 직접 만들어가는 문화행사도 펼쳤다. 마을총회에서 발의된 의제는 점차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창구로 발전하였다.



레인커버 나눔운동 추진


밧딧불안전지킴이 활동

-마을비전 수립 어렵지 않아요! 17개동의 17개 비전 이야기

주민총회가 열리면서 각 마을은 장기적인 마을의 비전을 세우는 일에도 노력했다. 총 17개동에서 17개 비전 사업을 추진하였다. 각 마을은 주민의 1% 이상이 참여하도록 유도하였고, 2018년 말까지 전체 71개 목표, 250개 세부사업이 정해졌다.

계	2017년	2016년	2015년	비고
17개동	7개동	7개동	3개동	광천동 재개발 제외

〈17개동 비전 현황〉

연번	행정동	비전	비고
1	양동	맛! 멋! 정!이 넘쳐나는 활기찬 양동	
2	양3동	소통과 참여, 협력을 통해 주민이 행복한 양3동	
3	농성1동	우리 모두 벗되어 벚꽃마을 미래를 꿈꾸다	
4	농성2동	多정!多감!多같이 행복한 농2마을	
5	유덕동	모두가 행복한 지속가능한 유덕마을	

연번	행정동	비전	비고
6	치평동	주민과 함께 행복을 꿈꾸는 치평마을	
7	상무1동	모두가 행복한 상무1동	
8	상무2동	이웃과 더불어 행복을 가꾸는 쌍쌍일촌	
9	화정1동	사람과 마을을 잇다! 안전하고 깨끗한 살고 싶은 화정1동	
10	화정2동	소외된 이웃없는 명품 화정이 마을! 고향을 품다	
11	화정3동	더불어 사는 행복마을! 꽃과 정이 넘치는 살고 싶은 화삼골	
12	화정4동	문화가 꽃피는 살맛나는 화사마을	
13	서창동	마을 농사로 하나되는 서창동	
14	금호1동	나눔 愛 행복마을	
15	금호2동	웃음 가득 함께 만드는 따뜻한 마을	
16	풍암동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살기 좋은 풍암	
17	동천동	더불어 누리는 국화향 그윽한 동천마을	

2018년에는 3개동의 마을비전 고도화 사업이 추진되었다.

계	사업기간	사업내용	진행사항	비고
금호1동 상무1동 서창동	2018.4~12	기 수립된 마을비전의 중·단기 계획 보완 발전	▶비전계획단 구성 ▶비전아카데미운영	비전책자 발간 : 11월 중

인적 쇄신을 통한 모범자치회 운영으로, 소통하고 상생하는 '행복서구'

-알면 자치가 쉽다! 주민자치 활동역량을 높이는 교육강화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주민 교육은 서구에서 특히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다. 2016년 1월 200여 명의 참가 속에 주민주체의 자치공동체 만들기 출범식을 추진한 이래, 주민자치 아카데미 교육(2016년 4월, 주민자치위원장, 동장 등 72명 참여)과 마을리더 전문교육(2016년, 4회 주민자치위원, 마을활동가 등 276명 참여), 주민자치 역량강화 워크숍(2015년 이후 해마다 실시, 주민자치위원, 동장 등 참여), '설레임' 마을 학교 운영(2017년과 2018년 개최, 마을공동체사업 단체 대표와 실무자 참여)에 총 1,500여 명의 주민이 참여하였다. 주민자치회의 효율적 운영방안과 배움·소통·체험 과정을 익히고 마을공동체 형성과 활성화 방안도 논의하였다.

매년 11월에는 서구민자치어울림 한마당을 열고 있는데 한 해 동안 주민들이 추진해온 주민자치와 복지를 결산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주민자치박람회, 사회복지박람회, 공유장터, 다문화축제가 연계 추진된다. 서구민자치어울림 한마당은 주민자치협의회와 주민대표로 구성된 추진위원회가 주관하며 주민자치우수사례발표, 마을자랑대회, 주민자치활동 홍보부스도 운영된다.

-'공정하게 그리고 공평하게' 주민자치위원 공개 모집 확대

서구에서는 주민자치회 인적 쇄신을 위해 지역(인적자원)조사, 주민의견수렴(자생단체별 월례회의 시 인적자원 발굴 등 협조 요청, 동대표밴드(SNS),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한 위원 모집홍보), 위원 공개모집, 선정위원회를 활성화 하고, 공정한 선발을 위해 애쓰고 있다.

공개모집은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신규 위촉위원의 80% 이상'을 공개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의 선발은 동별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하였는데 7인 이내, 2/3 이상 참여로 심의가 진행된다. 2018년에는 총 자치위원 408명 중 178명(43.6%)이 공개모집으로 위촉되었다. 이는 2014년 27명(6.2%)에서 2015년 54명(12.6%), 2016년 58명(13.5%), 2017년 159명(37%)으로 점차 늘어난 수치이다.

한편 주민자치회에서는 평범한 이웃이 참여하는 주민대표위원도 그 수를 늘렸다. 지역·직능대표위원을 8명 이내에서 4명 이상 6명 이내로, 주민대표위원는 14명 이내에서 12명 이상 22명 이내로 개정한 결과이다.

-분과위원회 일반주민 참여

주민자치(위원)회의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과 마을주민 분과위원이 합친 형태로 구성된다. 일반주민 분과위원은 1개 분과위원회에 참여가 가능하다. 일반주민 분과위원 위촉은 추천 및 공개모집으로 진행된다. 별도 심의절차를 배제하여 결원 발생 시 많은 주민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2018년 현재 14개동 118명의 일반주민이 분과위원, 분과별 회의 및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일반주민 분과위원이 제안한 안건은 월례회의 상정이 의무화 돼 있으며, 회의결과도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누구나 어디서나 건강하게! 업그레이드된 보편적 방문건강 관리 시스템

-마음에 희망의 씨앗을 심다, 주민교육과 네트워크 운영

서구는 2017년 6월부터 9월가지 희망지킴이 방문 세대 중 심리지원이 필요한 세대를 대상으로 자존감 회복을 위한 힐링캠프를 4회 실시했다. 심리상담과 교육, 체험학습과 멘토링이 진행됐다.

또한 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16개 복지기관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통합프로젝트 '서구 복지네트워크'도 운영했다. 종사자 워크숍과 힐링캠프, 해외연수를 진행했으며 지역사회 통합프로그램으로 복지마을 놀이터, 복지마을 배움터, 복지마을 원정대 사업도 진행했다.

-원스톱 복지 서비스 실현? 복지도 주민 주도 해결이 답!

서구는 복지정책과에서 복지정책팀, 희망복지팀, 사례관리팀(전담팀)을 운영하며 동주민센터 찾아가는 전담팀과 연계하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실현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내실 있는 상담과 맞춤 서비스 신청을 가능하게 하고 주민 주도의 지역 문제 해결에도 실마리를 제공한다. 구청 희망복지지원단의 전문성이 강화되면 동 복지업무 지원을 확대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주민센터의 종합복지 기능이 강화됨으로써 동 중심의 통합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공공과 민간 그리고 기관과의 연계와 협력이 단단해지면 복지서비스 역시 다양한 주민의 복지욕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서구는 주민의 주도적 참여 속에 원스톱 복지 서비스를 실현하고 있다.

-건강취약계층을 직접 살피는 방문간호사가 나갑니다

2018년에도 보건소 소속 방문간호사 2명이 동주민센터에서 근무하며 건강취약계층을 돌보는 사업이 진행됐다. 8개월 간 방문간호사의 누적 방문횟수는 1,526가구로 신규 등록 238가구를 포함하고 있다.

2016년 8월부터는 매주 금요일 사례관리팀과 동복지담당이 함께 방문하는 '함께해요! 동동방문 Day'를 추진해 왔는데 방문실적이 2,600건에 달한다.

2017년 8월부터 숙박업소에 거주하고 있는 알코올중독자와 우울증 환자를 발굴 치료하는 '복지&정신보건 공동방문 All-in-one' 사업을 펼치고 있다. 정신보건간호사와 구 통합사례관리사 그리고 동 전담팀 직원이 234세대의 사례자를 방문하였다.

2017년 9월부터는 25개 경로당을 돌며 건강과 복지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어려운 어르신을 발굴하는 '찾아가는 복지주치의'도 실행하고 있다. 보건복지 이동상담실에는 동 전담팀 2명과 보건소 방문간호팀 3명이 참여하고 있다.

2018년 1월부터 진행된 '보건복지 동행방문' 사업은 무료개안수술, 산모신생아 도우미, 환경개선사업, 생필품지원을 연계하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로 사각지대를 밝힌다

서구는 공공서비스 종사자 외에 방문형 민간기관 종사자들과 관심 있는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들도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방문형 제공기간 간 어깨동무 사업'과 '찾아가는 복지급여 아카데미' 등이다. 어깨동무 사업은 방문형 민간기관 종사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해 사각지대 발굴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578세대를 방문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공동방문을 실시하고 있다. 찾아가는 복지급여 아카데미는 사회복지기관 직원과 관심 있는 지역대상에게 공적급여제도와 민간자원 등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교육수료자들이 복지 사각지대의 대상자를 발굴하고 민간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해 준다.

살맛나는 서구의 활기, 소통과 주민참여로 쭉 이어갑니다

2018년 11월 서구는 제17회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전국 최다 우수사례에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5개 분야 중 주민조직을 제외한 4개 분야에서 7개 사례가 선발돼 3년 연속 최다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 같은 성과를 이룬 배경에는 관 주도의 행정관행을 개선해 주민 주도의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킨 서구민들이 있다. 서구는 앞으로도 주민들이 자치역량을 키우고 진정한 생활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해 갈 것이다.

주민자치회 전환과 동장공모제 시범운행은 서구의 핵심 추진 과제이다. 서구는 2015년 행정자치부형 주민자치회 시범실시(금호1동, 풍암동)를 시작으로 2016년과 2018년 광주다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금호2동, 치평동)를 통해 주민자치회로의 도약을 추진하였다. 2021년까지 주민자치회 전환을 완료할 예정이다. 주민자치센터 중심의 공공서비스를 행정기관 위주의 서비스에서 민관이 함께 계획·생산·전달하는 체계로 개선하는 사업들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4개소	3~4개소	5~6개소	4개소

더불어 2019년에는 4개 주민자치회에서 기존 위수탁 사무를 평가하고 신규 사업을 발굴해 위수탁 (재)협약을 추진할 예정이며, 상반기에는 전체 18개동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주민참여예산, 시구공모사업, 위원회자체사업 추진 등 구정과 연계되는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동장공모제의 경우 관련부서에서 TF팀을 운영해 2019년에 실시할 예정이다. 구민들의 동 사업 선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바일투표시스템('통통넷 엠보팅', 스마트폰 앱)을 도입한 만큼 구민들의 참여가 더욱 활성화되리라 기대하고 있다.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11

“시민참여가 답이다” 10년 노력 끝에 완성한 시민행복 복지플랫폼

경기도 남양주시









주민이 주인되는
공공서비스
주인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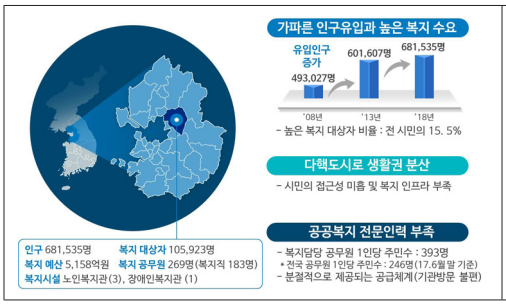
11 “시민참여가 답이다” 10년 노력 끝에 완성한 시민행복 복지플랫폼

경기도 남양주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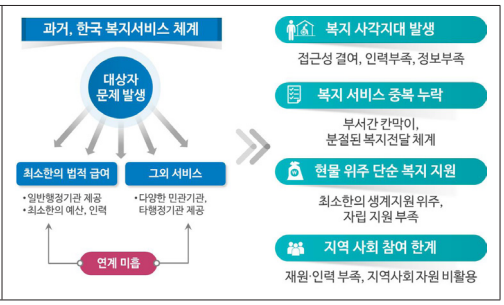
지역은 넓고 거점은 없다? 흩어진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 남양주가 나섰다

남양주시의 면적은 458.535㎢로 서울 면적의 75%에 달한다. 인구는 2018년 11월 현재 681,535명으로 전국 226개 지자체 중 인구 9위이며 지속적인 인구유입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자치단체이다. 5읍 4면 7동의 행정구역으로 구성된 대표적인 도농복합지역인데, 넓은 지역에 거점 지역이 없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다.

주민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넓은 면적에도 거점 지역이 없는 다핵화 구조로 생활권이 매우 분산되어 있었다. 복지 면에서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은 복지관 3개소(노인2, 장애인1)가 전부였다. 그나마도 시 전체를 관할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기관이 없는 실정이라 시 전체를 포괄하는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었다.



남양주시의 일반현황



행정체계 개편의 배경

이에 남양주시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복지여건을 마련하고 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고자 다양한 시도를 계속해 왔다. 이 과정에서 시민참여와 민관협력, 자원공유와 정보개방은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로 제시되었다.

지역특성	복지여건	복지욕구	전달체계
4개 권역으로 생활권 분산	복지인프라와 복지공무원 부족	생애주기별로 복잡 다양화	공급자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

복지현실 진단 → 현실적인 대안 마련

융합형 보건·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행정혁신

①시민참여 ②민관협력 ③자원공유 ④정보개방

행정개편+민관협력+시민참여 = 남양주식 시민행복 복지 플랫폼의 완성

복지 향상을 위한 10년 노력의 성과, 남양주시 복지전달체계의 완성

-1단계: 복지서비스는 내게 맡겨라! 권역별 복지허브센터가 세워지고

남양주시는 지난 2007년 4월 권역별 복지허브센터를 구축하였다. 센터는 통합사례관리, 서비스연계, 자원관리를 전담하였는데, 생활권이 같은 지역을 4개의 지역으로 묶었다. 권역별 복지허브센터로 시민들의 복지 접근성과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서였다. 권역별로는 복지를 전담하는 희망케어센터(종합사회복지관)를 설치하였다.

복지허브센터에는 민간 사회복지사 48명이 근무하였고, 각 희망케어센터에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공공복지의 한계를 극복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희망케어센터 운영비와 민간 사회복지사 인건비는 자체 지방비로 충당하였고, 복지사업(서비스 지원 및 연계)은 재능기부, 후원금품 등 민간자원을 활용하였다. 민간협력의 맞춤형 서비스 대상자는 주로 차상위계층으로 이들을 집중케어함으로써 빈곤층 진입을 막고자 하였다. 맞춤형 서비스로 2차 사회안전망도 마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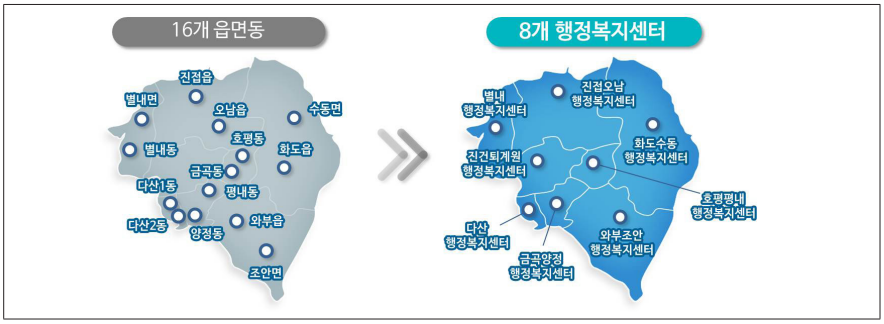
희망케어센터 설치 제공 서비스

-2단계: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민·관 합동 근무체계의 마련

2012년부터는 희망케어센터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연계와 민·관 협업을 강화하였다. 희망케어센터 내에는 복지담당 공무원과 민간 전문 인력을 전진 배치하고 민관복지협력팀과 희망복지지원단을 신설하였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민관협력 통합사례를 관리하고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민관 근무환경 통합 이후 실시간 사례회의가 진행되었고, 공적복지 탈락자 및 중지자에 대한 보호체계가 구축되었다. 이로써 공적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통합서비스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3단계 : 민관협력 공간 통합으로 시민행복 플랫폼을 완성하다

2018년에는 행정복지센터를 거점으로 주민밀착형 행정+보건+복지 체계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16개 읍면동(5읍, 4면, 7동)이 8개 행정복지센터로 재조직되었고, 행정복지센터 내에 건강생활지원센터, 희망케어센터 등 민간서비스가 집결되는 형태를 갖추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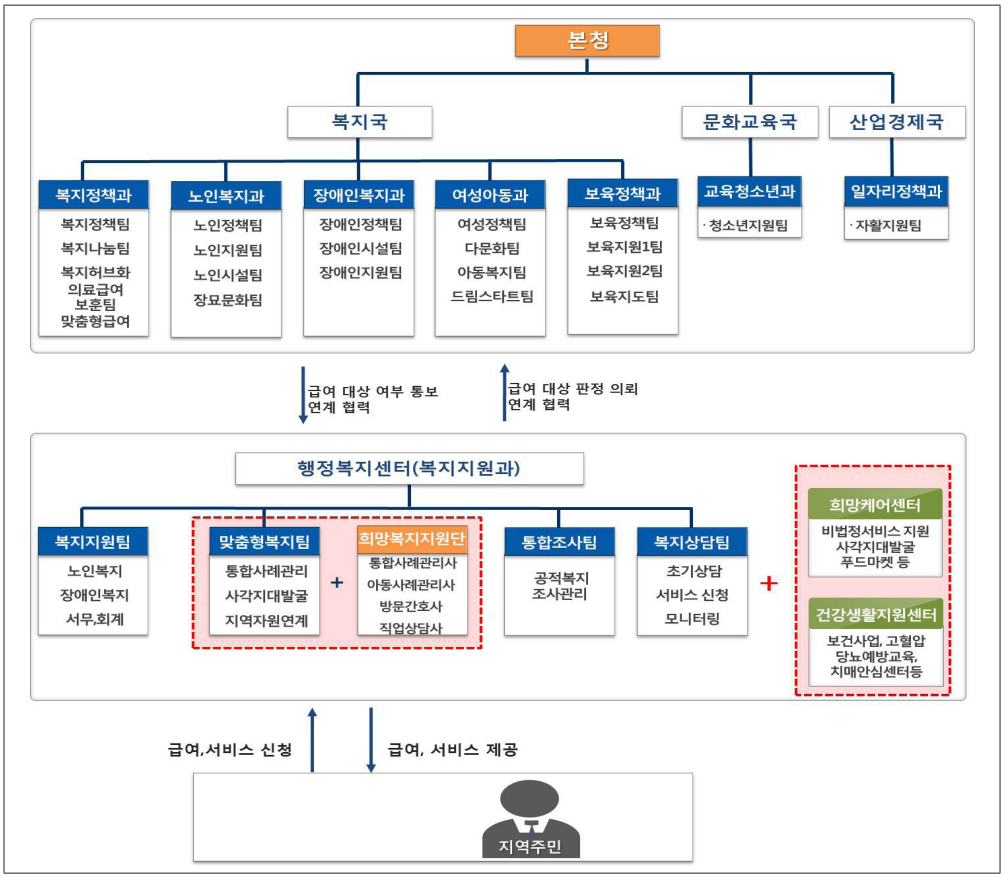
행정체계 개편 체계

행정조직은 수급자 통합조사·관리(조사관리팀), 사례관리(맞춤형복지팀), 상담·방문서비스(상담팀) 등으로 개편됐고, 행정복지센터 내 찾아가는 보건·복지·고용 업무 전담팀이 구성되었다. 전담팀은 권역형 7개소, 기본형 2개소로 구분되었다.





보건복지 플랫폼



남양주시 복지전달체계 구조화

미소금융, 신용회복위원회, 건강생활지원센터, 희망케어센터 등의 민간조직은 방문돌봄, 서비스 연계제공 및 자원관리, 후원자 관리 등을 담당하는데, 민간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기관별 독립적 운영이 보장되고 필요 사회서비스 협업도 제공되었다. 민간조직에는 사회복지사 48명, 직업상담사 9명, 통합사례관리사 6명, 아동통합사례관리사 7명, 방문간호사 8명 등이 활동하고 있다.

행정조직과 민간조직이 정비되고 시민행복 플랫폼이 완성되면서 시민들은 한 곳에서 보건·복지·금융·고용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권역 개편, 민관 협력의 수요자 중심 원스톱 보건복지 플랫폼을 완성함으로써 남양주시는 10년여의 노력 끝에 다핵도시가 갖는 접근성의 한계를 완전히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

시민참여가 답이다! 주민들의 참여로 성장하는 지역복지

-소통으로 해소하고 나눔으로 해결하다! 민관협력이 강화되기까지

초기 복지전달체계의 개편이 진행되면서 초창기에는 민간기관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불신과 부정적 의견을 다수 제시하였다. 민관합동 근무방법에 대한 오해와 갈등도 있었다. 공공자원 및 예산부족도 사업의 진행을 막는 걸림돌이 되리라는 예측이 많았다.

남양주시는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나기 위해서 '시민참여가 답'이라는 생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우선 불신과 부정적 의견을 불식시키기 위해 연구, 시범운영 등에 복지공무원 학습동아리를 참여시키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다. 더불어 지속적인 간담회·워크숍·교육을 실시해 이해와 합의점을 도출하려 애썼다.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내부조직의 갈등과 민관 칸막이를 제거하는 일이 급선무라는 의견도 경청했다. 기획 단계부터 의회, 민간기관, 사회단체를 찾아 설명회를 개최하며 다양한 민과 관의 이야기를 들었다. 마지막으로 예산 부족은 1인 1계좌 갖기 등 민간의 나눔문화를 확산시키고 재능기부 등 자원봉사 활동을 증진하면서 해소하여 나갔다.

- 계획부터 실행·평가까지, 마을을 살린 시민참여 콘텐츠

소통으로 해소하고 나눔으로 해결하는 사이 시민들의 지역복지 참여문화는 점차 확산되어갔다. 정책입안 및 계획수립 과정에서부터 실질적인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사업 진행의 기폭제가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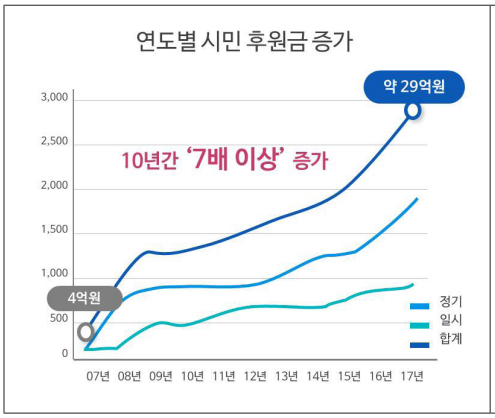
시민과 이해관계자 등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계층이 포함된 '희망케어센터 자문단(17명)'이 사업계획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했다. 공개모집을 통해 모인 50명의 T/F팀은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참여했다. 이밖에도 민간기관 실무자 및 시민, 읍면동 협의체 위원 등 다양한 시민들이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서 평가까지 전 과정을 살펴보고 함께 했다.

마을별 지역보장계획은 읍면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중심이 되어 수립하였다. 전 읍면동에서 지역별 특성에 따라 노인, 장애인, 청소년 등 마을별 돌봄 체계를 운영하였는데, 시민의 욕구와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였다. 시민욕구조사, 아이디어 공모전, 정다운이웃 테이블 토론회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더불어 시민자원은 지역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 자원이 되었다. 시민의 재능과 지역자원을 활용한 참여프로그램은 시민, 기업, 복지기관,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지역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콘텐츠들을 생산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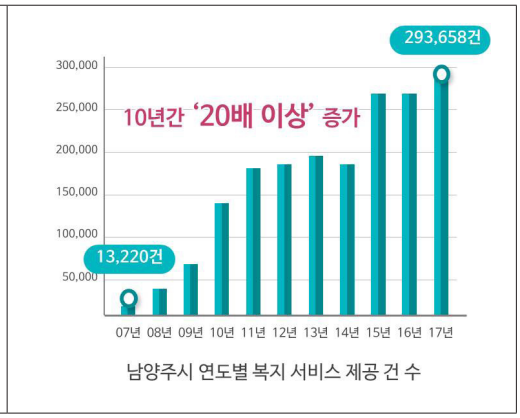
구 분	사업명	주 요 내 용
재능 기부	집수리봉사단('07. 4~)	· 시민들의 재능기부로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집수리
	희망매니저('10. 1~)	· 혼자서는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를 1:1로 매칭하여 말벗, 청소, 외출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텔레케어봉사	· 정기적으로 취약계층들의 안부를 전화로 확인하고 소통하는 봉사활동
자활 사업	희망모우리('13.4.~)	· 근로의지는 있으나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취업희망자에게 관내 기업(정동산업)과 연계하여 개인별 맞춤형 일자리 제공
	희망나누리('17.9.~)	· 오랜 시간 동안 근로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관내 기업(정동산업)과 연계하여 탄력적인 일거리 제공(공동작업장)
	희망키움터('14.3.~)	· 사회적 기업과 함께 취약계층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
주거 사업	희망의집(2009~)	· 일하는 차상위계층에게 일정기간 주거지원으로 자활을 지원하는 주거 선순환 사업
	희망다온('17.8.~)	· 지역사회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저소득계층의 자활과 위기가구 임시 주거지로 활용(※ 주거공간 3가구 LH지원)
	희망빌리지(2018~)	· LH와 협약을 통해 자활목표 차상위계층 및 위기가구를 위한 공동주택 지원사업(공동 육아, 공동 돌봄사업 추진)

남양주식 복지 공동체, 예산 위주 복지정책의 한계를 넘다!

권역별 복지허브센터를 구축하고, 민관 합동 근무체계를 구축하여 시민행복 복지플랫폼을 완성한 남양주시의 복지 서비스는 시민들의 지역복지 및 나눔문화 참여 확산을 통해 복지자원을 확보함으로서 예산 위주의 복지정책의 한계를 극복하였다. 이로써 공적제도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시민 후원금 증가



맞춤형 복지서비스 증가

남양주시는 복지 공동체 실현을 위해 총 21회 정다운이웃 테이블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1,142명의 참가자와 전체 시민의 시민의식을 키우고 참여를 다지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후 약 15만 명, 전체 시민의 22%가 시민자원 봉사자로 활동하는 형태로 성장하였다. 시민복지학교인 '맛있는 복지여행'도 총 7기 738명의 수료생을 배출되었다. 이를 통해 지역리더가 성장하였고, 시민복지정책참여단으로 활동하는 선순환구조를 이루어냈다.

이러한 과정 끝에 만들어진 권역별, 읍면동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는 이웃의 복지 문제를 지역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게 하였다. 지역 내 복지소외계층을 상시 발굴하여 일상지원도 확대해 나갔다. 시민자원을 적극 활용해 지역의 복지욕구를 시민들의 재능기부와 매칭하는 성과도 만들어냈다.

이 과정에서 남양주시는 더 많은 대상자에게 더 많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 중복방지와 부정수급 예방에도 최선을 다했다. 복지서비스 대상자가 가장 많은 6개 분야 서비스의 중복 · 누락 여부를 확인하고, 전산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하여 자원누수를 차단하였다. 또한 서비스 제공기관과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대상자 서비스 제공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복지기관 간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탄탄한 주민력으로 돌봄 기능 강화하고 커뮤니티케어 모델 완성할 것!

남양주시는 앞으로 지역의 돌봄 기능 강화와 남양주형 커뮤니티케어 모델 구축에 주력할 예정이다.

지역의 돌봄 기능 강화는 탈시설 보호대상자들을 지역 내에서 지역의 힘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돌봄체계를 말한다. 지역주민을 전문자원봉사자로 육성하고, 지역복지의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공적지원의 한계를 극복해 나갈 것이다.

남양주형 커뮤니티케어 모델은 부서 간 협업으로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주민자치를 활성화 하여 재가돌봄 공동체를 형성하고, 개인 및 LH 임대주택 활용을 통해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안정화 정책을 실현하려 한다. 또한 재가 돌봄 전문 봉사자를 육성해 찾아가는 돌봄 기능도 강화할 것이다.

이러한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주민력이 필요하다. 남양주시는 주민력 강화를 위해, 대상자들이 서비스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교육도 강화해 갈 계획이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우수사례집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12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동행’하면 ‘소통’도 ‘돌봄’도 쉽습니다!

대전시 대덕구









주민이 주인되는
공공서비스
주인공

12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동행'하면 '소통'도 '돌봄'도 쉽습니다!

대전시 대덕구

건강행위 취약지역에서 건강 자족도시로 변신 꿈꾸는 대덕구

약 18만 명의 구민과 12개 행정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대덕구는 대청호와 계족산이 있어 대전의 뿌리이자 젖줄로 잘 알려져 있다. 대전산업단지와 대덕산업단지가 입지해 있어, 청정한 환경과 함께 경제중흥의 거점지로 유명한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주민들의 건강행위는 전국에서 최하위권을 맴돈다. 남자 흡연율은 전국 199위, 고위험 음주율은 전국 129위를 차지한다('16년 지역사회 건강순위 기준). 필요한 의료서비스의 미치료율과 당뇨병 치료율도 최하위에 머문다. 구민 중 노인 인구 비율은 13.55%(약 2만 5,000명)로 상당히 높다. 이로 인해 만성질환으로 인한 유병률도 높다. 더불어 열악한 주거 환경 등 물리적 환경과 사회경제적 지지체계도 좋지 않다. 특히 법1·2동은 영구임대 아파트가 위치해 있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다. 교육환경과 문화시설도 많지 않아 젊은층의 유입이 줄고, 하루 평균 16.5명의 주민이 구를 떠나는 실정이다.


충청신문
2018년 09월 05일 (수)
자치의정 05면

대덕구 오정동, 위기가구 발굴 다짐대회

대덕구 오정동(동장 정영주)은 4일 오정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위기가구 발굴 다짐대회를 개최했다.

이 날 다짐대회에서 변예 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된 주민과 복지통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만두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지역 사정에 밝은 주민 70여명이 모여 복지사각지대 없는 오정동을 만들기 위해 한 목소리로 위기가구 발굴 결의를 다졌다.

결의문에는 긴급 위기상황에 놓인 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민·관 협력의 안전 안전망 체계를 강화해 주민 스스로 위기가구를 발굴 할 수 있도록 유도해줄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결의선언 후에는 사회복지 전문가를 초빙해 '소통과 공감의 시작'을 주제로 위기가구 발굴방 조직, 협력활동 등에 대한 강연을 들으며 합석자들의 복지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영주 동장은 "민·관이 협력해 취약계층을 잘 살피고 어려운 이웃이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완영 기자
wanyoung@dailycc.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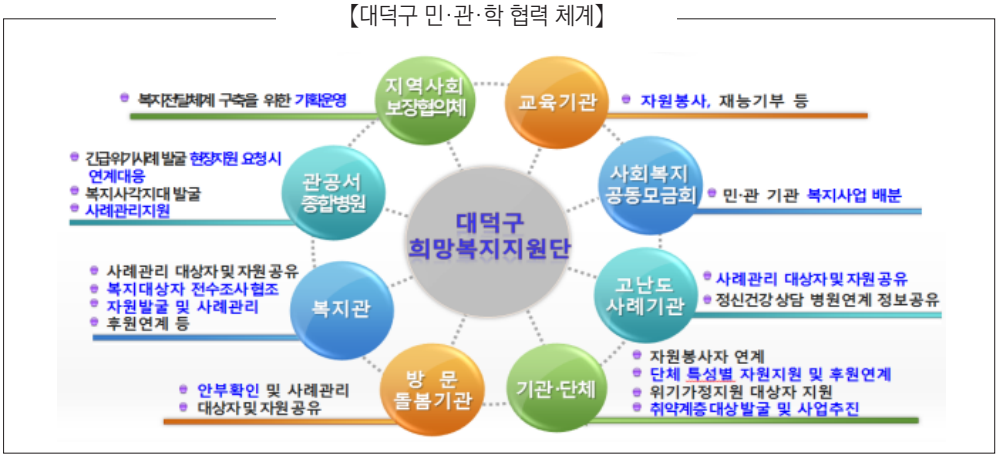


대덕구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보건복지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의 보건복지 수요를 발굴·확인하고 민관협업을 통해 이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다. 주민 생활에 밀착된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 마을 현안 사업을 추진하고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였다. 또한 소생활권을 중심으로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주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관 주도의 복지서비스에서 탈피해 주민이 주민을 돌보는 커뮤니티케어가 실현되도록 실질적인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였다. '민관학협력 복지전달체계'를 중심으로 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는 대덕구의 대표적인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이다.

"대덕구 통합사례관리가 또 통했다" 구민과 동행하는 희망복지지원단이 공동체를 바꾸다

변화하고 발전하고 완성했다! 대덕구 희망복지지원단 6년의 이야기

【대덕구 민·관·학 협력 체계】



2012년 5월 대덕구는 '희망복지지원단 발족 및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체계에 들어갔다. 희망복지파트 조직을 신설하고 기존의 서비스연계 업무담당 공무원을 7명에서 11명으로 증원 배치했다. 이어서 동주민센터와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을 통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역 내 서비스 제공기관과 협력해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부모 및 다문화가정 777세대에 대한 사례조사를 실시하고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100세대에 냉방용품을 지원하기도 했다.

연도	사업 진행
2012	희망복지지원단 발족 및 한부모·다문화가정 사례조사
2013	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 희망두드림 사업 실시
2014	원스톱 복지 서비스, 희망드림 행복상담실 운영
2015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 및 통합사례관리팀 설치
2017	맞춤형 복지팀 개편 및 민관학협력 체계 구축
2018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강화 및 동 단위 민관협력 커뮤니티케어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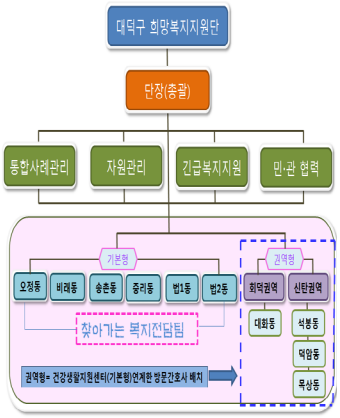
2013년에는 희망복지지원단은 대전시 청소년들의 학업중단률이 7개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현실을 반영해, 관내 학업중단 청소년의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희망두드림' 사업을 실시했다. 정규교육과정에서 이탈하여 경제활동에도 참여하지 않으며, 사회적·경제적·심리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학업중단청소년과 가출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1단계 자립 동기부여, 2단계 학업·진로지도, 3단계 학교 복귀 및 구직지원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미자립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청소년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사회적응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다.

2014년에는 정부의 복지사업과 예산은 늘어나고 있지만 사회복지사 등 현장 담당인력이 뒷받침되지 않아 정작 수급자에게는 정책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복지깔때기 현상'이 복지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덕구는 '원스톱 복지 서비스'인 희망드림 행복상담실을 운영하였다. 건강, 법률, 취업, 가정, 복지 등 5개 분야 전문상담사로 구성된 행복상담실은 매주 화요일 오후 2~4시 각 주민센터를 순환하며 업무를 수행했다. 협력기관으로 법무부 홈닥터, 대한산업보건협회 대전산업보건센터, 대전가톨릭가정폭력상담소, 대덕구정신건강증진센터, 사랑나무 교육센터 등이 참여해 관리 대상자 선정부터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까지 업무를 지원했다.

2015년에는 복지수요의 증가에 따라 희망복지지원단 조직을 개편해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권역동 주민센터로 세분화해 4개의 동 통합사례

관리팀을 설치하고, 거점권역별 민간 전문 사례관리사를 배치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수행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민간전문인력을 전진 배치해 위기가정을 직접 관리하게 함으로서 일선 동 주민센터의 복지업무는 경감되었다.

조직 및 담당		담당 업무
희망복지지원단	단장	·동 복지허브화 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운영체계 지원 ·자원관리 및 지역사회보호체계 운영 총괄 ·맞춤형복지팀 기능강화 총괄(통합사례관리사 관리)
	통합사례관리	·맞춤형복지팀 통합사례관리 대상가구 유형별 현황 관리 ·사례관리 모니터링 현황 점검 ·맞춤형복지팀 조정 및 지원(사례회의, 솔루션위원회 상정)
	자원관리	·구 지역사회복지자원 DB관리 및 업데이트 ·구 단위 자원개발 및 서비스연계 지원
	민관협력	·민관협력기관 간 상시적 연계·협력체계 마련 ·민관협력 기반의 특화사업 추진
	긴급지원	·위기가정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지원



2017년에는 복지혜택 누락이나 중복 수혜 등 공공복지의 한계를 보완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촘촘한 인적 안전망을 구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대두되었다. 이에 희망복지지원단 산하 맞춤형복지팀을 확대 운영하였다. 또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지원체계를 위해 지역 내 단체들과 '민관학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유기적인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였다. 민관학협력 체계에는 공공기관과 민간 복지기관은 물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한남대학교 등 30여 곳이 참여했다. 협력 단체들은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복지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누락 및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위기가정에게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자는 데 뜻을 모으고, 유기적인 지역복지전달 시스템을 완성해 최적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8년에는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강화 및 동 단위 민관협력 커뮤니티케어 추진에 역점을 두었다. 동 주민센터와 거점복지관을 연결해 동 위기가구 발굴단 전수조사와 사후조치를 진행했다. 또한 지역별 특성을 살린 찾아가는 복지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HOME > 종합뉴스 > 대전

대전 대덕구, 통합사례관리 또 통했다!

금기양 기자 | 승인 2016.06.12 17:40

오정동 통합사례관리사의 신속 대처로 의식 잃은 독거 기초생활수급자 생명 살려

대전 대덕구는 희망티움센터 오정권역에서 일하고 있는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의 발 빠른 대처로 홀로 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생명을 구해 귀감이 되고 있다.

지난 8일 오정권역 통합사례관리사인 강보라와 이현주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작을 하고 있던 홀로 사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발견해 신속한 조치로 추가 사고를 예방했다.

〈충남신보(2016.6.12.)〉



HOME > 지역 > 대전.세종.충남

대덕구 법1동 촘촘한 복지서비스 성과

김경태 기자 | 승인 2018.06.17 16:41

쓰러진 홀몸 치매 노인 구해 '눈길'

대전 대덕구 법1동이 찾아가는 복지상담을 통해 홀로 사는 치매 어르신의 생명을 지켜 화제가 되고 있다.

법 1동이 지난 14일 오전 10시30분께 치매를 앓고 있는 홀몸 어르신의 안부를 보라미(대전복지재단 소속 자원봉사자)에게 요청했고, 보라미는 어르신 댁을 방문해 쓰러져 있던 어르신을 발견해 동 맞춤형 복지팀에게 알렸고,복지팀에서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이송해 위기를 모면했다.

〈충청매일(2018.6.17.)〉

찾아가는 복지 전담팀의 핵심인력은 통합사례관리사들이다. 통합사례관리사들은 관 소속 민간인력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추고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와 시군구 각 부서, 지역주민 및 관련 기관의 협조로 발굴된 사례자의 초기상담을 실시하고 심층조사와 서비스제공계획 수립, 서비스제공, 모니터링까지 진행한다. 때문에 주민들이 가장 많이 대면하고 가장 가깝게 느끼는 이들이 바로 희망복지지원단의 통합사례관리사들이다. 어렵고 힘들 때 가장 먼저 달려가 위기의 생명을 구한 사건들은 세간의 화제가 되기도 했다.

모두가 힘을 모으자 복지가 좋아졌다! 대덕구형 민관학협력 복지전달체계

대덕구민들의 자랑 중 하나는 민관학협력 복지전달체계이다.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민들레의료사협)'은 민관학협력 복지전달체계의 한 기관이다.

민들레의료사협은 창립 17년을 맞는 사회적 기업으로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이 많고 돌봄 서비스 등이 절실한 법1동에서 주민들과 나준식 원장의 합심으로 만들어졌다.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하고 저소득층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최근 3년간은 주민참여건강센터를 개설해 지역 내 고령화 노인, 만성질환 환자 등 취약계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의료사협의 활동은 의료에 대한 부분만 인정되어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민들레의료사협이 의료와 복지를 함께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던 중 대덕구의 민관학협력 복지전달체계와 연이 닿았다. 관내 다양한 단체의 도움으로 민들레의료사협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 제공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되었다. 민들레의료사업의 사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역사회주도형 노인건강 돌봄사업'(2015~2018)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사업-커뮤니티케어 모델링 사업'(2018~2019)으로 선정되었다. 건강반 운영과 맞춤형 통합케어매니지먼트 시스템 운용, 지역사회 건강자원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대덕구 민·관·학 협력 복지전달체계 구축 협약(2017.6.16.)〉

계	대덕구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교육 기관	관공서 및 종합병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복지관	기타 고난이도 사례기관	방문 돌봄 기관	대덕구 기관단체
31	1	1	1	5	1	6	2	3	11

〈대덕구 민·관·학 협력 복지전달체계 구축·운영〉

이밖에도 대덕구는 민간이 주도하는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사업의 확장성을 넓히기 위해 민관학협력 복지전달체계를 구상해 실현하였다. 30여 민관학 단체는 협약을 통해 상호협력이 필요한 부분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주요 협력 분야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대응방안 모색, 복지대상자 관련 정보 공유 및 서비스 연계와 의뢰, 복지대상자 공동 방문 및 공동 모니터링, 인적·물적 자원 공유 및 개발, 다양한 복지욕구 대응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및 자문, 기타 지역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자원봉사와 재능기부, 긴급구호 등이다.

함께하는 보건복지, 이웃사촌 공동체를 되살리다

대덕구에서 진행하는 주민참여형 복지 서비스 중에 구민들에게 가장 호응이 좋은 것은 '동 단위 사업'과 '방문 상담'이다. 이웃과 함께하는 동 단위 사업과 방문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보건복지 서비스로 주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있다.

- '건강반과 건강리더'가 나서자 건강약자도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시작하다

건강반은 취약계층 밀집지역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간단체 활동이다. 비슷한 욕구를 가진 건강한 사람들을 묶어서 활동하게 하여 더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한다. 요가가 필요한 사람들은 요가, 명상이 필요한 사람들은 명상으로 묶어 활동을 하는 식이다. 2018년 9월 현재 43개 건강반이 운영 중으로, 2016년부터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교육을 받은 160여 명이 건강리더로 참여하고 있다. 이밖에도 대전사회적가족지원센터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건강자원을 조사하는 '마을건강 네트워크 구축' 사업과 지역주민과 건강자원을 연결하는 '지역사회 건강증진 플랫폼' 모델링 사업 등이 진행됐다. 마루어린이도서관과 민들레의료사협은 법1·2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제를 발굴을 위한 마을회의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동의 문제는 동 주민이 먼저 해결하자! 주민교육과 캠페인 실시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복지 전달체계의 중심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 홍보를 위한 주민교육과 캠페인을 전개하는 내용으로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모사업으로 약 4억 563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선진지 견학, 역량강화 교육, 워크숍 개최, 거리 캠페인도 진행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사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선진지 견학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교육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거리캠페인

-민과 관의 장점만 모았다! '동 주민센터-거점 복지관' 운영

동을 중심으로 한 상호 협력과 복지기능 강화를 위해 대덕구는 거점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다. 동 주민센터에서 사례 발굴과 관리 지원 자원 공유를 지원하면, 거점복지관에서 지역복지 현장 경험을 제공하고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동 주민센터-거점복지관 운영 이후로 누락되거나 중복되는 복지대상자 발굴이 쉬워졌다. 공동 통합사례관리 추진으로 가구 공동 방문과 모니터링이 실시되면서 민관 협력 기반의 지역특화사업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동주민센터-거점복지관】



동-거점복지관
마을공동체 교육

이웃공동체 활성화
프로젝트 인사캠페인

대덕복지관-신탄권역
주민 원탁회의

민·관이 함께하는
대덕구 연합사례발표회

-복지 사각지대 NO! 능동적 위기발굴체계가 언제나 찾아낸다

대덕구는 지역 주민과 민·관이 상호 협업하는 '능동적 위기발굴체계' 구축과 운영을 위해 동별 복지위기가구 발굴단(12개 동 총 735명)을 구성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사전 작업으로 대덕구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 644명의 위촉식이 있었고, 위기가구발굴단 다짐대회와 복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홍보 캠페인도 진행됐다. 중·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타운홀 미팅과 복지통장과 만두레, 동지사협과 복지관을 대상으로 한 인적안전망 역량강화 교육과 복지통장 교육도 개최됐다.

이후 총 19회에 걸쳐 5,527가구를 찾아가는 전수조사가 진행됐다. 2018년 말까지 약 5,000가구에 대한 조사가 완료 되었고 사후 조치로 공적급여 연계(489건), 서비스연계(1,835건), 상담지원(1,283건), 기타(1,050건)의 조치가 취해졌다.

구분	계	동별 위기가구발굴단 구성 현황(단위: 명)											
		오정동	대화동	회덕동	비래동	송촌동	중리동	법1동	법2동	신탄진동	석봉동	덕암동	목상동
인원	735	54	54	65	54	80	83	30	103	56	50	50	56

• (오정동) 이웃사촌 공동체	• (대화동) 대화동 인적안전망 위기가구 발굴단
• (회덕동) 위기탈출 솔루션	• (비래동) 희망터치
• (송촌동) 송촌동 행복나누미	• (중리동) 숨바꼭질 위기가구발굴단
• (법1동) 희망나누미	• (법2동) 희망톡!톡!(talk talk) 이웃지킴이
• (신탄진동) 신탄진 사각지대 발굴단	• (석봉동) 석봉동 위기가구 발굴단
• (덕암동)우리는 이웃공동체! 복지사각제대 제로화!	• (목상동) 목상동 우리 동네 지킴이

【동 인적안전망】


대덕구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위촉



대덕구 위기가구발굴단
다짐대회


위기가구 발굴단
홍보캠페인


대덕구 복지통장 교육

–"우리가 찾아가요, 사랑합니다!" 찾아가는 복지 상담 서비스 지원

대덕구에서는 지역 특성을 살린 찾아가는 복지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법1동은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행복상담소'를 운영해 공공기관 방문이 어려운 지역주민을 만나고, 법2동은 매주 목요일 저녁시간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별빛 복지상담실'을 운영하며 내방과 방문 상담을 실시한다. 오정동은 '웃찾사(우리가 찾아가요, 사랑합니다)' 기동대를 운영하며 어려운 저소득 주민과 살핌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가 홍보 캠페인과 사례 발굴에 나섰고 비래동은 매주 수요일 관내 가정을 도는 '릴레이 복지통장제'를 운영하며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돕는 분위기를 확산해 나간다. 주민 상담은 이웃이 이웃을 돕는 주민참여형 복지로 이어져,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찾아가는 복지상담】


법1동
행복상담소



법2동
찾아가는 별빛 복지상담실


오정동
웃찻사기동대



비래동
희망터치 릴레이 복지통장

-이웃이 이웃을 살피면 소외가 사라진다! 주민참여형 복지 실시

주민차여형 '찾아가는 안부 살피기 사업'은 12개 전체 동이 실시하고 있다. 각 동의 복지 담당자와 12개 동 복지만두레 회원들이 동네주민이 선정한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 안부를 묻고 밑반찬을 나눈다. 각 동 특화 사업으로, 회덕동은 '외식합시다! 회덕동 미식회'라는 주제로 가족과 단절되어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식사를 함께하고, 비래동은 '통통통 봉사단'이 한부모가족과 어려운 이웃에게 복지관으로부터 후원물품을 지원받아 전달하고 있다.

-'동행'하면 '소통'도 '돌봄'도 쉽습니다! 보건-복지서비스 연계강화와 민관 협력 커뮤니티케어 추진

동의 사례관리담당자와 방문간호사가 함께 위기 가정을 방문하는 '동행 상담'은 보건복지 연계강화 대표 사업이다. 5명의 방문간호사가 동행 방문하여 방문 보건서비스를 제공하여 누적 회수가 약 9,500건에 달할 정도로 활성화 되었다. 이 외에도 건강마을협의회 협약,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양성교육(43회 약 1,600명 교육), 치매 파트너 양성교육(15회 약 400명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건강리더를 양성해 지역 주민이 지역주민을 케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민관 협력 커뮤니티케어 네트워크 구축 사업으로는 법1·2동 취약계층 밀집지역에 건강 유지 증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 건강 네트워크 사업'이 진행 중이다. 맞춤형 복지팀과 민들레의료사협이 공동 운영하는데 대상자 요청에 의해 의료서비스를 연계해준다. 이 밖에도 신탄권역에서는 복지대상자 병원 지원과 퇴원 후 사회 복귀를 도와주는 돌봄 네트워크가 운영 중이다. 법1동에서는 건강지원을 위한 상담과 캠페인을 벌이는 건강마을 공동체가 운영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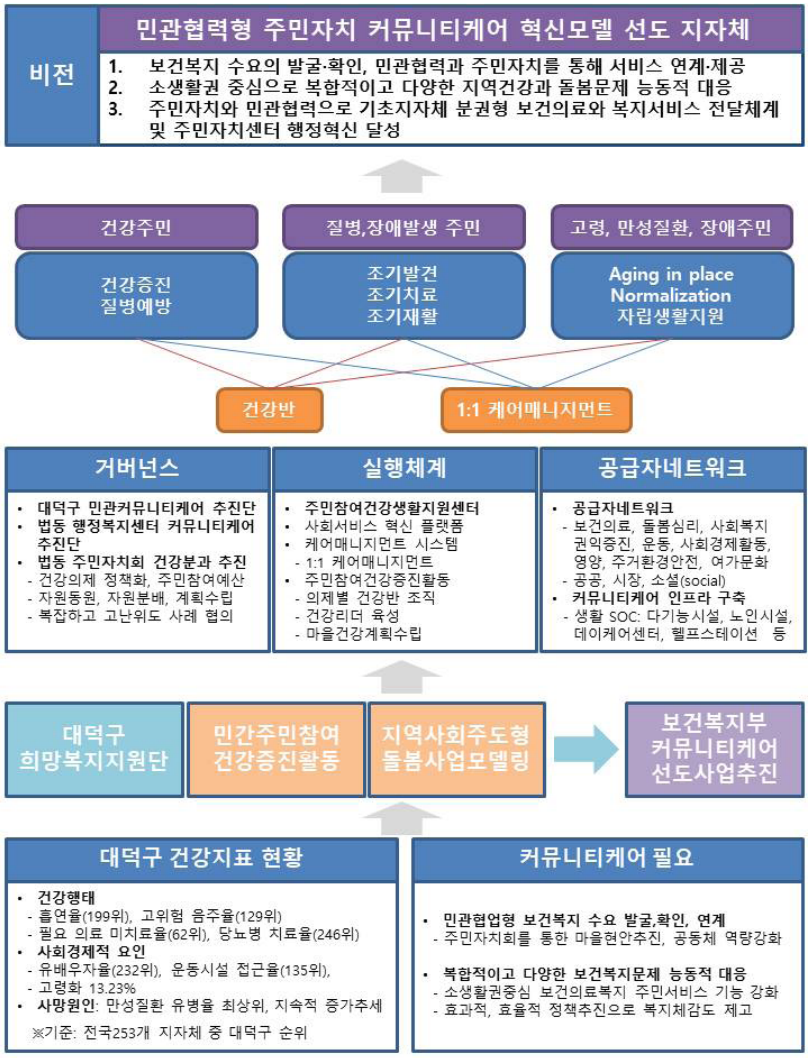
【민관 협력 커뮤니티케어 네트워크 구축】



마을 건강네트워크 운영 | 신탄권역 돌봄 네트워크 | 범천골 건강마을 공동체 | 법동 커뮤니티케어 모델 워크숍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민이 구민을 돌보는 커뮤니티케어로 실현할 것

2017년 대덕구 관내 12개 동 중, 혁신읍면동의 시범 사업(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의 이전 명칭)을 진행했던 곳은 송천동이 유일하다. 그러나 2019년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동이 3개(송천동, 중리동, 덕암동)가 된다.



〈민간협력형 주민자치 커뮤니티케어 혁신모델 추진〉

대전시의 8개 시범 동 중 3개 동이 대덕구에 위치해 있다. 대덕구민들은 마을의 자체 사업을 스스로 발굴해 지원하는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역시 확대되리라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발표한 2019년 계획에서는 지역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인 커뮤니티케어를 매우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63억 원 예산 배정). 대덕구는 이처럼 국가적 정책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지역민이 지역민을 돌보는 커뮤니티케어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민간조직이 자생적으로 케어서비스를 생산하도록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다. 또한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면 복지를 포함한 다양한 공공서비스가 주민 주도 형태로 전환되리라 예상하고 다양한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 이후로도 대덕구는 민과 관의 협력을 통해 복지대상자 발굴과 지원, 사업 진행과 모니터링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고,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우수사례집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13

‘이웃 살핌’이 생활이 되고 ‘함께 나눔’이 축제가 되는 주민 주도 복지도시

부산시 사상구









주민이 주인되는
공공서비스
주인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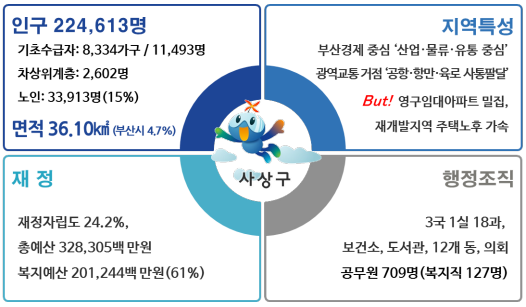
13 ‘이웃 살핌’이 생활이 되고 ‘함께 나눔’이 축제가 되는 주민 주도 복지도시

부산시 사상구

고독사와 자살 예방을 위해 촘촘하게 펼친 다복따복망 (다함께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안전망)

사상구는 도심지 내 공업지역을 보유한 산업·물류·유통의 중심지로 광역교통의 거점 도시이기도 하다.

하지만 외형과 달리 대단위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이 있어 복지자원의 불균형이 심각하고, 공단주변 오래된 거주지는 재개발지역으로 주택노후가 가속화되고 있다. 사상시외버스터미널 주변으로는 모텔과 여관이 많아 1개 행정동으로는 전국 최대 숙박업소 밀집지역이기도 하다. 이들 숙박업소에는 취약계층들이 임시로 머무는 경우가 많은데 장기투숙자 수만 700명이 넘는다. 복지사각지대로 전락할 위험이 큰 상황이다. 각종 통계에서도 이러한 위험은 감지되고 있다. 사상구의 인구는 2018년 9월말 약 22만 명인데 이 중 수급자를 포함한 취약계층이 14,095명(6.3%)이다. 부산시 자치구 중 취약계층 비율이 5위이다. 노인 인구 또한 15%를 차지한다. 이는 부산시 평균보다는 낮지만 사상구의 고독사 사망률 중 40~50대 비율이 52.9%로 높고, 부산시 자살률에서도 사상구는 가장 높은 비율(38.2%)을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반적인 1인가구의 증가로 예산의 투입과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한계 상황이라 하겠다.



사상구는 주민주도형, 지속가능한 복지안전망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지역문화에 맞는 보건과 복지가 연계된 사업들을 추진하였다. 다복따복망 기관연대, 생활밀착형 영세업소 신고망, 주민참여 이웃확인망 등은 대표적인 사상구의 보건복지 서비스이다. 사상구는 이제껏 동 단위 복지 안전망들을 만드는 데 주력해 왔다.

실현가능하고 지속가능한 복지안전망의 모든 것! 사상구의 복지 솔루션을 소개합니다

참여와 협력은 지속가능한 복지안전망을 만드는 힘! 주민참여형 사상구의 복지안전망

-"듣고 나누면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의견수렴을 통한 다복따복망 확산과 틈새망 구축

복지사각지대, 고독사 등 지역문제의 심각성은 인정하나 업무 중 인지한 취약계층 정보를 알릴 방법이 모호하고 몇 명의 인력이 이를 다 해결하기에 물리적 제약이 많은 것도 엄연한 현실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 주도의 복지안전망을 더 구축하는 것도 의미는 있겠으나, 주민의 수동적 참여로 일회성으로 끝날 위험이 크고 지속가능성에도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활밀착형 골목업소와 취약계층과 접점에 있는 시설과 단체를 발굴해 보다 촘촘한 인적안전망을 구축해야만 했다.

이에 사상구는 2017년 8월 지역 내 각급 기관과 골목 업체, 이웃 주민 등이 힘을 합해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발굴하는 사상구만의 인적안전망을 구축하였다. 이름 하

여 '다복따복망'(다함께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망)은 이웃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집약한 주민주도·주민참여형 인적안전망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고독사 예방, 민·관 협력 활성화를 일구는 조직이다.

경찰서, 소방서, 도시가스, 한전 등 관내 14개 주요 공공기관이 협력하여 각 기관 업무수행 중 담당자가 인지한 취약계층을 발굴해 관계망(구사일생)으로 신고하여 연계하도록 하고 있다.

사상구는 다복따복망 확산을 위해 주민의견 수렴기간을 3주간 운영하였고, 수렴회의 14회에 317명의 주민 참여를 이끌어 냈다. 그리고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다세대주택 관리인, 종교단체 176개로 구성된 틈새망을 구축하였다. 이 과정에서 찾아가는 공감토론회(3회, 70명)와 전문가 초대 공감+토론회(1회 28명)도 진행되었다.

이렇듯 주민 스스로 의견을 내는 절차를 통해 책임감을 높이고, 주민의 시선에서 문제해결 아이디어를 찾는 과정을 통해 사상구는 실질적인 복지안전망을 확산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도 쌍방향 공감토론방식을 도입해 주민이 지역문제 해결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함으로써 인적안전망을 지속성으로 강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틈새망 의견수렴


공감토론회①


공감토론회②


전문가초대 공감+토론회

-골목에 있는 이웃도 안전한가요? 생활밀착형 영세업소가 나섰다

사상구는 골목업주가 인지한 위기가구에 대한 정보가 통·반장을 통해 전달되어 시기를 놓치거나, 중도에 잊어버리는 사례 등 상황을 파악하고 고시원, 여관, 찜질방, 슈퍼 등 280개 생활밀착형 영세업소에 신고망을 구축하였다. 이는 골목의 영세업주가 생활 속 관계망을 통해 취약계층의 위기상황을 인지하고 제때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도입 초기에는 영세업소 자체의 생활고로 관심이 없거나, 관공서에 대한 불신으로 신고를 꺼리는 업소들도 있었다. 동장과 복지전달팀은 신고 절차가 복잡하고 기준이 까다로워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는 영세업소를 직접 찾아 나섰다. 골목골

목을 방문해 설명한 후 승낙서를 받으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자 영세업소의 대표들도 적극성을 보여주었다.

생활밀찰형 영세업소 관계망에 가입되면 전화기에 구사일생(9410) 스티커를 부착한다.

현재도 불신 해소를 위한 골목망 집중발굴기간을 반기별 1회, 1개월간 운영하며 지속성을 강화해 가고 있다.



골목업소 방문 ·설명


참여 승낙서 수령


스티커 부착, 홍보물 배포


골목망 집중발굴기간 운영

-한 번 살피면 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숙박업소 장기투숙자 돌봄 사업 추진

괘법동은 1개 행정동으로는 숙박업소 전국 최다 밀집지역으로 40~50대 고독사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다. 사상구는 숙박업 230개소를 조사해, 110개소에 719명의 장기투숙자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업주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이후 숙박업주 간담회(1회, 40명)를 개최하고, 벽걸이형 긴급지원안내문도 1,000매 부착하였다.

숙박업소 특성 상 상시종사자 1인이 근무하는 형태여서 설명회·간담회에 참석해 지역협력체를 구축하는 데 어려움이 많고 의견수렴도 쉽지 않았으나 동장 동행 업소 방문을 통해 어려움을 해소해 나갔다. 환경위생과의 도움으로 숙박업연합회의 지원을 받아 숙박업소 밀집지역에서 별도의 영세숙박업주 간담회도 개최하였다.

결과적으로 장기투숙자 현황조사와 업주네트워크를 통해 복지통장-동 복지전담팀-숙박업주의 협력망을 구축하게 되었다. 협력망은 장기투숙자의 근황을 수시로 확인하며 고독사와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유용한 관계망이 되었다.



숙박업소 전수조사


장기투숙자 방문 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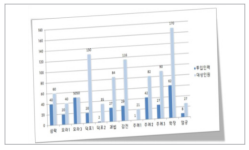

긴급지원 안내문 부착


숙박업주 간담회 개최

-"안녕하세요?" 한 마디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이웃참여 안부확인망을 리뉴얼하다

사상구에서는 이웃참여 안부확인망을 운영하여 왔으나, 동별 지역여건 및 주민조직 역량에 따라 주민참여 편차가 크고, 배달원 활용형의 경우 안부확인을 위한 사전 장치(간담회 등)가 없어 운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동별 안부확인망의 정확한 실태를 조사하고, 주민참여 실태를 확인한 후 이웃망 운영방식을 리뉴얼 하였다. 개선 기간(2개월)을 보낸 후, 사상구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주민복지역량 강화를 위한 사상다복동아카데미를 운영(월 1회)해 38개 사업에 593명의 주민참여도 이끌어 냈다.


안부확인사업 조사·분석


주민참여형 확대


배달원형 방식개선



사상다복동아카데미

협력에도 충전은 필요해!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동반 사업 실시

-14개 공공기관이 힘을 합쳐 다복따복망에 활력을 불어넣다

다복따복망은 처음 협력체계를 구축할 때만 해도 업무의 성격(세무서, 구치소 등)상 특별한 역할을 기대할 수 없거나 별도의 전산망(고용복지+센터)이 있어 참여에 부정적인 기관들이 많았다. 하지만 사각지대발굴전용 전화(313-9410, 구사일생)를 개설하여 신고창구를 일원화하고, 찾아가는 설명회(7회 270명)를 개최함과 동시에, 맞춤형 홍보물(미니달력, 터치식 볼펜, 탁상용 메모지)을 배포하며 직원들의 협조를 유도해 나갔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14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활력을 유지하고 있다.


기관 협약식


다복따복선포 캠페인


찾아가는 설명회


구사일생 전화개통

-오래 함께 해야 희망도 자랍니다! 지속가능한 기관협력망 활성화

기관 협약식 이후 소속 직원의 지속적인 발굴 활성화가 필요했지만 기관 본연의 업무추진과 기관장 변동, 직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지속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사상구는 기관과 함께하는 협력사업을 발굴·공동 추진하여 기관망을 활성화 하고, 분기 1회 우수 발굴사례를 따복공동망 소식지에 싣도록 하였다. 개인과 기관이 함께 협력사업을 공유하자 호응도도 높아졌다.

이후 부산도시가스와 협력해 사랑의 에너지 나눔사업(노후가스렌지 교체)을 추진하여 18가구에 새 가스레인지를 설치하여 주었다. 또한 부산구치소 희망돋움상담실을 격월 1일에 운영하고, 우체국 희망복지협력사업도 강화하였다.


가스레인지교체(도시가스)


희망돋움상담실(구치소)


희망복지사업(우체국)


소식지 발송

돌봄이 지역 문화가 되는 그날까지! '모두의 살핌 서약 운동' 온라인 전개

공공기관 산하의 주민조직이 주축이 되어 인적안전망을 구축하면 사업 확산에 한계가 있어, 복지사각지대·고독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게다가 일반 주민에게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공론 장이 부족하다. 또한 이웃의 무관심은 지역공동체의 돌봄 문화 확산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사상구는 홈페이지 방문하는 일반 주민이 우연이라도 살핌 서약문을 읽을 수 있도록 하여 이웃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구민 모두 인적안전망으로 돌봄과 살핌이 문화가 되는 기반을 마련코자 하였다.

2018년 12월까지 사상구 홈페이지를 방문해 서약문을 읽고 클릭에 참여한 구민은 1,294명이다. 사상구는 앞으로도 지역 축제에서 모두의 살핌 서약 운동본부를 운영하고, 돌봄 문화를 확산해 갈 것이다.



구 홈페이지


참여 안내문



희망복지페스티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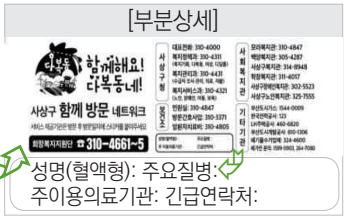

살림서약 운동본부 운영

복지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다! 보건과 복지를 연계한 복지안전망 지원체계 구축

복지사각지대에서 대상자를 발굴하여 신고하였으나,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대상자가 연계서비스로 연결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체계적인 시스템이 없어 발굴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가 후순위로 밀리면 발굴 주체 역시 발굴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을 갖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사상구는 구와 동이 연계하는 온-나라시스템에 서식(접수 및 처리)을 등록하고 복지사각지대 대상자가 등록되면 48시간 이내 처리토록 복지전담팀과 연결망을 체계화하였다. 또한 보건-복지 연계사업으로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실제 작동하는 복지안전망을 구축하였다. 동과 보건소는 집중지원 요일을 지정해 월 2회 '함께 방문 DAY'를 운영하고 있다. 1,900가구에는 '함께 방문 달력'을 배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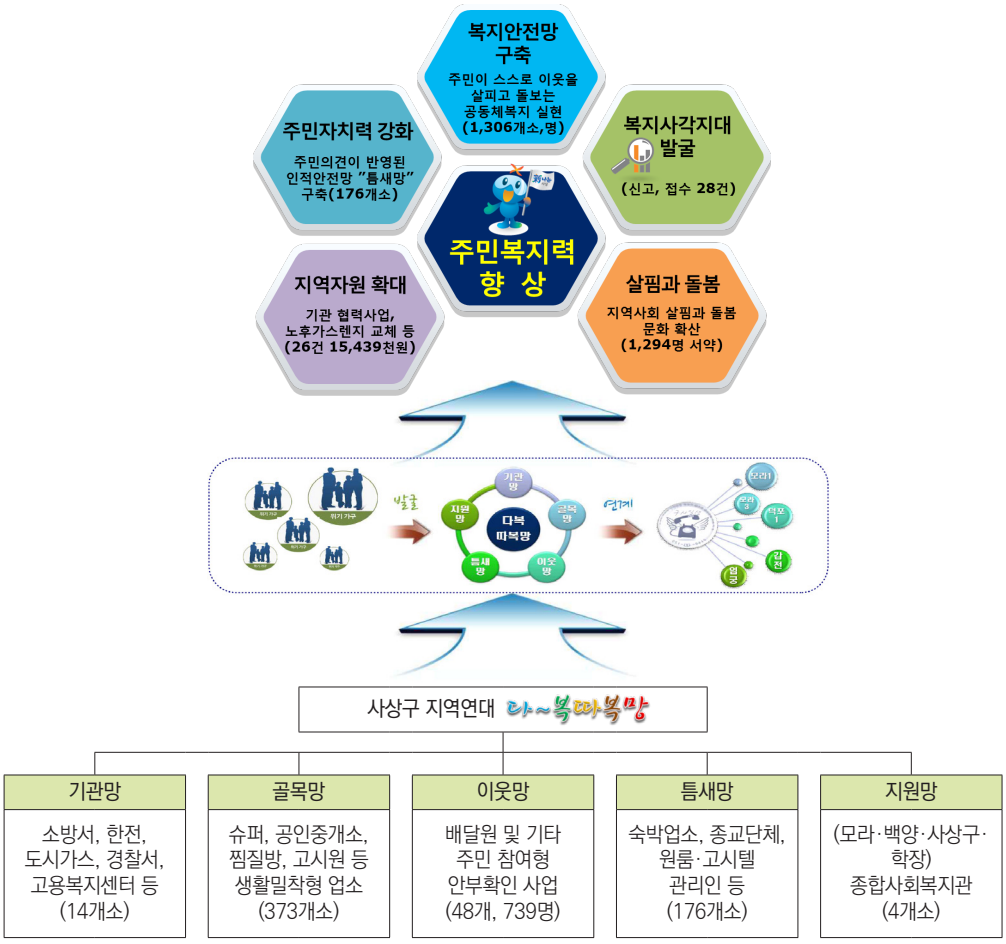





함께방문달력 배포


온나라 시스템

사상구의 미래, 주민자치력과 주민복지력을 함께 키우고 함께 누릴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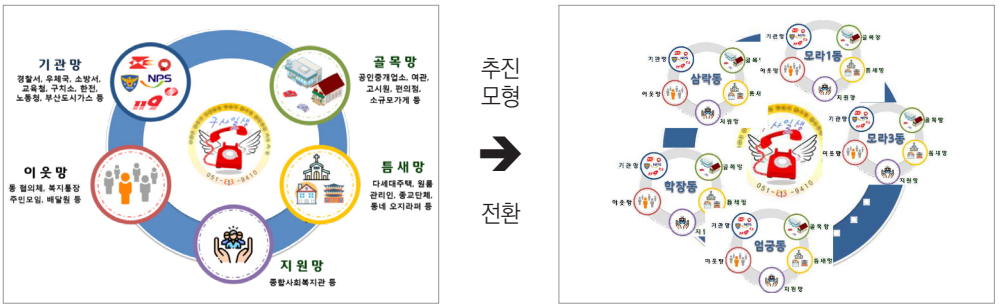


-주민 가장 가까운 곳에서의 복지를 위해! 동 단위 복지안전망 추진

사상구는 주민자치력을 바탕으로 한 보건-복지 연계거점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마을마다 주민 주도 건강소모임을 운영하며 보건복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지역 단위의 보건 교육과 건강을 주제로 한 문제를 발굴·해결하려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동 마다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방안도 마

련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구 단위 복지안전망을 동 중심 복지안전망으로 개선하고 있다.



구 단위 복지안전망 동 중심 복지안전망

-주민자치력, 공감도우미와 공감토론회로 키우겠습니다

사상구는 공감도우미를 양성하여 지역주민이 스스로 책임성 있는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공감도우미는 누구나 참여가능하고 3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3기에 걸쳐 3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공감도우미 1인당 5회의 공감토론회를 열어 150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감토론회는 골목 단위 소규모 토론회로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주민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복지사각지대를 거르는 3대 망(기관망·골목망·지원망) 육성 Forever

사상구는 3대 망(기관망·골목망·지원망)의 주민 참여확대 및 활성화를 장기 추진 과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서 기관 협력사업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지역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관망은 주거, 의료, 정신건강 등 분야를 확대하고 분기별 소식지를 발송해 확대할 것이며, 협력사업으로 사례관리 복지자원은행인 다온뱅크도 운영할 예정이다. 골목망은 반기 1회 집중발굴기간을 운영해 참여골목업체를 정비하고 추가 발굴에 힘을 쏟을 것이다. 지원망 강화를 위해 분기별 1회 짬톡회의도 진행하며 민간복지관 사각지대 발굴 사업을 공유·협력해 나갈 것이다.

일례로 다복따복의료지원망은 사례회의를 통한 케어매니지먼트 계획을 수립하

고, 맞춤형 공동관리도 추진하고 있다. 움직이지 못하는 대상자는 방문간호, 재택의료, 일상생활지원(가사서비스)을 연계하고, 움직임이 수월한 대상자는 마을건강센터 건강관리프로그램과 복지서비스를 안내·제공한다. 다복따복의료지원망은 다복따복이웃망과도 연계되는데 의료지원망이 복지사각지대의 의료지원을 후원·확약하여 맞춤형 연계사업을 진행하면, 이웃망에서는 치매,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고, 만남터도 제공한다.

-마을건강센터, 보건과 복지를 함께 나누는 이웃들의 공간이 만들어진다

〈 연차별 마을건강센터 설치계획 〉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개소】 학장동 모라3동	【4개소】 주례2동, 감전동 주례3동, 덕포1동	【4개소】 모라1동, 삼락동 덕포2동, 괘법동	【2개소】 주례1동 엄궁동

마을건강센터는 마을건강코디네이터가 중심이 되어 주민공동체의 복지와 재생, 주민자치와 협업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건과 복지의 연계 거점으로 각 동에 추가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각 동은 마을건강센터를 중심으로 보건-복지 사업을 진행하는데, 병·의원, 약국, 의료기기, 안경점 등 기관협약에 의한 지원망을 구축해 복지 서비스도 지원하려 한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우수사례집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14

‘다함께 열어가는 으뜸도시 완주’가 보건복지도 앞서갑니다

전라북도 완주군









주민이 주인되는
공공서비스
주인공

14 ‘다함께 열어가는 으뜸도시 완주’가 보건복지도 앞서갑니다

전라북도 완주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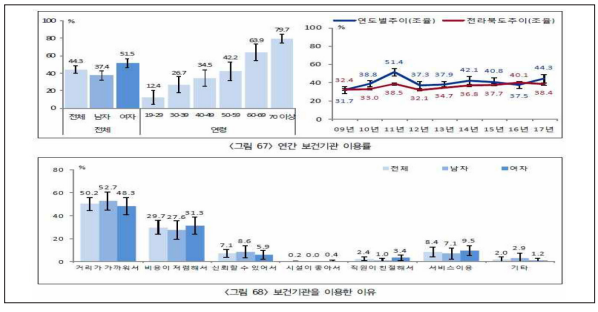
밀착형 보건의료서비스로 의료 인프라 격차를 해소한다

3읍 10면으로 이루어진 완주군의 인구는 2018년 7월 기준 9만 5,236명이다. 이 중 65세 이상이 19,498명으로 전체 인구의 20.5%를 차지하고 있다. 보건기관 이용률은 전라북도 대비 높은 편으로, 병의원이 없는 의료사각 지대(상관, 비봉, 화산, 동상, 경천, 운주)의 이용률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완주군은 읍면별 의료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고 밀착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편 필요성을 인지하고, 권역별 보건사업팀을 구성하였다. 12개 보건지소, 17개 보건진료소를 5개 권역별 보건사업 서비스팀으로 구성(2013년)하고 방문간호사를 보건지소에 배치하였다. 이 같은 권역별 보건사업팀은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및 통합보건사업을 실시하여 인프라 중복을 막고, 사업운영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대상자에게 일관된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였다.



완주군 의료기관(의원) 현황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이용 현황

완주군의 보건-복지 모델, 효율성과 주민 만족도를 동시에 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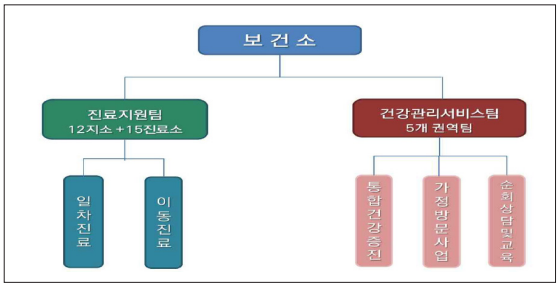
보건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으로, 업무 효율성 UP! 주민 만족도 UP!

-권역별 팀제 운영으로 주민 접촉면을 넓힌 보건서비스

완주군은 우선 보건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하였다. 2012년 8월부터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근무행태를 보건소가 있는 삼례읍을 제외한 12개 읍면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팀제로 운영하였다.



보건사업팀 구성 현황



보건사업팀 서비스 전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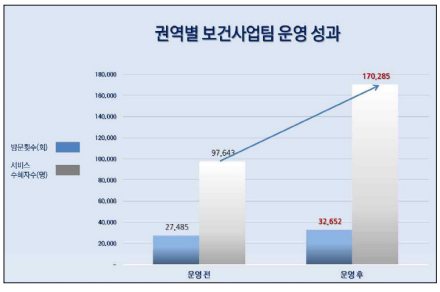
진료지원팀과 건강관리서비스팀은 업무수행도 달랐다. 5개 건강관리서비스팀은 포괄적 통합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지소와 진료소가 묶인 진료지원팀은 진료와 순회상담, 교육, 보건사업을 나누어 진행하였다. 건강관리서비스팀은 권역에 대한 건강관리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권역별 특징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1~3팀은 농촌과 도시가 섞여 있는 혼합형 사업을 4~5팀은 농촌형 사업을 진행하였다. 주요 업무는 통합건강증진(금연, 절주 등 11개 분야)과 가정방문 및 순회상담, 보건교육 실시 등이다. 진료지원팀은 오전에는 진료업무를, 오후에는 관할 구역 내 마을 순회 상담과 교육을 실시하였고 보건사업팀을 지원하거나 연계하는 활동도 진행했다. 이로써 1차 진료위주에서 주민 밀착형 포괄적 주민건강관리 기능을 강화한 교육, 상담 등 예방 위주로 사업 내용이 전환되었다.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보건계획에 주민이 참여합니다

완주군은 지역 수요에 기반하여 공통공감대를 형성하고 프로그램의 지속성 보장을 위해 마을 건강 대표자들이 건강 마을 계획의 수립과 운영에 참여하였다.



-권역별 보건사업팀 운영 성과 GOOD!



구 분	운영 전	운영 후	비고
사업추진 효 과 성	복합적 보건사업을 1인이 추진하므로 형식적인 업무처리	- 총괄적 사업수행으로 업무효과와 성과 향상 - 보건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전달 -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사업추진 용이	효과성 높음
업무생산성	1인의 업무 추진으로 효율성 및 효과성 떨어지고 생산성이 낮음	- 보건사업 추진에 따른 정확하고 올바른 분석·평가 가능 - 팀제 운영에 따른 조직 내 시너지 효과 창출	생산성 높음
주민만족도 (체감도)	찾아오는 주민대상 사업추진으로 보건사업 주민 체감도 미미	- 경로당 등 마을시설 활용, 주민 직접 접촉으로 주민 호응도 높음 - 주민늘이 보건사업을 접할 수 있는 기회 확대로 만족도 증가	만족도 (체감도) 높음

보건사업팀제 운영 성과를 살펴보면 총괄적 사업수행에 의한 효과성 향상, 팀제 운영에 따른 시너지로 생산성 향상, 주민과의 접촉이 많아져 주민 만족도도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숙고로 준비된 완주형 보건-복지 모델, 주민자치로 날개를 달다

완주군은 한정된 재원과 행정력으로 늘어나는 주민 요구를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을 인지하고, 지역 내부자원을 활용, 인적역량을 키워내 그동안 충족되지 못한 지역의 필요를 사회구성원의 협동,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전문가 자문 요청


추진관련 실과 회의


추진방향 공유


추진단 간담회

이를 위해 2018년 6월에는 전북연구원에서 완주형 모델 구축을 위한 전문가 자문 요청을 실시하고 완주군의 보건·복지 인프라 분석 및 활용방안을 논의하였다. 다음으로 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전북연구원이 모여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추진관련 실과 회의를 개최하였다. 2차례에 걸쳐 관계부서 협업모델 창출을 위한 방안 모색과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2018년 7월에는 5개 권역 보건사업팀이 모여 직원대상 사업 추진방향 공유 시간을 가졌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의 추진개요를 설명하고 완주군 모델(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수렴을 거쳤다. 마지막으로 완주군수,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단이 만나 자치단체장-공공서비스 추진단 간담회를 가졌는데, 농어촌특성을 반영한 보건복지서비스 모델 제안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담인력 증원 요청이 이루어졌다. 추진단은 인력지원 확답을 받고 지속적 추진노력도 당부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완주군은 소셜굿즈 사업을 통해 '주치의제도에 기초한 노인 토털 돌봄서비스'도 계획하게 되었다. 소셜굿즈(Social Goods)는 완주군 사회적경제를 통칭하는 브랜드 네이밍으로 사회적경제조직에 의해 생산, 제공되는 유무형의 상품과 서비스를 통칭한다.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협동조합을 육성하는 자율공모와 제시된 주제 항목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예비 협동조합을 발굴하는 주제공모를 진행해 선정된 아이디어 10건에 대해 사업비와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세심한 맞춤형 살핌, 찾아가는 보건복지 사업으로 실현하겠습니다.

- 2023년까지 전문인력 추가 배치로 보건 사업 체계적 확장 이룰 것

2018년 현재 완주군은 읍면동 복지서비스에 찾아가는 전담팀 구성을 통한 전문인력 배치를 완료하였다. 2016년에는 이서, 삼례, 봉동, 용진(기본형 4)에, 2017년에는 고산, 비봉, 동상(권역형 3)에, 2018년에는 상관, 소양, 구이(기본형 3) 경천, 화산, 운주(권역형 3)에 전문인력을 배치하였다. 이후에도 완주군은 단계적 충원을 통해 보건사업팀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2018년에는 보건지소 인력을 기존 진료 12명, 보건사업 13명에서 진료 8명, 보건사업 17명으로 변경하였다. 2020년에는 권역별 보건사업 5개 팀에 방문간호사 1명씩을 추가로 배치하고 2023년부터 13개 읍면별 보건사업팀을 확대 배치할 예정이다(아래 표 참조).

[읍면 행정복지센터 배치]	[보건지소 배치]
○대 상 : 비의료취약지역 (삼례, 봉동, 용진, 이서, 구이, 고산, 소양) ○운영·관리 : 읍면장 ○주요사업 : 질병예방을 위한 건강증진사업 ○세부내용 - 방문주민 상시 건강상담 지원 - 건강프로그램 운영, 보건소 사업 안내·연계 - 단계별 건강지원 서비스 제공	○대 상 : 의료취약지역 (상관, 비봉, 동상, 화산, 경천, 운주) ○운영·관리 : 보건소장 ○주요사업 : 1차의료제공 및 질병관리, 건강증진사업 ○세부내용 - 찾아가는 보건복지 플러스 사업 - 원격 의료지원사업

읍면 행정복지센터는 1단계 기초건강검진(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부터 2단계 선택건강검진(우울검사, 치매선별검사 등), 3단계 만성질환자 등록관리, 교육·영양·운동지도까지 단계별 건강 지원과 상시 건강상담 지원, 건강프로그램 운영, 보건소 사업 안내·연계를 담당할 것이다. 보건지소에서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초검진, 섭생관리, 물리치료, 복약지도 및 신체활동 지원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욕구/위기 발견, 통합사례회의 심사대상자 상정도 진행한다. 또한 원격의료 사업을 화산, 운주(2019) → 경천, 동상(2020) → 비봉, 상관(2021~) 순으로 진행해 거동불편자 중 전문의 진료가 필요한

주민이 화상장비를 통해 의사(보건지소 공중보건의)의 진료와 처방을 받도록 지원하고 방문간호사의 간호와 보조를 받도록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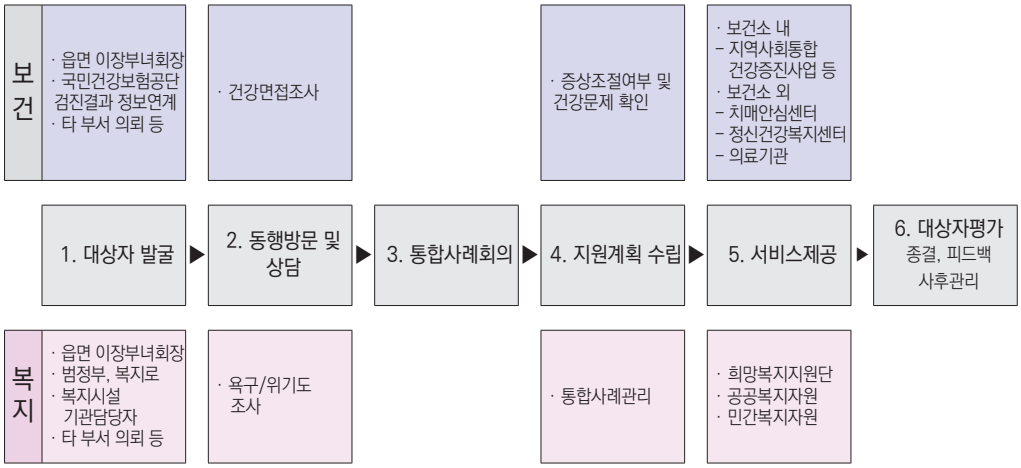
완주군은 시범 운영 진행 후 주민 접근성과 사업성, 그리고 서비스 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결과를 분석한 후 적용 모델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 찾아가는 보건복지 플러스 사업으로 완성되는 맞춤형 복지

2019년부터 완주군은 찾아가는 보건복지 플러스 사업을 실시하고자 한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읍면 맞춤형복지팀, 보건소 보건사업팀,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생활민원기동반 등이 방문해 개인별 욕구와 서비스 필요도에 따른 맞춤 지원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자원들의 효율적 운용, 서비스 중복 방지의 효과도 기대된다.



찾아가는 보건복지 플러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통합사례관리 회의도 진행된다. 읍면 맞춤형복지팀장 1명, 사회복지사 2명, 방문간호사 2명, 민간단체 2명이 월 1회(필요시 월 2회) 정기적으로 만나 통합욕구조사표를 활용한 관리군 분류(자기역량지원, 정기관리, 집중관리), 보건복지 종합의견을 통한 개인별 서비스 이용계획 수립, 프로그램 제공 및 지역 내 보건복지자원 연계, 전화 및 직접방문을 통한 서비스 진행사항 확인, 대상자 평가, 사후관리 지원 등을 논의한다. 긴급처리사항이 발생하면 수시회의도 진행한다.



연관 프로그램으로는 케어플랜 서비스, 8272생활민원 기동반, 지역특화 프로그램 등이 있다.



케어플랜 서비스는 방문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최초로 동행방문하고 상담을 진행하는 서비스이다. 월 첫째 주 동행방문의 날에 통합욕구조사표를 사용해 개인욕구를 파악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공 서비스로는 기초건강검진, 복약지도, 만성질환관리, 운동처방 등과 공적·민간자원, 통합사례관리 그리고 맞춤형 지역사회 연계(치매안심센터, 구강보건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장기요양시설 등) 등이다.

8272생활민원 기동반은 매주 월, 수, 금에 읍면별 순차방문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저소득계층 및 독거노인 그리고 경로당(마을회관)을 방문한다. 전기, 수도밸브(주방, 욕실) 등 점검 수리 및 교체, 각종(현관, 화장실) 문(미닫이, 여닫이) 손잡이 점검 보수 및 교체, 거동 불편 독거어르신들의 기타 생활 여건 청취 등을 진행한다.

지역특화 프로그램은 보건, 복지, 환경, 교육 등 사회적 과제 해결을 위한 지역특

화 프로그램이다. 1111사회소통기금(사업비, 현물)을 재원으로 행복채움 나눔냉장고, 밥잘짓는 멋진남자 요리교실, 카 쉐어링 하모니Car, 희망나눔 가게 운영, 찾아가는 굿푸드 쉐어링, 생강골 옹달샘, 희망키움 공부방 사업, 이웃이서 주민커뮤니티 공간조성 등을 진행한다.

-이웃과 함께 하는 민간건강지도자 '완주군 마을건강지킴이'가 출동한다

완주군은 2018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건강마을 헬스존 만들기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만성질환, 비만도 등 건강위험도가 높은 마을 26개소에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식습관 및 생활습관, 건강행태 개선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이다.



앞으로도 완주군은 읍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자원봉사자)을 대상으로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담당할 건강지킴이를 양성할 계획이다. 건강지킴이는 마을 건강문제 발굴 및 과제 해결(주민 워크숍, 문제발굴 및 사업방향 제시), 주민 건강 리더 역량강화(단계별 교육 제공, 반기별 정기 보수교육 실시), 지역주민 공동체 건강동아리 운영 지원의 업무를 수행할 것이다.

-으쌰으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심으로 마을복지공동체 활성화 도모

완주군은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마을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특화사업을 개발하기 위해 사업발굴을 위한 읍면별 회의를 개최 하고, 사업심의 및 사업계획 수립 관련 역량강화 컨설팅을 지원하며, 성과보고회 개최 및 우수사례도 공유하고 있다.

앞으로는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마을복지공동체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다. 선진지 벤치마킹 및 공감소통 워크숍, 민·관·학 공동학술세미나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15

주민이 주인공!
우리의 삶을 바꾸는
“온(溫) 동네를 부탁해”

서울시 마포구






주민이 주인되는
공공서비스
주인공

15 주민이 주인공! 우리의 삶을 바꾸는 "온(溫) 동네를 부탁해"

서울시 마포구

추진배경

마포구는 서울시의 중서부에 위치하여 동서로 긴 지형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 1인 가구 비율이 41%에 달하는 특징이 있다. 노인 인구 13.4%, 장애인 3.6%로 서울시 평균의 생활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복지대상자는 전체구민의 18.9%로 주거를 포함한 기본생활안전의 문제와 서비스 접근성 문제, 공동체 해체에 따른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마포구의 복지예산은 전체예산의 50.9%에 이른다. 최근에 행정과 지역사회에서는 일상 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돌봄과 나눔, 공동체 가치 회복 등이 주요한 과제로 부상하였다. 그간의 공급자 중심의 민관협력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이 참여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지속가능한 지역복지가 절실하다 하겠다.

이에 마포구는 지속적인 민관협력과 주민 참여 촉진기반 조성을 통해 복지의 공공성 확대와 주민이 스스로 살피고 돌보는 보건·복지·돌봄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주민이 주도성을 가지고 동 단위 의제를 발굴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하여 복지공동체를 조성하고자 하였다.

추진 경과 및 성과

마포의 복지공동체 '1동 1복지의제'로 날개를 달다

'온(溫) 동네를 부탁해'는 지역특화사업이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으로, 1동 1복지의제 발굴과 실행을 통해 복지공동체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16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추진주체가 되어 지난 2017년 1월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소요 예산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동 보유성금을 활용하였다. 동 협의체에서 우수 프로그램을 공모한 후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선정 심의를 진행했다.

- 동별 구성현황

동 / 명	공덕	아현	도화	용강	대흥	염리	신수	서강	서교	합정	망원1	망원2	연남	성산1	성산2	상암
265	23	16	14	14	21	15	15	17	21	13	17	17	21	13	12	16

- 직종별 구성현황

동 / 명	공무원	경찰관	소방관	교육기관 종사자	종교인	의료인	복지기관 종사자	자영업자	부녀회장	통반장	자원봉사 단체회원	주부	주민자치회 위원	기타
265	17	10	2	21	9	5	37	42	3	31	28	10	18	32

○ 추진절차(사업흐름도)

사업준비 의제발굴	▶	사업신청	▶	심사 및 사업선정	▶	사업추진	▶	사업평가 및 우수사례발표
동 협의체		동 협의체		· 1차 : 심사위원회 (구) · 2차 :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동 협의체		구(복지행정과) 동 협의체

1동 1복지의제 발굴 사업에는 주민참여가 절대적이었다. 행정은 주민의 주도성을 공조하고 보완하는 기능만 수행하였다. 동 협의체 회의에서 복지의제가 발굴되고 복지사업이 선정되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선정된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계획서를 작성하고 사업을 공모하는 사업 신청 단계에까지 주민들이 참여했다. 사업 공모된 사업은 복지협의체에서 구청으로 전달되었다. 이후 사업실행은 선정된 동 복지사업으로 진행되며 사업에 따라 동 협의체뿐만 아니라 자원봉사, 나눔이웃들이 함께 했다. 사업이 마무리 된 후에는 협의체 자체평가 회의와 사업보고서 작성, 환류조치 등이 진행됐다.

전체 과정에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최우선 과제는 동 단위 '복지공동체' 조성으로, 이를 위해 '온동네를 부탁해' 복지공동체 사업을 기획하는 것이었다. 동 특성에 맞는 복지의제는 동별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체회의를 통해 발굴되었다. 협의체 위원들 간 지역복지의제 발굴과 회의 안건에 대해 스스로 참여 하고 추진해 나갔으며 발굴된 의제는 '온동네를 부탁해' 사업으로 실행되었다. 사업 선정 및 평가 시에는 현장전문가 심사를 거쳐 사업내용의 전문성을 높였고, 의제별 실행력을 갖춘 사업이 되도록 개별 컨설팅도 진행하였다. 사업 종료 후에는 사업평가를 통해 활동이 우수한 협의체에 표창을 수여하고, 우수사례를 함께 공유하고 나눔으로써 협의체 상호간 활성화와 주민위원의 자긍심을 높이는 기회가 되었다. 협의체 주체의 복지공동체 사업 수행은 취약계층 발굴과 일상생활지원, 문화체험, 건강지원, 교육, 사회적관계망 형성 등 동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역의제를 실천하였고 각종 자원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마포형 민관협력으로 어려움은 극복하고, 문제는 해결하고!

처음 '온동네를 부탁해'를 실시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역량의 차이가 크다는 점이었다. 동 지역사회협의체(이하 지사협)에 대한 이해와 역할혼재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협력 사업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여, 주민이 주도성을 가지고 사업을 기획, 실행하는데 장애요소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마포구는 동 협의체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민간위원장 연합회를 구성하고, 마포형 민관협력을 활용해 지사협을 지원하였다.

-민간위원장연합회가 동 협의체에 힘을 실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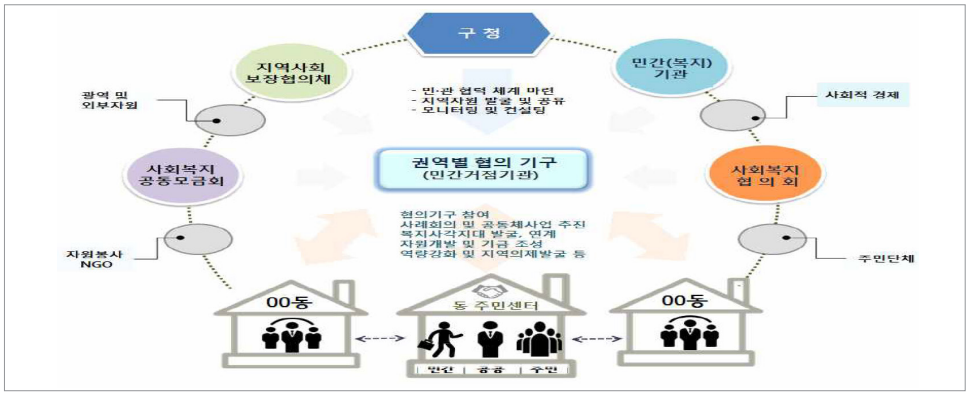
각 동협의체의 공동사업 개발과 협의체 간 정보공유와 역할 조정, 구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와의 사업연계와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각 동 민간위원장으로 구성된 연합회를 구성하였다. 연합회는 수평적인 회의를 통한 노하우 공유 및 컨설팅 제공, 각 동 협의체의 공동 사업개발 및 건의, 역할 조정을 통해 지역적 한계를 벗어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실천 방안으로는 연 6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동별 협의체의 복지시각지대 발굴 방안을 논의하고 복지공동체사업 사례 공유, 협의체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로써 동 협의체 상호간의 주민력이 강화되고,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였다. 또한, 동협의체의 실질적인 주체로서의 주민들의 힘과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졌다.

- 백짓장도 맞들 수 있게! 마포형 민관협력을 활용한 지사협 지원

'마포형 민관협력'이란 동 사례관리, 공동체 사업 등 동 단위 협력구조를 권역 단위의 민·관 네트워크가 지원하는 다층적 협력구조를 말한다.

【마포형 민관협력 체계】



마포구는 2014년 3년간 보건복지부 민관협력 활성화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마포형 민관협력의 모델을 구축하였다. 이는 생활권이 유사한 3-4개동을 묶어 권역단위 협의기구(공공, 민간, 주민)를 구성하는 것으로, 동 단위에서 부족한 소외계층 지원, 사례관리, 자원 발굴·배분, 공동체 회복을 위한 나눔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언제나 모여서 의논합시다! 동 단위 상시적 논의구조 운영

민관협력은 각 동 단위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 지역주민·민간종사자·공무원의 집단지성과 현장 경험 공유로 지역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 환류, 주민에 의한 정책 수립 및 실행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구조를 활용하고 있다.

우선 2018년 마포구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숙의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약 100명의 참가자들이 4개 분야별 발표(조직모형,민관협력,복지생태계,마을계획) 및 동 조직모형과 복지·마을·주민자치 상호 협력방안에 대한 자유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총 2회에 거쳐 마포구 릴레이 복지포럼도 개최하였는데, 총 144명이 '찾·동 시행과 민관협력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2016년 마포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성과와 발전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외에도 자살, 1인 가구, 인권, 지역보호체계 등 다양한 논의로 동 지사협사업과 연계도 논의하였다. 2012년부터 시작된 릴레이 복지포럼은 현재 총19회 진행됐으며 1,637명이 참여하였다.

주민 역량 '동 복지대학'에서 키웠어요

주민의 주도성을 촉진하여 동 단위 주민들의 주체성과 지역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주도의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에 의지와 실행력이 있는 2개 동주민센터(성산1동, 상암동)를 시범사업 주민센터로 선정하였다. 동 지사협과 동 주민센터, 복지기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협약체결)하고 사업 추진을 위해 2개동 협의체 핵심리더교육, 간담회 등을 진행하였다.

핵심 사업은 동 복지대학 기획과 운영이었다. 협의체 위원들이 동 복지대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복지대학 교육설계 시에도 참여주체(민·관·주민)의 논의 구조를 중요하게 다루었다. 실제 동 복지대학에서는 6회 차에 걸쳐 주민조직화의 이해 및 방안, 인권교육, 공동체 활동 등을 강의하였고, 총 55명의 졸업생이 배출되었다. 이들 수료자 중 일부는 다시 동 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되는 등 주민 역량 강화의 선순환 구조가 마련되었다.



16개 동 협의체 공모사업으로 온동네 따뜻해진 마포

각 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업발굴을 위해 수시 회의와 정기 회의를 개최하여 지역특성과 욕구에 기반을 둔 동 특수사업을 개발하고 공모를 추진하였다. 사업개발에 있어서는 반드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한 숙의과정이 포함되도록 하였고 관에서는 주민이 스스로 사업선정과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관은 사업 심의 및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개별 컨설팅 등 행정적 지원을 제공했다. 이로서 2018년 동 협의체 공모사업으로 16개 특화사업이 추진되었고, 7,527만원이 지원되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은둔형 고립가구 지원, 독거노인 정서적 지지, 여가·문화 증진, 주거환경 개선, 저소득층 아동 결식 예방 사업이었다.

주요의제	협의체명	사업명	세부내용	참여주체	예산(천원)
은둔형 고립가구 (청장년, 노인) 사회관례망 형성	대흥동	살맛나는 대흥동 Re-start	·도예교실(3회) ·미술교실(6회) :정서치유 및 관계회복	협의체 위원(2) 및 전문강사(1)	3,673
	서강동	두루모아 싱그러운 서강라이프	·원예수업(8회) : 힐링 및 스트레스 관리	협의체 위원및 봉사자(15)	7,830
	아현동	온 동네를 부탁해 : 소통·공감, 아현동이웃	·과일전달·안부확인 등 이웃살피미활동(월1~2회)	협의체위원(15)	3,530
	염리동	한지붕 염리마을 공동체	·고립가구 요리수업 후 직접 이웃에 요리나눔(3회)	협의체위원(14)	6,861
독거노인 정서적 지지	공덕동	혼자가 아닌 우리, 공덕 희망배달 프로젝트	·야쿠르트 배달(주3회) ·생신축하 이벤트	협의체위원(25)	6,727
	용강동	이 세상에 태어나길 참 잘했다	·생신 챙기기, 사진촬영 등 ·1:1 친구맺기	협의체위원(14)	3,785
	신수동	행복충전과일나눔, 돌봄주스	·과일(월1회)·건강야채 주스 전달(주1회)	협의체위원(15)	4,970
	서교동	"야반도주"	·밑반찬 나눔(월2회) ·야쿠르트 나눔(주3회)	협의체위원(15) 한국야쿠르트	4,611
	망원2동	소원을 이루어 드림(Dream)	·음식·제철과일나눔(3회) ·생신기억하기(4회) 등	협의체위원(15)	3,190
	연남동	건강음료와 영양죽 지원으로 "튼튼백세 건강나눔"	·건강음료지원(주5회) ·영양죽나눔활동(8회)	위원 및 자원봉사(32) 등	4,859
	성산1동	생신떡케익·선물 만들어 함께 축하해요	·생신떡·케익 만들어 전달(10회)	위원·재능기부자·자원봉사자(15명)	3,000

주요의제	협의체명	사업명	세부내용	참여주체	예산(천원)
여가·문화 증진	도화동	더불어 함께 사는 도화동만들기	·행복 동행 영화나들이 (3회)	협의체위원(14)	7,185
	망원1동	열려라 건강, 열려라 사회관계망(노인생활체육)	·노인생활체육 및 치매예방운동(월2회) ·영화관람 등 문화체험(2회)	협의체위원(17) 및 전문강사(2)	3,280
	성산2동	이웃과 함께하는 「우리동네,행복+」사업	·관내 관광명소 탐방(5회) ·힐링 콘서트(1회)	협의체위원(16)	5,000
주거환경개선	합정동	1인 취약계층 주거환경 프로젝트 “힐링하우스”	·전기안전보완, 미끄럼 방지매트 설치, 주거청결지원(25가구)	한강중앙교회 청년봉사단(20)	3,450
저소득층 아동 결식 예방	상암동	저소득가정 아동 요리교실프로그램 : 리틀상암셰프	·요리교실(10회)을 통한 아동 역량 강화	협의체 위원(2) 및 나눔이웃(8)	3,320

마포를 꽃피운 사건 사고, ‘동 협의체 공모사업 우수사례’

-“살맛나는 대흥동 Re-start”

대흥동은 지역 특성상 주거비가 저렴한 다가구주택, 고시원, 무허가건물 등이 다수 위치하고 있어 저소득 계층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 특히 복지대상자 중 1인 가구 비중이 전체의 71%를 차지하고 있어 동 협의체 심의·의결을 통해 1인 가구 지원 사업이 시행되었다.

은둔형 고립가구의 정서치유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해 홀몸어르신 대상 ‘오롯한 손길 도예교실’과 중장년층 대상 ‘나 돌봄 미술교실’이 운영되었다.

외롭게 혼자 사시는 분들이 집 밖으로 나와 즐겁게 활동하고, 활기를 찾는 모습을 보며, 작은 관심과 손길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오롯한 손길 도예교실 참여자는 “어린 시절로 돌아가 소꿉놀이를 하는 기분이 들어 아주 좋았다. 내가 만든 밥상에 식사를 하니 더욱 맛이 좋았다. 처음에는 가길 주저하였는데, 이렇게 참여하니 너무 좋고, 다음에도 이러한 기회가 있다면 참여할 것이다. 이 날이 기다려지고, 정해진 일시에 맞춰 갈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다. 이러한 만남도 인연인데, 동아리를 만들어 지속하고 싶다.”는 소감을 남겼다.



- 합정동의 1인 취약가구 주거환경개선 프로젝트 “힐링 하우스”

합정동 복지통장 및 동 협의체 위원들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활동을 통해 저소득 밀집 주택에 거주하는 1인 취약계층(어르신·장애인)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과제임을 인식하였다. 집안 내 낙상사고 사례가 발생하고 노후 전기시설로 인한 화재위험이 높아 취약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동 협의체와 관내 교회 청년봉사단원 20명이 어르신 및 장애인 25가구를 가가호호 방문하여 전기안전점검 실시 후 노후시설 교체, 욕실 내에 미끄럼방지 매트 설치 등을 하였다. 청소 및 빨래 지원을 통해 취약가구의 주거복지도 지원하였다.

자원 봉사에 나선 청년봉사단은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멀리 있는 대상이 아닌 바로 우리 이웃이었으며, 작은 도움으로 행복해 하는 모습에서 오히려 위안과 나눔에 대한 용기를 얻게 되었다”는 소감을 남겨 주었다.



-상암동, 저소득가정 아동 요리교실 프로그램 “상암 리틀 셰프”

상암동은 타 동에 비해 아동 인구가 월등히 높아 아동복지에 대한 주민 수요가 많다. 제한적인 아동급식카드 지원에서 벗어나 직접 요리법을 배우고 흥미를 돋우는 프로그램을 동 협의체 주도로 기획하였다.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고, 동 협의체 위원 및 나눔이웃(자원봉사자)가 참여하여 총 10회에 걸

쳐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 10명을 대상으로 1:1 요리 수업을 진행하였다.

나눔이웃 봉사자는 “아이가 오늘 배운 요리를 가족에게 해주고 싶다”는 말을 듣고 기특해 하며 마음이 뭉클하기도 하였다는 소감을 전해주었다.



“내 삶이 든든한 복지 마포” 실현을 위해 내일도 달립니다!

마포구는 “더불어 사는 복지 마포”라는 비전 아래 훈훈하고 정이 넘치는 복지공동체를 구현하고자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복지사업을 전개해 왔다. 급변하는 시대적 추세에 맞춰 구민들의 이해와 요구도 시시각각 변화하고 다양해지고 있음을 자각하고 이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획기적이고 종합적인 복지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2018년까지 마포구는 동 복지대학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내 복지리더 발굴 및 주민 역량을 강화하였다. 또한 12월 6일에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전면 시행된 지 900일을 맞이하여, 공무원과 지역주민 200여 명이 참석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우수사례 공유대회’를 개최하여 그간의 성과를 나누었다.

앞으로도 마포구는 동협의체가 실질적 법정기구로서 강한 추진력과 지속성을 가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개동 시범사업을 전 동 협의체로 확대하여 마포구만의 주민주도형 동 지사협 모델을 구축하고자 한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우수사례집

- 발 행 처 | 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추진단
- 발 행 일 | 2019년 4월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13호
- 전 화 | (02)2100-4033
- F A X | (02)2100-4054